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남북관계 2023:한반도 평화의 미래상(5/5년차)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전략 추진방안

KINU 연구총서 23-09

#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

현승수 | 민태은 | 이기태  
이용재 | 김선재

#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한반도 비핵 · 평화 ·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

## 연구책임자

현승수(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민태은(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용재(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선재(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

# KINU

##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

남북관계 2023: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5/5년차)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전략 추진방안

KINU 연구총서 23-09

---

발행일	2023년 12월 30일
저자	현승수, 민태은, 이기태, 이용재, 김선재
발행인	김천식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국제전략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a href="http://www.kinu.or.kr">http://www.kinu.or.kr</a>
기획·디자인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인쇄처	(주)현대아트컴(02-2278-4482)
ISBN	979-11-6589-147-3
가격	11,500원

---

© 통일연구원, 202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한반도 비핵 · 평화 ·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 Contents 차례

요약	9
----	---

## Chapter I

서론	15
----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7
2. 연구 내용 ————— 21

## Chapter II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정책	23
-----------------------	----

1. 인식 ————— 27
2. 정책 ————— 34
3. 대한반도 영향 ————— 59
4. 한국의 대응 ————— 68

*Chapter III*

**인도-태평양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정책 ————— 73**

- 1. 인식 ————— 75
- 2. 정책 ————— 84
- 3. 대한반도 영향 ————— 100
- 4. 한국의 대응 ————— 103

*Chapter IV*

**인도-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 ————— 107**

- 1. 인식 ————— 109
- 2. 정책 ————— 117
- 3. 대한반도 영향 ————— 129
- 4. 한국의 대응 ————— 136

*Chapter V*

**인도-태평양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정책** ————— 141

- 1. 인식 ————— 143
- 2. 정책 ————— 157
- 3. 대한반도 영향 ————— 169
- 4. 한국의 대응 ————— 180

*Chapter VI*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 ————— 187

- 1. 한반도 주변 4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대응 전략) 비교 분석 ————— 189
- 2.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과 추진 경과 ————— 202
- 3.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 ————— 211

**참고문헌** ————— 245

**약어 정리** ————— 254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59



〈표 Ⅳ-1〉 아태운명공동체 구축의 세 가지 원칙과 중국의 역할 ..... 111

〈표 Ⅳ-2〉 쿼드 협력에 대한 중국의 세 가지 입장 ..... 114

〈표 Ⅳ-3〉 오커스의 핵잠수함 협력에 대한 중국의 세 가지 입장 ..... 115

〈표 Ⅳ-4〉 제20차 당대회 보고 중 국제경제 부문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원칙 ..... 116

〈표 Ⅳ-5〉 제14차 브릭스 정상회담 「베이징선언」 주요 내용 ..... 120

〈표 Ⅳ-6〉 「중국의 아태안보협력 정책」 주요 내용 ..... 122

〈표 Ⅳ-7〉 「중국-아세안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 행동계획」 중  
안보 분야 협력 방향 ..... 122

〈표 Ⅳ-8〉 「중국-아세안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 행동계획」 중  
경제 분야 협력 방향 ..... 124

〈표 Ⅳ-9〉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의 주요 주장에 대한 미·중 간 인식 차 ... 126

〈표 Ⅵ-1〉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정책 ..... 189

〈표 Ⅵ-2〉 인도-태평양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정책 ..... 191

〈표 Ⅵ-3〉 인도-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 ..... 193

〈표 Ⅵ-4〉 인도-태평양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정책 ..... 195

〈표 Ⅵ-5〉 한국의 인태 전략 주요 내용 ..... 203

〈표 Ⅵ-6〉 한국과 주요 중남미 국가의 1인당 탄소 배출량 ..... 226

〈표 Ⅵ-7〉 중남미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27

〈표 Ⅵ-8〉 국가별 인구 대비 유엔사무국 자국 인원 진출 ..... 239





##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

본 연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의 인식과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 비핵·평화·번영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중 전략 경쟁 등 국제질서의 역학 관계와 연동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 역시 주변국들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대응 정책과 연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과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국 가운데서 미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의 핵심 추진 국가들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반대하고 대응을 고민한다. 한국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다룬다.

첫째,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가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에 대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인식을 고찰한다. 주변국들의 인도-태평양 지역 인식과 지정학 전략의 특징, 전통적 지리 개념으로서 아시아-태평양과 새로운 지정학 개념으로서 인도-태평양의 차별성, 지정학 개념으로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일·중·러의 인식이 주요 연구 주제이다.

둘째,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러의 대응 정책을 분석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 정치를 강화해 미국 중심 국제질서를 재확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일본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미·일 동맹 강화와 국방력 증강, 대중국 포위망을 확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미국 주도 질서와 미·일의 인태 전략을 자국 견제로 인식하고 일대일로 전략 및 관련국에 대한 회유와 압박 전술로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서방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전략 협력, 반미 국가 결속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셋째,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한반도의 비핵·평화·번영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주변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차별성과 협력 방안, 반(反) 인도-태평양 전략 국가인 중·러와의 협력 가능성과 대응 전략 모색,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협력 방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그리고 경제 안보까지 폭넓게 다룬다.

본 연구는 탈냉전기 국제질서의 대변환기를 맞아 새로운 국제질서의 향배를 예측하며, 동북아 역내 강대국 간 경쟁과 갈등이 초래할 복합위기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한국이 직면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복합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인도-태평양,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 Indo-Pacific Strategy Measures to Achieve the Korean Peninsula's Denuclearization, Peace, and Prosperity

*Hyun, Seungsoo et 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perceptions of and response policies for the Indo-Pacific that the Korean Peninsula's neighboring countries have, and thereby to present measures that would tie what was studied herein with denuclearization,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Considering the ongoing synchronization of the Indo-Pacific with dynamics of global order, notably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Korean Peninsula's situation would move in tandem with its neighbors' Indo-Pacific strategies and response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with an eye to facilitating conditions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s well as the two Koreas' reunification, would be better off starting from identifying neighboring countries' perceptions

of and policies for the Indo-Pacific region.

Among the Korean Peninsula's neighbors, the US and Japan are the main drivers in setting or mapping out the Indo-Pacific strategies and China and Russia, whereas, are against those Indo-Pacific strategies and figuring out their responses. Korea can fall into the former group. This study examines the three key subjects as below:

First, examining geopolitical perception that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 have on the Indo-Pacific region. The major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 these neighboring countries' perceptions of the Indo-Pacific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geopolitical strategies that the countries have on the reg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Asia-Pacific understood with traditional geographical concepts and the Asia-Pacific understood with unconventional geopolitical concepts; and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s perceptions of the Indo-Pacific as one of geopolitical concepts.

Second, delving into the Indo-Pacific strategies that the US and Japan have and the response policies that China and Russia have. The US has an intention of leveraging the Indo-Pacific strategies to keep China in check and cementing alliance politics as part of efforts to rebuild the US-led world order. Japan conceives leveraging the Indo-Pacific strategies also to strengthen the US-Japan alliance, achieve its defense buildup, and secure a solid net to contain China. On the contrary, China, from its perception that the US-led world

order and the Indo-Pacific strategies of Washington and Tokyo are intended to check China, responds with the One Belt and One Road, along with conciliation-and-pressure strategies. Russia, amid deteriorating relationship with the US and the West caused by the Ukraine War, plans to respond to the Indo-Pacific strategies by strategic cooperation with China and bond with nations with anti-Americanism.

Third, specifying Korea's Indo-Pacific strategies and proposing how to connect those strategies with denuclearization,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encompasses a wide range of subjects including: difference of Korea's Indo-Pacific strategies from those of Korea's neighboring countries and cooperation measures;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China and Russia, namely, countries against the Indo-Pacific strategies and also Korea's response strategies targeted at China and Russia; Korea-US-Japan cooperation measures as a response to North Korea's provocation; cooperation with Global South; and economic security.

This study aims to predict a new global order's future directions upon the post-cold war major shift in a world order and to present multi-faceted response strategies that would help respond to multiple risks that Korea would face by correctly identifying how multicrisis led by competition and conflict among powers in Northeast Asia would be unfolded.

**Keyword:** the Indo-Pacific, the US, China, Japan, Russia





---

# I. 서론

---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서론

---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미·중 경쟁이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인도-태평양’ 개념 및 관련 지역 전략이 글로벌 외교·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개념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계하는 지정학 개념으로서 기존 아시아-태평양 개념을 대체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개념의 보편화를 촉발한 것은 중국의 공세적 대외 정책이다. 확장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2017년 말부터 인도-태평양을 공식적인 전략 개념으로 채택했다. 일본과 호주 역시 인도-태평양 개념을 외교 전략에 본격적으로 반영했으며, 이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국가들이 안보와 경제 중심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미·중 경쟁이 인도-태평양 역내 각국의 전략으로 구체화되자 중국은 물론 중국과 연대한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일본과 호주, 인도 및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국가들을 견인해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구체적 모습을

드러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2월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시기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동 보고서는 중국이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수정하려 한다고 평가하고, 중국의 ‘강압과 침략 (coercion and aggression)’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법과 항해의 자유 그리고 인권과 같은 규칙과 규범의 준수를 강조한다. 그러나 국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안보와 경제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추진될 전망이어서 미·중 간 갈등과 협력이 공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국내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제적으로 동맹 관계를 복원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목표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한국도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한국형 인도-태평양 구상을 내놓았다.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21세기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아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sup>1/</sup> 동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아래에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중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

1/ 대한민국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2022. 12. <[https://www.mofa.go.kr/www/wpge/m\\_25838/contents.do](https://www.mofa.go.kr/www/wpge/m_25838/contents.do)> (검색일: 2023.1.2.).

해와 교류 증진,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국제 경제 및 안보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하여 국제사회와 연대 및 협력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한국의 신장된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반영해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 역할과 기여의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독트린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선진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국력에 상응해 기존 한반도·동북아의 범주를 넘는 지역 협력 및 분야별 협력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역외교 전략이다. 둘째, 보편적 가치와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가치외교 전략이다. 셋째,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제고하는 기여외교 전략이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도 안고 있다. 첫째, 중국 리스크(risk), 즉 한·중 관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최대 도전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전략의 첫 번째 원칙으로 포용을 제시함으로써 특정국을 겨냥하거나 배제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필요한 주요 협력국으로 규정하고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할 것임도 명기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규칙 기반 질서와 자유,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국 외교가 미국에 경사되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다분하다.

둘째, 한국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상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미·일 간 정책 조율이 필수적이다. 특히 역내 경제 협력

및 지역 안보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미국과 조율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간 협력을 이끌 기구나 협의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가운데 한·미가 안정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사례처럼 한·미 간 이익 공유를 확보하는 문제들도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한·일 간 영토·역사 갈등을 조율하며 한·미·일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미·중 전략 경쟁 심화는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실현하는 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은 부정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이는 동 전략의 중·장기적인 과제로 작용할 것이다. 북핵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더욱이 한·미·일 대 중·러·북의 진영화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기한 ‘담대한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관리 및 국제적 여건 조성이 긴요하다.

본 연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의 인식과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 비핵·평화·번영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중 전략 경쟁 등 국제질서의 역학 관계와 연동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 역시 주변국들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대응 정책과 연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과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실 인도-태평양은 개념상 태평양과 인도양을 아우르는 광대한

지역의 역내 국가들을 포괄한다. 특히 그동안 국제질서 변화의 중심에서 비켜 서 있던 아세안(ASEAN) 국가들과 태평양 역내 도서 국가들, 인도 등이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된다. 따라서 인도-태평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들 국가가 갖고 있는 세계 인식, 외교 지향, 국가 전략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축으로 두고 4강의 인식과 정책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범지구적 차원에서 본격화한 인도-태평양 연구의 파일럿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

## 2. 연구 내용

한반도 주변국 가운데서 미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의 핵심 추진 국가들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반대하고 대응을 고민한다. 한국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다룬다.

첫째,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가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에 대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인식을 고찰한다. 주변국들의 인도-태평양 지역 인식과 지정학 전략의 특징, 전통적 지리 개념으로서 아시아-태평양과 새로운 지정학 개념으로서 인도-태평양의 차별성, 지정학 개념으로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일·중·러의 인식이 주요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둘째,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러의 대응 정책을 분석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 정치를

강화해 미국 중심 국제질서를 재확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일본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미·일 동맹 강화와 국방력 증강, 대 중국 포위망을 확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미국 주도 질서와 미·일의 인태 전략을 자국 견제로 인식하고 일대일로 전략 및 관련국에 대한 회유와 압박 전술로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서방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전략 협력, 반미 국가 결속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셋째,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한반도의 비핵·평화·번영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주변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차별성과 협력 방안, 반(反)인도-태평양 전략 국가인 중·러와의 협력 가능성과 대응 전략 모색,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협력 방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그리고 경제 안보까지 폭넓게 다룬다.

본 연구는 탈냉전기 국제질서의 대변환기를 맞아 새로운 국제질서의 향배를 예측하며, 동북아 역내 강대국 간 경쟁과 갈등이 초래할 복합위기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한국이 직면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복합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 II.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정책

---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정책

최근 미국은 인도-태평양(Indo-Pacific)을 글로벌 핵심 전략지로 삼고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2019년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인도-태평양을 미 안보와 번영의 최우선 핵심<sup>2/</sup> 전략지로 규정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sup>3/</sup> 그리고 2021년 3월 첫 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2022년 5월에는 인도, 일본, 호주와 함께 인태지역의 나토라 불리는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4자 안보대화: Quad)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했다.<sup>4/</sup> 또한 같은 해 5월에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를 공식 출범시키고 여러 차례 특별협상과 실무진 회담을 가지며 인태지역의 경제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sup>5/</sup> 2023년 3월에는 미국 샌디에이고(San Diego)에

2/ 2019년 보고서는 ‘a top priority’, 2022 보고서는 ‘vital’이라는 표현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표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 US Department of Sta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November 4, 2019, p. 4,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19/11/Free-and-Open-Indo-Pacific-4Nov2019.pdf>> (Accessed March 15, 2023); The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2022, p. 4,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2/U.S.-Indo-Pacific-Strategy.pdf>> (Accessed March 15, 2023).

3/ 이하 인도-태평양은 맥락에 따라 인도-태평양 혹은 인태로 표기한다.

4/ 쿼드 장관급 회의는 2019년부터 2023년 3월까지 6차례 개최되었다.

5/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의 창설 및 협상 진행 과정은 다음을 참조: KOTRA, “IPEF 3월 2차 실무회의 전 IPEF 진행 동향 및 현지 반응,” 2023년 3월 13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

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인태지역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협의체)의 첫 대면 회의를 개최했다.

인태지역을 겨냥한 미국의 이러한 전략 집중에 발맞춰 호주, 캐나다, 일본, 인도 등도 관련 구상 및 전략을 내놓고 있다. 인태지역에 위치한 이들 국가 외에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도 관련 구상과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도 2022년 12월에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인태 전략을 발표하고 역내를 넘어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 모색에 나섰다.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이 인태지역을 겨냥한 다양한 전략과 구상을 발표하면서 대외정책과 외교 현장에서 ‘인도-태평양’ 혹은 ‘인태’라는 용어가 점차 널리 쓰이게 되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혹은 ‘인태’라는 용어가 글로벌 전략 지도에서 가시성을 갖게 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인태’라는 말이 전략 담론에 빈번히 쓰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인태지역의 중요성을 재해석하게 된 것일까? 그리고 그 재해석의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본 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관련 전략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절에서는 미국이 바라보는 ‘인도-태평양’을 이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미국이 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2절은 미국 대외정책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인도-태평양 정책이 태동한 오바마(Barack Obama, 2009~2017) 정부,

---

do?MENU\_ID=70&pNttSn=200699) (검색일: 2023. 3. 30.).

인도-태평양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트럼프 정부, 그리고 후임 바이든 정부의 인태 전략의 특징을 분석한다. 3절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의 인태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 1. 인식

지역으로서 인태에 대한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이해는 매우 유사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보다 넓은 지리적 인식을 보인다. 트럼프 정부에서 발표된 「2017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7: NSS 2017)」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태평양을 미국의 서부 해안에서 인도의 서해까지로 이해하고 있다.<sup>6/</sup> 그리고 해당 지역 국가로 동북아에 위치한 일본, 한국, 북한과 더불어 아세안 국가인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한편 후임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을 태평양 해안에서 인도양까지로 정의한다. 인도양이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 해안까지 닿아있다는 점에서 지역적으로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인태지역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군도(Pacific Islands)를 포함한 오세아니아 지역에 집중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된 인식이 그대로 이어진다

6/ 「2017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인태지역을 정의하고 있다: “the region(Indo-pacific) which stretches from west coast of India to the western shores of the united states,” 보고서 전문은 다음을 참조: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December 2017,” pp. 45~46,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Accessed April 25, 2023).

고 할 수 있다.<sup>7/</sup> 하지만 최근에야 국제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인도-태평양’은 여전히 지역적 경계가 모호하고 합의된 이해도 없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인태 지역에 인도와 태평양 지역 전역을 포괄하면서도 미국 서해안은 포함하지 않는다.<sup>8/</sup> 이러한 차이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가 각국의 주관적인 전략적 판단을 투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지역명을 사용한 전략용어의 발전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가. 인도-태평양의 기원

다른 지역과 구별 짓는 방편으로써 사용되는 지역의 개념에는 지리적 요인이 필수 불가결하다. 하지만 지역의 개념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간 활동’의 공간적 그리고 시간적 의미도 반영한다.<sup>9/</sup> 따라서 경계가 명확한 특정 공간 내 거주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단위가 국가(state)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개념에는 해당지역 국가들의 인간 활동, 그로 인한 이해 및 가치 관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국가가 자신의 주권보다 더 큰 지역에 자신의 운명을 연계시키는 것은 자국이 속한 지역을 다른 지역과 구별해 인식하는

---

7/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region, stretching from our Pacific coastline to the Indian Ocean, is home to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people.” 전문은 다음을 확인: The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2022, pp. 4~5,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2/U.S.-Indo-Pacific-Strategy.pdf>> (Accessed February 2, 2023).

8/ France Ministry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 “France’s Indo-Pacific Strategy,” February 2022, <[https://www.diplomatie.gouv.fr/IMG/pdf/en\\_dcp\\_a4\\_indopacifique\\_022022\\_v1-4\\_web\\_cle878143.pdf](https://www.diplomatie.gouv.fr/IMG/pdf/en_dcp_a4_indopacifique_022022_v1-4_web_cle878143.pdf)> (Accessed May 1, 2023).

9/ Hansong Li, “The “Indo-pacific”: Intellectual Origins and International Visions in Global Context,” *Modern Intellectual History*, vol. 19 (2022), pp. 807~833.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유도는 지역의 헤게모니, 즉 패권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다.<sup>10/</sup> 미국의 서해안 건너편을 부르는 용어가 ‘아시아’,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인도-태평양’으로 변화해 온 과정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한다.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미국이 독립한 18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 18세기 말 7여 년에 걸친 독립전쟁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미국은 영국이라는 큰 시장을 대체할 곳이 필요했다. 당시 많은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했다.<sup>11/</sup> 그런데 아시아 진출 초기 미국은 교역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선교와 문화교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관심은 안보 및 경제 분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영향력 확대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이 있었다. 먼저 일본이 서구 열강과 함께 제1차 세계 대전의 승리를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팽창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자 미국뿐 아니라 유럽 국가는 일본과 중국이 위치하는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아시아’가 ‘아시아-태평양’으로 불리는 변화를 낳았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을 전후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언급에서 태평양(Pacific)을 함께 언급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태평양 지역(the Pacific)’이라는 개념은 19세기를 전후해 미국과 유럽이 세계시장을 개척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지역 명칭이다. 이 용어가 사용되던 초기에 태평양 지역이라

10/ Arif Dirlik, “The Asia-Pacific Idea: Reality and Representation in the Invention of a Regional Structure,” *Journal of World History*, vol. 3, no. 1 (1992), p. 74. 더릭은 아시아가 아시아-태평양으로 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패권 국가로 미국과 일본을 지목했다.

11/ Robert G. Sutter, *The United States in Asia*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9), pp. 5~7.

할 때는 남미도 포함되었다. 태평양을 따라 그 주변에 위치한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시아’라는 용어와 연동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태평양’ 개념이 아니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 대전을 전후로 ‘아시아’보다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 이렇듯 아시아가 개념적으로 확대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195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간 냉전으로 소련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연대로서 태평양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소련을 봉쇄하고 공산주의를 저지하는 데 소련과 인접한 일본, 한국, 타이완, 필리핀 등 태평양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들 국가와 군사 및 전략 관계 강화에 나서면서 미국이 이 지역을 통합된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점차 커졌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국이 세계 경제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미국은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아시아 국가로 태평양 가장자리(Pacific-Rims)에 위치한 일본의 경제성장이 서방의 이목을 끌었다. 그리고 뒤이은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게다가 같은 기간 미국이 자유주의 시장 질서에 기반해 세계 경제에서 압도적 주도권을 가지면서 태평양 주변의 아시아 국가는 미국의 시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sup>12/</sup> 그러자 미국은 유럽 국가와 함께 이들 지역을 아시아-태평양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 다른 지역과 본격적으로 대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시아-

---

<sup>12/</sup> Robert D. Schulzinger, *U.S. Diplomacy Since 190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249~277.



태평양은 지역 전략용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요약하면 아시아가 아시아-태평양으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이 인도-태평양으로 불리며 국제사회에서 정치·외교·경제적 함의를 가지는 지역 전략 용어로 이해되어 간 과정에는 패권국인 미국이 해당 지역을 중요하게 바라보게 된 인식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냉전이 종식되기까지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유럽과 중동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선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확장세가 아시아보다 동유럽에서 두드러졌다. 그 결과 미국의 지역 전략은 소련과 동유럽 공산 진영에 맞서기 위해서 나토를 중심으로 유럽에 보다 집중되었다. 또한 유럽은 당시 미국의 가장 큰 시장이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소련, 중국 등과 접경지이며 산유국이 모여 있던 중동 역시 미국의 경제와 안보의 전략지였다.<sup>13/</sup>

그런데 냉전의 종식과 함께 중국의 전방위적 부상으로 미국의 관심은 아시아로 쏠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관심은 ‘아시아-태평양’이 ‘인도-태평양’으로 대체되는 변화를 낳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와 태평양을 하나로 묶은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가 ‘아시아’를 대체한 것은 지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지역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한 것이었다.<sup>14/</sup> 마찬가지로 최근 ‘인도-태평양’이 해당 지역을 통칭하는 지역 및 전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현 상황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3/ Robert G. Sutter, *The United States in Asia*, pp. 14~22.

14/ Arif Dirlik, “The Asia-Pacific Idea: Reality and Representation in the Invention of a Regional Structure,” p. 74; Jose P. Leviste Jr., ed., *the Pacific Lake: Philippine Perspectives on a Pacific community* (Manila: The Philippine Council for Foreign Relations, 1986), p. 2.

## 나. 인도-태평양의 등장과 발전

‘인도-태평양’이 미국의 공식 문건에 전략지명으로 나타난 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발간된 「2017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부터다. 2017년 무렵까지도 인태라는 개념이 미국의 전략 인식에서 분명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후에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인도-태평양’에 관심을 갖고 그 개념도 불확실한 ‘인도-태평양’ 앞에 ‘자유롭고 열린(*free and open*)’이라는 인태의 정체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중국이 경제적 부상을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어지럽혀 미국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위기감과 중국에 대한 견제가 있었다.

그런데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명은 최근에 등장한 신조어가 아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는 독일 지리학자 칼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 1869-1946)가 1920년대에 ‘만든’ 용어다. 당시 인도와 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지던 영국과 미국 주도의 식민지 정책에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던 하우스호퍼는 조국 독일을 위해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통해 탈식민지 담론을 만들고자 했다.<sup>15/</sup> 그는 인도와 대서양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 ‘인도-대서양’은 지극히 유럽-미국 중심의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물지리학, 역사, 그리고 삶의 방식에서 더 유사한 인도와 태평양 지역이 서로 다른 지역으로 구별되고 대신 인도-대서양(*Indo-atlantic*) 지역이 하나로 묶이게 된 이유가 인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전략적 야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sup>16/</sup> 즉 ‘인도-대서양’은 단순히 지리적 의미라기보다 해당 지역과 관련된 나라들의 지정학적 이익을 상징하

15/ Hansong Li, “The “Indo-pacific”: Intellectual Origins and International Visions in Global Context,” pp. 807~833.

16/ *ibid.*, p. 811.

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하우스호퍼의 비판 뒤에는 인도-대서양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지에서 독일이 영향력을 갖기를 바라는 기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독일 지리학자의 미국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만들어진 신조어 ‘인도-태평양’이 훗날 미국에 의해 미국전략의 핵심어가 된 것은 매우 흥미롭다.

하우스호퍼의 인도-대서양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여하는 나라 각각의 관점에 따라 지리적 이해와 해당 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제 막 그 의미를 형성해가는 인태 지역의 물리적 규정은 이 지역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의 인태 지역에 대한 지리적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미국의 인태 전략과 한국의 인태 지역에서 보이는 실행방안이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국제사회가 인태 지역을 핵심 전략지로 인식해 가는 데에는 중국의 급부상이 있다는 점은 같다. 그리고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가 널리 퍼져가는 과정은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군사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아시아’를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가 대체했던 1970~80년대의 변화와 유사하다.

요약하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무대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가 ‘아시아-태평양’을 대체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의 대외정책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데에는 미국이 해당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인태 지역에 대한 재해석은 중국에 대한 기대와 인식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미국은 부시(George W. Bush, 2001~2009) 정부 그리고 오바마 정부를 거치며 중국이 자유시장에 편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는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경제력 부상을 이용해 국제질서를 재편해 미국을 위협한다고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인태 지역에 집중하게 된다.

---

## 2. 정책

최근 미국의 핵심 대외정책으로 일컬어지는 인태 전략은 이 용어에서도 드러나듯이 인도를 분명히 명기함으로써 전략적 관심을 인도양으로 확장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인태 지역의 정의에 ‘인도양’이라고 다소 포괄적 개념을 사용한 것도 인도가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서 미국을 도와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에는 미국이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양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를 포함해 아프리카에서까지 주도적 영향력을 갖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2022년 12월,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리카 49개국이 참여하는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 AU)’과의 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에 올인(all in)하겠다고 밝힌 것도<sup>17/</sup> 이러한 인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태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미국 전략문서에 포함된 것은 트럼프 정부부터다. 하지만 인도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전략 중심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부시 정부(George W. Bush)로 거슬러 올라간다.<sup>18/</sup> 부시 정부 시절인

---

<sup>17/</sup>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at the U.S.-Africa Summit Leaders Session on Partnering on the African Union’s Agenda 2063,” December 15, 202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2/12/15/remarks-by-president-biden-at-the-u-s-africa-summit-leaders-session-on-partnering-on-the-african-unions-agenda-2063/>> (Accessed April 15, 2023).

2007년 일본 총리 아베는 인도 의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개념이 인도를 담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해당 지역에서 인도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sup>19/</sup> 그리고 이 연설은 인도를 미국의 전략지도 중앙으로 끌어들이는 계기로 언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2004년 부시 정부는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같은 글로벌 사안을 시의적절하게 논의할 협의체로, 쿼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인도, 호주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4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상을 제안했다. 즉 아베 총리의 인도 의회 연설 이전부터 부시 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와의 협력 강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도와 협력을 추진하고자 했던 부시 정부의 일명 쿼드 1.0(Quad 1.0)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제안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구상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던 인도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인도로서는 목적이나 구체성이 결여된 쿼드 1.0 구상에 참여하는 것이 가져올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 데다, 역할도 불분명했다. 사실 부시 정부도 인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쿼드를 구성할 인도, 호주, 그리고 일본을 한 국가씩 나열해 언급한 사실에서도 나타나듯이 지금과 같이 네 나라를 하나의 범주로 묶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 또한 당시 호주 총리 케빈 루드(Kevin Rudd)의 친중 성향도 한몫했다. 미국이 소위 이 쿼드 1.0을 구성하려 하자 중국이 견제행

18/ Lindsey Ford,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May 2020, *Foreign Policy at Brookings*, p. 2,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20/05/fp\\_20200505\\_free\\_open\\_indo\\_pacific.pdf](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20/05/fp_20200505_free_open_indo_pacific.pdf)> (Accessed May 30, 2023).

19/ 아베 총리의 해당 연설 "Confluence of the Two Seas"의 원문은 다음을 참조: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Confluence of the Two Seas," August 22, 2007, <<https://www.mofa.go.jp/region/asia-paci/pmv0708/speech-2.html>> (Accessed March 7, 2023).

위라며 반발했고 중국 외교관을 지낸 루드 총리가 이 구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sup>20/</sup>

또한 이란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지지가 필요했던 미국은 중국이 반대하는 협의체를 추진하기에 부담이 컸다.<sup>21/</sup> 특히 중국이 국제질서에 편입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부시 정부는 여타 국제문제 해결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인도를 포함해 해당 지역을 전략화한다는 인식이 약했다. 결국 쿼드 1.0의 구체성 결여와 참가국들의 서로 다른 전략적 판단으로 인도를 미국의 전략지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오바마 정부부터 미국은 아시아 지역 전반에서 미국의 이익과 미래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태 전략이 잉태된 것으로 평가받는 오바마 정부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인태 전략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본다.

## 가. 오바마 정부 (Barack Obama, 2009~2017)

오바마 정부에서 ‘인태’라는 지역 개념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으로 잘 알려진 ‘아시아로 회귀(Pivot to Asia)’ 그리고 이후 ‘재균형 전략(Strategic Rebalance to Asia Pacific)’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외교안보 결정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용어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오바마 정부 시기에도 하나의 국가전략

---

20/ 루드 총리의 친중성향 외에 쿼드 1.0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다른 분석은 다음을 참조: Daniel Flitton, “Who Really Killed Quad 1.0?” *Lowy Institute*, June 2, 2020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or/who-really-killed-quad-10>>

21/ 민태은·박동준,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22), pp. 89~90.

으로서 구체화된 인태 전략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은 인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과 불가분의 관계(inextricably linked)가 있다고 보고 해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했다. 그리고 환태평양국가뿐 아니라 인도와 다각적 협력을 시도하며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경계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2015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아시아-태평양 및 인도-태평양 공동 전략비전(US Joint Strategic Vision for the Asian-Pacific and Indian Ocean Region)’ 합의를 통해 양국이 역내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안정(stability)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2016년에는 30여 년 만에 미 해군함정을 뉴질랜드로 보냈다.<sup>22/</sup> 이후 오바마 정부의 해당 지역에 대한 몇몇 전략 방안은 현재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최근 바이든 정부가 인태 지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함(對艦) 능력 증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바마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다.<sup>23/</sup>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이 인도양까지 확장된 데에는 본격화된 중국의 부상이 크게 작용했다. 전임 부시 정부에 비해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도전이 된다고 인식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예산을 삭감하던 시기에 공군력 향상 등을 이유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국방예

22/ The White House, “U.S.-India Joint Strategic Vision for the Asia-Pacific and Indian Ocean Region,” January 25, 2015,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5/01/25/us-india-joint-strategic-vision-asia-pacific-and-indian-ocean-region>> (Accessed May 1, 2023).

23/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Terrence K. Kelly, Anthony Atler, Todd Nichols and Lloyd Thrall, “Technical Report: Employing Land-Based Anti-Ship Missiles in the Western Pacific,” *Rand Corporations*, 2013 <[https://www.rand.org/pubs/technical\\_reports/TR1321.html](https://www.rand.org/pubs/technical_reports/TR1321.html)> 및 <[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technical\\_reports/TR1300/TR1321/RAND\\_TR1321.pdf](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technical_reports/TR1300/TR1321/RAND_TR1321.pdf)>

산은 줄이지 않았다.<sup>24/</sup> 또한 2011년에 이어 2015년에는 타이완에 18억 3천만 달러(약 2조 원) 가량의 무기를 판매했다. 호주에 미 해병대를 순환 배치하고, 태국 및 인도와의 군사훈련도 강화했다. 특히 인도와는 10년에 걸쳐 해양 안보와 공동군사 훈련을 중심으로 한 양국 협력을 통해 국방력을 증진한다는 ‘방위프레임워크협약(Defense Framework Agreement, 2015)’을 체결했다.<sup>25/</sup> 이 협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 변화에 맞추어 2012년에 양국 사이에 체결된 ‘2012 Defense Trade and Technology Initiative(DTTI)’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마련되었다. 그런데 당시 이 지역의 안보 지형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중국의 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그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오바마 정부는 경제면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해 긴장했다. 특히 오바마 정부의 이러한 긴장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제외한 경제 네트워크 구축 시도다. 구체적으로 오바마 정부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페루, 멕시코, 베트남을 포함한 12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추구했다. 또 다른 예로 ‘아시아로 회귀’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된 ‘Indo-Pacific Economic Corridor(IPEC)’도 중국을 견제하면서 해당 지역 국가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구상이었다.<sup>26/</sup>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와 태양광 패널 등에 부과하는

24/ Gopal Ratnam and Kate Brannen, “Against Other Threats, Obama’s Security Budget Sticks to Asia-Pacific Pivot,” *Foreign Affairs*, February 2, 2015, <<https://foreignpolicy.com/2015/02/02/793982budget-asia-pacific-syria-iraq-russia-ukraine/>> (Accessed March 7, 2023).

25/ “India, US Ink New Defense Framework Accord,” *The Economic Times*, June 3, 2015 (Last updated: Jul 11, 2018),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defence/india-us-ink-new-defence-framework-accord/articleshow/47532025.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defence/india-us-ink-new-defence-framework-accord/articleshow/47532025.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 (Accessed April 30, 2023).



관세를 강화하여 중국과의 무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대인도 전략을 포함한 아시아 전략은 미국의 현(現) 인태 전략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오바마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쟁보다 협력에 방점을 두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큰 전략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전략은 소극적이었다. 오바마 정부의 이러한 소극성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편입할 것이라는 오바마 정부의 기대였다. 즉 중국을 ‘수정주의자’가 아닌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편입 가능한 협력대상으로 인식했다.<sup>27/</sup>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컸던 오바마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협력에 거는 기대가 높았다. 예를 들어 2009년 교토의정서(the Kyoto Protocol)를 대신할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정(The Copenhagen Accord)을 중국과 체결하려 한 것은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 2기였던 2013년에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발표했을 때<sup>28/</sup> 오바마 정부의 반응도 미국의 이러한 기대를 매우 잘 보여준다. 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에 걸쳐 무

26/ Felix Heiduk and Gudrun Wacker, “From Asia-Pacific to Indo-Pacific: Significance, Implementation and Challenges,” *SWP Research Paper 9* (July 2020),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p. 11, <[https://www.swp-berlin.org/publications/products/research\\_papers/2020RP09\\_IndoPacific.pdf](https://www.swp-berlin.org/publications/products/research_papers/2020RP09_IndoPacific.pdf)>

27/ 민태은·박동준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pp. 91~98.

28/ Andrew Chatzky and James McBride, “China’s Massive Belt and Road Initiative,” *Washington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May 21, 2019, <<https://www.wita.org/atp-research/chinas-massive-belt-and-road-initiative-2/>> (Accessed April 13, 2023).

역, 투자,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중국의 글로벌 이니셔티브(initiative)인 ‘일대일로’에 대해 오바마 정부는 중국이 시장 질서와 국제규범에 따라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sup>29/</sup> 이렇듯 오바마 정부는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편입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환경과 기후문제와 같은 국제적 사안에 중국과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강조했다. 즉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의 위상과 역내 역학 관계 변화를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무역 자유화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을 바라본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오바마 정부가 중국과의 협력을 시도하며 아시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로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초래된 국내 경기 악화와 더불어 당면한 대외정책 과제를 들 수 있다. 당시 오바마 정부는 전통적으로 대외정책의 핵심 전략지인 중동과 동유럽에서 각각 이란 핵 그리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같이 개입이 불가피한 사안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로 집중하는 것을 망설이게 했다. ‘아시아로 회귀’라는 전략 명칭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아시아만 강조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그 명칭을 ‘재균형 전략’으로 변경한 것에도 이러한 미국의 부담감이 잘 나타난다. 당시 오바마 정부가 글로벌 문제 해결에 다자주의를 강조한 이유도 부담을 나누어 지고자 한 소극적 개입주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30/</sup>

이러한 이유로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오바마 정

---

2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hina’s “One Belt, One Road”,” August 6, 2015, p. 2,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0273>> (Accessed April 13, 2023).

30/ 서보혁 외,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 p. 96.

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과 관련한 미국 내 이견을 설득하는 데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 사이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을 설립했다. 북핵 문제에도 6자회담과 같은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고수하며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바탕으로 현상 유지에 치중했다. 결과적으로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로 회귀’와 이후 ‘재균형 전략’은 인도와의 협력 추진,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등 현 미국의 인태 전략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을 글로벌 요충지로 전략화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 나. 트럼프 정부 (Donald Trump, 2017~2021)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미국의 이익을 구체화하는 전략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출발했다. 2016년 대선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가 중국뿐 아니라 한국 및 일본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와의 무역에 지나치게 관대한 반면 중국과 북한의 군사 위협을 저지하지 못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출범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부상을 미국 패권(hegemony)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대아시아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전략’이다.

트럼프 정부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와 정책 방향은 「2017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와 「2018년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2018)」를 비롯해 2019년 국방부가 펴낸 「인도-태평양 전략서: 준비, 동반자 관계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 추진(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2019)」, 그리

고 같은 해 국무부가 발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공동비전 추진(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에 잘 나타나 있다.<sup>31/</sup> 트럼프 정부의 인태 전략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이들 보고서는 인태 지역을 미국 안보와 번영의 핵심 지역으로 못 박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 전략서는 중국을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이며, 부상하는 경제력 및 군사력을 이용해 인태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수정주의자라고 규정한다.<sup>32/</sup>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국을 봉쇄하고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확보하는 것을 인태 전략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인태 전략을 종합했다 할 수 있는 2019년 인도-태평양 전략서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공동비전의 추진」을 보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 공유, 우방 및 지역 기구에 관여, 경제번영 증진, 좋은 거버넌스 지지, 평화와 안보 확충, 인적 자원 투자가 핵심과제

---

31/ 「2017년 국가안보전략서(NSS, 2017)」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미국의 공식 국가문서로 알려져 있다.

32/ U.S.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rpen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 p. 4, <<https://dod.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2018-National-Defense-Strategy-Summary.pdf>> (Accessed April 25, 2023);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December 2017,” p. 35,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Accessed April 25, 2023);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ic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2019,” June 1, 2019, p. 7, <<https://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 (Accessed April 25, 2023); The U.S. Department of Sta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s,” November 4, 2019,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19/11/Free-and-Open-Indo-Pacific-4Nov2019.pdf>> (Accessed March 14, 2023).

로 제시되고 있다.<sup>33/</sup> 그리고 이러한 핵심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주권, 공정한 상호무역, 그리고 법치를 존중하는 지역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한다.<sup>34/</sup>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및 무력 해상 시위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장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본 트럼프 정부는 인태 지역 국가들과의 공정한 무역 추진 및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경제에 대한 투자 증진을 구체적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전략서와 이후 전략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정부의 인태 전략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인태 전략의 첫 번째 특징은 중국 견제 강화를 통한 글로벌 무대에서 미·중 경쟁의 본격화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인태 전략이 추구하는 비전은 어떤 나라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권위주의 국가와의 경쟁은 분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sup>35/</sup>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고위 관료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 행위, 국제규범 및 자유무역 질서 위반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공식 석상에서 자주 드러냈다.<sup>36/</sup> 미국은 공식 전략서나

33/ 이들 과제와 관련된 원문표현은 다음과 같다. “A Shared Vision”, “Engaging Partners and Regional Institutions”, “Enhancing Economic Prosperity”, “Championing Good Governance”, “Ensuring Peace and Security”, “Investing In Human Capital”; 원문은 다음을 참조: The U.S. Department of Sta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s,” November 4, 2019,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19/11/Free-and-Open-Indo-Pacific-4Nov2019.pdf>> (Accessed March 14, 2023).

34/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December 2017,” pp. 45~46,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017/12/NSS-Final-12-18-2017-0905.pdf>> (Accessed April 25, 2023).

35/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s,” November 4, 2019, pp. 5~6.

36/ 2018년에 마이크 펜스(M. Pence) 당시 부통령은 중국의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남중국해 관련 공격적 행위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연이어 당시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또한 베이징 정부의 국제질서나 규범 위반이 미국 대외정책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음. 관련 내용은

공개 석상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를 넘어 수정주의, 심지어 간접적이지만 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sup>37/</sup>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에 ‘자유롭고 열린’이라는 수사를 보태어 인태 전략의 정체성에 가치를 강조한 것은 그렇지 못한 중국을 겨냥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를 피력하면서 2019년 국방부가 발표한 인태 전략서에 타이완을 국가로 표기해 중국을 자극하기도 했다.<sup>38/</sup>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인태 전략의 특징으로 인해 중국 역시 본격적으로 미국의 인태 전략을 중국에 대한 적대 정책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실 ‘자유롭고 열린’ 태평양이라는 전략 개념은 일본의 외교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케냐에서 열린 제6차 아프리카개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6<sup>th</sup> TICAD))에서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가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한 후 미국의 전략 논의에 들어왔다.<sup>39/</sup> 이후 2017년 미·일 간 전략회의에서 당시 일본 외무성 대외정책관이었던 스즈키 사토시가 인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sup>40/</sup> 이후 이 회의에 참석했던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브라이

---

Felix Heiduk and Gudrun Wacker, “From Asia-Pacific to Indo-Pacific: Significance, Implementation and Challenges,” p. 13.

37/ 이들 전략서는 중국을 적(adversary)이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문맥상 중국임을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보면 적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어 북한과 중국을 언급하고 있다. 관련해 다음을 참조: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December 2017,”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017/12/NSS-Final-12-18-2017-0905.pdf>> (Accessed April 25, 2023).

38/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p. 30, <<https://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 (Accessed April 1, 2023).

39/ 민태은 외,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 153.

언 후크(Brian Hook)가 트럼프 정부 초기 국무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에게 이를 보고하면서 미국의 전략 논의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태 지역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sup>41/</sup>

그리고 마침내 2017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구상을 국제무대에 올렸다. 뒤이어 2018년에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가 ‘미태평양사령부(US-Pacific Command)’의 공식 명칭을 ‘미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ific Command)’로 변경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인식변화를 공식화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인도-태평양 경제비전(Indo-Pacific Economic Vision)」 발표를 통해 해당 지역에 디지털 경제, 에너지 기반산업에 1억 1,3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에 맞서 인태 지역에 미국의 경제 인프라 구축과 경제이익 확보에 나섰다. 이 비전은 “어느 국가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천명했지만<sup>42/</sup> 미국의 해당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면서 2014년부터 추진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는 성격을 뚜렷하게 보였다.

트럼프 정부 인태 전략의 두 번째 특징은 미 대외정책에서 아시아의 지역적 범위와 전략적 중요성을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트럼프 정부의 인태 전략은 아시아를 전략적으로 폭넓게 접근함으

40/ Jack Detsch, “How the US Learned to Stop Worrying about the Pacific and Love the Indo-Pacific: The United States has a New Lens for its rivalry with China,” *Foreign Policy*, July 30,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7/30/biden-pacific-china/>> (Accessed March 20, 2023).

41/ *ibid.*

42/ US Department of State, “Secretary Pompeo Addresses the Indo-Pacific Business Forum,” July 30, 2018, <<https://2017-2021.state.gov/secretary-pompeo-addresses-the-indo-pacific-business-forum/>> (Accessed March 20, 2023).

로써 동북아 지역의 시장과 안보에 집중되었던 대아시아 정책을 인태지역으로 확대하여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으로 이끌었다. 더불어 해당 지역을 미국의 자원을 투자하고 협력할 무역시장 이상의 전략적 공간으로 이해하려는 특징을 뚜렷하게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7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2017)」는 인도-태평양을 지역적으로 서태평양, 말라카해협, 페르시아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sup>43/</sup> 2019년 국방부가 발표한 「2019년 인도-태평양 전략서: 준비, 동반자 관계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 추진」을 보면 인태지역은 미국의 서해에서 인도의 서해까지 걸쳐있다고 설명한다.<sup>44/</sup> 태평양과 인도양에 위치한 주요국과의 군사협력 방안을 밝히고 있는 이 보고서는 이 지역이 미국 안보의 핵심 전략지(our priority theater)<sup>45/</sup>라고 명시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과 같은 기존의 아시아 전략보고서가 집중했던 지역 외에 스리랑카, 브루나이, 라오스, 몰디브, 피지, 통가,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캐나다 및 유럽 국가 등을 같이 엮는 네트워크 형성과 강화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는 점이다. 한마디로 인태 전략이라는 구상 하에 아시아의 지역 및 전략적 범위를 확대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새로이 정의한다.

‘아시아 안심 법안(the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ARIA)’은 아시아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지리적·전략적 관심의 확장을 보

---

43/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December 2017,”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017/12/NSS-Final-12-18-2017-0905.pdf>) (Accessed April 25, 2023).

44/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p. 1,  
(<https://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  
(Accessed April 1, 2023).

45/ *ibid.*, p. 4.



여주는 또 다른 예다.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 지역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5억 달러의 예산 편성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 안심 법안’을 통과시켰다.<sup>46/</sup> 이 법은 인태지역에서 미국이 장기적 전략 비전을 가지고 포괄적, 다면적 그리고 원칙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제정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sup>47/</sup> 이러한 목적 하에 미국의 군사, 경제 그리고 가치이익 확보에 중요한 호주, 인도, 일본, 필리핀, 한국, 태국, 태평양 군도, 타이완 등과 같은 우방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에 미국의 세금을 사용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북핵, UN 대북 제재와 관련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은 트럼프 정부가 인태 지역에 집중할 것임을 입법적 측면에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에 속한 국가 이름들을 열거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념적 확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sup>48/</sup>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폭넓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 확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을 보다 확장된 지리적 범위로 에워싸 봉쇄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4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s, “The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ARIA) of 2018,” <<https://sgp.fas.org/crs/row/IF11148.pdf>> (Accessed May 18, 2023).

47/ 원문은 다음과 같다. “develop a long-term strategic vision and a comprehensive, multifaceted, and principled United States policy for the Indo-Pacific region” 제시된 원문을 포함하여 법 내용은 다음을 참조: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of 2018,”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OMPS-15340/pdf/COMPS-15340.pdf>> (Accessed May 18, 2023).

48/ 이는 2018년에 통과된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에 일부 반영됨.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Ankit Panda, “Trump Signs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Into Law: The Act Authorizes \$1.5 Billion in New Spending for U.S. Initiatives in Asia,” *The Diplomat*, January March, 2019, <<https://thediplomat.com/2019/01/trump-signs-asia-reassurance-initiative-act-into-law/>> (Accessed March 20, 2023).

트럼프 정부의 인태 전략이 보인 세 번째 특징은 경제이익에 방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경제 안보가 국가안보라는 인식이 뚜렷했다. 트럼프 정부의 인태 전략을 포괄하는 전략서라 할 수 있는 2019년 11월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태 전략보고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공동비전 추진」을 보면 트럼프 정부의 인태 전략이 얼마나 경제에 집중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발표되었던 관련 전략서의 내용을 6개 과제로 압축해 놓았다. 그 중 ‘경제번영 향상(Enhancing Economic Prosperity)’에 가장 많은 면을 할애해 미국이 해당 지역에서 목표로 하는 국제무역 질서, 산업 분야 그리고 관련한 미국의 비전, 예산 그리고 수행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및 디지털 경제, 에너지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비전이 강조되어 담겨있다.

이렇게 트럼프 정부의 인태 전략이 경제 분야에 집중된 배경에는 2016년 대선 기간 후보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아시아 국가가 안보를 위해 미국에 기대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트럼프 정부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무역 거래를 이유로 중국을 압박한 데도 이러한 인식이 작용했다. 2018년 7월 발족한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Indo-Pacific Business Forum)’은 중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판단이 그대로 투영된 회의체다. 첫 회의에서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이오(Mike Pompeo)는 경제적으로 개방된 지역이란 국가 간 공정한 상호무역, 열린 투자환경, 투명한 합의와 상호연계성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시장 행위를 비판·견제했다. 그리고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민간 투자처를 확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sup>49/</sup>

트럼프 정부가 아시아 정책을 인태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인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배경에도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 큰 이유로 작용했다.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이 중요해질수록 인도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인도와의 관계 강화에 큰 관심을 두었다. 그런데 그 관심은 경제협력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시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는 군사적 관점에서 인태 지역에서 핵심은 태평양 지역이지 인도는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sup>50/</sup> 트럼프 정부 초대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도 2017년 7월 취임 후 공식적으로 인도 정책을 상세히 발표하는 첫 연설에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자유롭고 열린 인태 지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해 양국이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함을 역설했다. 특히 이 연설에서 틸러슨은 인도가 인구성장을 바탕으로 2050년경에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양국이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제1과제로 꼽았다.<sup>51/</sup> 후임 폼페이오도 앞서 논의한 2018

49/ 원문은 다음과 같다. “economically ‘open’ region that includes fair and reciprocal trade, open investment environments, transparent agreement between nations, and improved connectivity.” 관련 자료는 다음을 참조: US Department of State, “Secretary Pompeo Addresses the Indo-Pacific Business Forum,” July 30, 2018, <<https://2017-2021.state.gov/secretary-pompeo-addresses-the-indo-pacific-business-forum/>> (Accessed March 20, 2023).

50/ Jack Detsch, “How the US Learned to Stop Worrying about the Pacific and Love the Indo-Pacific: The United States has a New Lens for its Rivalry with China,” *Foreign Policy*, July 30,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7/30/biden-pacific-china/>> (Accessed March 20, 2023).

51/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Defining Our Relationship with India for the Next Century: An Address by U.S.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October 18, 2017, <[https://csis-website-prod.s3.amazonaws.com/s3fs-public/publication/171018\\_An\\_Address\\_by\\_U.S.\\_Secretary\\_of\\_State\\_Rex\\_Tillerson.pdf](https://csis-website-prod.s3.amazonaws.com/s3fs-public/publication/171018_An_Address_by_U.S._Secretary_of_State_Rex_Tillerson.pdf)> (Accessed April 06, 2023).

년 인도-태평양 경제포럼에서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도-태평양 경제를 위한 미-인도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인도에 대한 경제적 관심은 2020년 3월 미-인도 정상회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관세가 높은 것을 비난하며 정상회담 2년 전인 2018년에 인도를 관세왕(tariff king)이라고 희화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미국은 그간 관세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던 인도를 선진국으로 분류했다.<sup>52/</sup> 즉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것이다. 곧이어 열린 미-인도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 인도의 포괄적 협력을 강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은 인도와 30억 달러에 이르는 방위협약과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DFC)의 6억 달러 투자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sup>53/</sup> 반면 당시 인도 정부가 원했던 일반특혜관세 지위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sup>54/</sup>

물론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경제에 치중한 인태 전략이 인도와의 안보협력을 약화시켰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인도와

---

52/ Lindsey Ford,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Foreign Policy at Brookings*, May 20, 2020, p. 7,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20/05/fp\\_20200505\\_free\\_open\\_indo\\_pacific.pdf](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20/05/fp_20200505_free_open_indo_pacific.pdf)> (Accessed May 30, 2023).

53/ The White House, "Joint Statement: Vision and Principles for the United States-India Comprehensive Global Strategic Partnership,"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briefings-statements/joint-statement-vision-principles-united-states-india-comprehensive-global-strategic-partnership/?utm\\_source=link&utm\\_medium=header](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briefings-statements/joint-statement-vision-principles-united-states-india-comprehensive-global-strategic-partnership/?utm_source=link&utm_medium=header)> (Accessed April 28, 2023); Jack Detsch, "How the US Learned to Stop Worrying about the Pacific and Love the Indo-Pacific: The United States has a New Lens for its Rivalry with China," *Foreign Policy*, July 30,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7/30/biden-pacific-china/>> (Accessed March 20, 2023).

54/ 당시 정상회담에 관련 담당자를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중국해에서 여러 차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2019년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2020년 2월까지 인도에 시그 사우어 공격용 소총(Sig Sauer Assault Rifles) 72,400정, AH-아파치 헬기(AH-64E Apache helicopters) 6대, 대잠헬기인 MH-60 로미오 시호크 헬기(MH-60 Romeo Seahawk helicopters) 24대를 판매하는 등 양국 간 무기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sup>55/</sup> 이러한 무기 거래 증가의 배경에는 러시아와 중국 견제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군사협력 형태에서도 드러나듯이 트럼프 정부하에서 아시아-태평양 또는 아시아 전략이 인태 전략으로 명명되는 데 핵심이 된 인도와의 협력은 포괄적이라기보다 경제에 집중된 것임은 분명하다.

이렇듯 트럼프 정부가 동맹 및 우방과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실익 확보에 치중한 것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대중국 무역적자가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의 심화 때문이었다. 트럼프 정부가 역내 비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56/</sup>

#### 다. 바이든 정부(Joe Biden, 2021~ )

바이든 정부가 밝힌 대외정책의 목표는 전통 및 비전통 안보에서 미 중산층의 실익 확보다. 그 접근법으로 동맹과 우방의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한다. 특히 전임 트럼프 정부로 인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상실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와 평

55/ Kashish Parpiani, "India-US Defense Trade Continuity under Trump, Issue Briefs and Special Reports,"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July 2, 2020, <<https://www.orfonline.org/research/india-us-defence-trade-continuity-under-trump-68919/>> (Accessed May 18, 2023).

56/ 민태은·박동준,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pp. 99~102.

화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 직후 트럼프 지우기에 나서면서 트럼프 정부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에 재가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sup>57/</sup>

하지만 실용주의에 기초해 국익을 추구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초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바이든 정부도 전임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미·중경쟁을 최우선 당면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태지역을 이러한 중국의 위협이 가장 높은 곳으로 보고 해당지역에서의 미·중경쟁을 위해 전략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취임 후 첫 해외순방 지역으로 아시아를 선택하고,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사실에서도 인태 지역에 집중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022년 2월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서에는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sup>58/</sup> 이 전략서는 인태 지역에서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5개 목표로 자유(free)와 개방(open), 연계(connection), 번영(prosperity), 안보, 그리고 회복성(resilience)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전략목표를 추진하는 이유가 중국의 도전과 현상 변경 시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이 인태 지역에 집중하는 이유가 해당 지역에서 경제, 군사, 외교 그리고 기술과 관련한 중국의 유해한(harmful) 행위로 인해 미국뿐 아니라 인태 지역의 동맹과 우방이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

57/ 위의 책, p. 152.

58/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20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2/U.S.-Indo-Pacific-Strategy.pdf>> (Accessed May 18, 2023).

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sup>59/</sup>

그리고 이 보고서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역내에서 외교, 안보, 기후, 보건, 해상능력에 대한 투자 확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주도, 아세안과 연계 강화, 인도의 지역 리더십 지지를 통한 미-인도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보건 안보와 기술 및 공급망 확보를 위한 쿼드의 역할 강화, 개방되고 회복력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축진을 제시하고 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오커스를 중심으로 역내 역지력 강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 태평양 군도에 위치한 국가들이 인프라, 안보, 그리고 정보 및 통신 기술 구축을 통해 재난과 같은 위기로부터 회복할 기반을 갖추도록 협력을 제공할 방안도 담고 있다. 그리고 역내 민주주의를 위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한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와 실행계획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인태 전략에 나타난 특징은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우방과의 연대강화를 통한 전방위적 대중 견제다.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은 유럽의 나토,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연합과 함께 인태지역에서 아세안과 같은 다자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쿼드 및 오커스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인도, 호주, 일본과 경제 및 안보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일과는 양자를 넘어 3자 군사협력 체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또한 한국, 일본, 타이완과는 반도체, 배터리 등

<sup>59/</sup>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PRC is combining its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might as it pursues a sphere of influence in the Indo-Pacific and seeks to become the world's most influential power. The PRC's coercion and aggression spans the globe, but it is most acute in the Indo-Pacific.....Our collective efforts over the next decade will determine whether the PRC succeeds in transforming the rules and norms that have benefitted the Indo-Pacific and the world"; 원문 전체는 위의 글, p. 5.

주요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안정적 공급망확보를 위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연대구축의 목적은 인태전략서가 명시하고 있듯이 대중견제다. 사실 바이든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에 열려있다. 지난 5월 19일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을 배제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대중정책이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 즉 탈동조화가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관리하려는 디리스킹(de-risking)이라고 강조했다.<sup>60/</sup> 연장선상에서 바이든 정부는 미·중이 충돌 없이 책임감 있게 경쟁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6월에는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 7월에는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고, 9월 리·북정상회담 직후에는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이 몰타(Malta)에서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만나 국제안보에 대해 논의하는 등 미국은 중국과 협력 및 소통의 창을 열어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의 인태 전략에서 중국견제를 위한 배제 양상은 부인하기 어렵다. 옐런 재무장관이 7월 중국을 방문해 미국은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 직전인 6월 말 독일, 네덜란드, 일본이 반도체 및 신기술의 중국 수출 제한조치를 발표한 데 미국의 압력이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61/</sup> 무엇보다

---

60/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re not looking to decouple from China, we're looking to de-risk and diversify our relationship with China. 관련 자료는 다음을 참조: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in a Press Conference," May 21, 202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3/05/21/remarks-by-president-biden-in-a-press-conference/#:~:text=We're%20not%20looking%20to,one%20country%20for%20necessary%20product,1>> (Accessed May 22, 2023).

61/ Viktoria Dendrinou and Chris Anstey, "Yellen's China Trip Offers Economic Guardrails for Rivalry," *Bloomberg*, July 10, 2023,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7-09/yellen-s-china-trip-offers-economic>



도 바이든 정부의 인태 전략서에 중국과 함께할 전략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대신 중국이 자유, 개방성, 투명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과는 다른 이질적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가치 확산, 공정한 자유무역질서 확립,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데는 이들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과 다르다는 인식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바이든 정부는 우방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바깥쪽에 중국을 두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인태 전략의 두 번째 특징은 우방 및 비(非)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에게 열린 모습과 더불어 배제의 모습을 함께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과 배제가 바이든 정부의 인태 전략에 혼재하게 된 배경에도 중국에 대한 견제가 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핵심 규범으로 강조하면서도, 이 규범 밖에 있는 국가들과 선택적으로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담(Democracy Summit)’에 비민주주의 국가인 필리핀은 초청하면서 태국과 베트남은 참여시키지 않았다. 반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는 태국과 베트남을 필리핀과 함께 참여시켰다. 그런데 같은 비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친중 성향으로 알려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참여시키지 않았다.<sup>62/</sup> 이러한 형식적 ‘개방성’으로 인해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협의체나 기구는 목표, 경계 그리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바이든 정부의 인태 전략은 우방과 동맹을 ‘배

-guardrails-in-tense-rivalry#xj4y7vzkg> (Accessed July 31, 2023); “Dutch to Restrict Chip Equipment Export amid US Pressure,” BBC, July 30, 2023, <<https://www.bbc.com/news/business-66063594>> (Accessed July 31, 2023).

62/ 민태은·박동준,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p. 128.

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바이든 정부 들어 통과된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그 대표적 예다. 이들 법은 투자보조금 제도를 이용해 우방이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그런데 이들 법은 보조금 지급의 주요 조건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해외기업의 중국 투자 및 생산을 제한하고 있다. 즉 우방도 미국을 선택하지 않을 때 우방의 이익도 배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인태 전략의 세 번째 특징은 제도화다. 바이든 정부는 인태 전략 추진에서 규범뿐만 아니라 기구, 협의체와 같은 제도의 틀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특징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인태 전략과 달리 다자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앞서 논의한 쿼드, 민주주의 정상회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오키스 등이 그 실례다. 쿼드의 경우 2019년부터 여러 차례의 장관급 회담 후 2021년에는 정상급으로 격상되었고 같은 해 9월에 첫 쿼드 대면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후 2022년 5월 24일에 2차, 2023년 5월에 3차 정상회담이 연례 행사로 열렸다.<sup>63/</sup> 이렇게 회의를 정례화해 가면서 쿼드의 실체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sup>64/</sup>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3국 정상회담 정례화 및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실무급 회의 연례화도 바이든 정부 인태 전략의 특징인 제도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63/ 2021년 3월 비대면 정상회담까지 감안하면 지금까지 총 4차에 걸쳐 쿼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64/ 쿼드가 추구하는 전략목표 및 다양한 협의체와의 협력방안은 2023년 3월 뉴델리에서 열린 쿼드 장관급 회의 공동성명에 상세히 논의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 U.S. Department of State, "Joint Statement of the Quad Ministerial Meeting In New Delhi," March 3, 2023, <<https://www.state.gov/joint-statement-of-the-quad-ministerial-meeting-in-new-delhi/>> (Accessed June 10, 2023).

바이든 정부의 인태 전략의 네 번째 특징은 역내 군사력 강화다. 트럼프 정부의 인태 전략이 군사·경제·외교 분야에 걸쳐 미국 인태 전략의 기본틀을 잡았지만 주로 경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중국과의 공정한 교역에 방점이 있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포괄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함께 해당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전략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역내 미국의 억지력을 높이고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태평양 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PDI)과 해양안보구상(Maritime Security Initiative: MSI)하에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평양 억지구상에만 2023년 국방예산 약8,167억 달러(816.7 billion) 가운데 61억(6.1 billion) 달러, 즉 약 8%를 배정했다.<sup>65/</sup> 해양안보구상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천만 달러를 인상 배정해 인태지역 국가들의 군사와 안보를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sup>66/</sup>

또한 남중국해와 동북아 지역에서 우방과 군사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필리핀과 필리핀내 미군 부대(military camps) 4곳을 추가

65/ 미국의 국방예산에는 국방부 예산뿐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의 국방 관련 모든 예산을 포함한다.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 US Department of Defense, "Biden Signs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into Law," December 23, 2022, <<https://www.defense.gov/News/News-Stories/Article/Article/3252968/biden-signs-national-defense-authorization-act-into-law/>>; MSI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US Department of Defense,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Department of Defense Budget Fiscal Year (FY) 2023," <[https://comptroller.defense.gov/Portals/45/Documents/defbudget/FY2023/FY2023\\_Pacific\\_Deterr\\_ence\\_Initiative.pdf](https://comptroller.defense.gov/Portals/45/Documents/defbudget/FY2023/FY2023_Pacific_Deterr_ence_Initiative.pd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A Budgetary Overview," January 9, 2023, <<https://sgp.fas.org/crs/natsec/IF1230.pdf>>.

66/ 이 구상에는 인태지역 국가들의 군사 안보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 US Department of Defense,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Department of Defense Budget Fiscal Year(FY) 2023," p. 5, p. 15, p. 28; Department of Defense, "Foreign Military Training Report: Fiscal Years 2020 and 2021," Joint Report to Congress, vol. I, p. II-9,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21/08/Volume-I-508-Compliant.pdf>>

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군의 대함 능력(anti-ship capabilities)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군을 재정비하여 배치(adjust)하기로 했다.<sup>67/</sup> 호주와 한국에는 핵잠수함을 보내고 타이완해협에서 군사훈련과 군대 배치(troop rotations)를 늘리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우방과 동맹국 중심의 군사력 강화 모습은 군사협력에서 동맹의 부담을 강조했던 트럼프 정부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다섯 번째 특징은 인태지역에서 군사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이든 정부의 인태 전략은 경제 실의 추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발표된 19쪽 분량의 바이든 정부의 인태 전략서는 ‘경제’를 34번 언급하고 있다.<sup>68/</sup> 실제 본문이 15페이지 정도임을 고려하면 매우 잦은 언급이다. 기술(technology)이라는 말도 ‘군사’, ‘안보’, 그리고 ‘핵’보다 훨씬 많은 19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인태 전략에서 경제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자유주의 시장을 주도하는 규칙 결정자(rule-maker)가 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즉 규칙결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을 압도할 경제력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sup>69/</sup> 지난 20여 년간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 격차는 군사력 격차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2022년 기준 미국의 국방비 규모는 전 세계 국방비 규모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세계 GDP에

---

67/ Lolita C. Baldor, “How the US Is Boosting Military Alliances to Counter China,” *AP News*, February 3, 2023, <[https://www.rand.org/pubs/technical\\_reports/TR1321.html](https://www.rand.org/pubs/technical_reports/TR1321.html)> (Accessed July, 30).

68/ ‘경제(economy)’와 ‘경제적(economic)’으로 표기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69/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지난 5월 미국이 주도하는 G7 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의 발표 내용에도 드러나 있다. “Our objective is..... to shape the strategic environment in which it operates, building a balance of influence in the world maximally favorable to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he interests and values we share.”

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3%인 반면 중국의 비중은 18%에 이르면서 그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 점차 경제가 모든 분야를 주도해 가는 글로벌 환경에서 경제 주도권 없이 다른 나라의 행위를 통제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기 어렵다. 기술이 규범을 세운다는 믿음을 가진<sup>70/</sup> 바이든 정부가 다양한 첨단기술과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과 별개의 공급망 확보에 발 벗고 나서며 경제력 우위 확보에 주력하는 이유다.

### 3. 대한반도 영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 정부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인태 전략은 점차 뚜렷하게 역내 우방과의 연대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태 전략의 변화과정은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미국의 우려가 심화되는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 즉,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질서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미국의 패권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는 과정이 인태 전략 발전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인태 전략은 한국을 전략 추진의 중심축(linchpin)으로 강조하고 있다.<sup>71/</sup> 중국 견제와 관련해 한국에 거는 미국의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2년 12월에 발표된 한국의 인태 전략이 명시한 바와 같이 중국은 ‘인태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70/ 민태은·박동준,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pp. 119~123.

71/ 미국은 인태전략서에서뿐 아니라 2021년과 2022년 한미정상회담, 한미 2+2회담 등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역내 안정 및 번영과 관련해 한국의 핵심(linchpin)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밝혀왔다.

데 있어 한국의 주요 협력 국가다. 특히 2003년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 중국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은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 협력을 키워왔다.<sup>72/</sup> 하지만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고 역내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이 동맹 한국에 거는 기대가 커짐에 따라 한국의 대외정책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인태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은 한·미관계의 포괄적 강화이다. 먼저, 미국은 인태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과의 협력, 특히 기술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이 미국의 인태 전략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인태 전략에서 기술 패권 확보를 중국 저지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 항공, 사이버 분야 등의 첨단기술과 관련 공급망 확보에 있어서 중국을 압도하고자 한다. 미국 주도하에 2022년 5월에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가 인태지역의 ‘공급망 교란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모색’을 주요 안건(agenda)으로 삼은 데는 중국이 공급망을 교란하고 있다는 미국의 우려와 견제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기술 분야에서 선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관련 글로벌 공급망 점유율 또한 매우 높아 미국과 중국 양국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sup>73/</sup> 미국이 한국과의 경제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에 나선 중요한 이유다. 그리고

---

72/ 관세청 및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들어 20년 만에 미국이 다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되었다.

73/ 2023년 미국 반도체 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IA)가 발표한 2022년 반도체 시장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의 19%를 차지하며 7%의 중국보다 12%p 앞서고 있다. 관련 보고서는 다음을 참조: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2022 State of The U.S. Semiconductor Industry,” p. 10, p. 20, <[https:// www.semiconductors.org/wp-content/uploads/2022/11/SIA\\_State-of-Industry-Report\\_Nov-2022.pdf](https://www.semiconductors.org/wp-content/uploads/2022/11/SIA_State-of-Industry-Report_Nov-2022.pdf)> (Accessed July 20, 2023).

미·중경쟁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기술협력에 방점을 둔 한·미협력 강화는 지속될 것이다. 한국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경제안보 상설 대화채널을 구축한 것이나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제4차 협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한 것 등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sup>74/</sup>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한·미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은 인태지역에서 군사 안보에 대한 자원 투입을 늘리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은 군대 및 무기 현대화를 추진하고, 인태지역에서 군사력 증강 및 군사 외교를 강화해왔다. 특히 2015년 이후 중국은 인도양, 남중국해 그리고 타이완해협에서 해군 함대 증강, 항공모함 시운전 등 해군력을 증강하고 무력 시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태지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핵, 우주, 사이버 그리고 전자전(electronic warfare)의 능력 증강을 통한 전략 억지력(strategic deterrence capability)을 강화하고 있다.<sup>75/</sup>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400개 정도의 핵탄두(operational nuclear warhead)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2035년 즈음에는 1,500개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sup>76/</sup> 또한 중국은 호주 주변의 남태평양 도서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늘림과

74/ 산업통상자원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 7월 부산 개최,” 2023. 6.14.,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7360](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7360)> (검색일: 2023.7.30.).

75/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China Military Power Report Examines Changes in Beijing’s Strategy,” November 29, 2022, <<https://www.defense.gov/News/News-Stories/Article/Article/3230682/china-military-power-report-examines-changes-in-beijings-strategy/>> (Accessed April 30, 2023).

76/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Fact Sheet: 2022 China Military Power Report,” November 29, 2022, <<https://media.defense.gov/2022/Nov/29/2003122280/-1/-1/1/2022-CHINA-MILITARY-POWER-REPORT.PDF>> (Accessed April 30, 2023).

동시에 해당 지역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일대일로 차원에서 최근 중국은 남태평양 10개 도서국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원조를 늘리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sup>77/</sup> 예를 들면, 2022년 4월에 솔로몬제도와 양자안보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피지, 파푸아뉴기니, 통가와도 고위급 군사회담을 갖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sup>78/</sup>

인태지역에서 미국이 안보 네트워크인 쿼드, 오키스, 블루 퍼시픽 파트너스(Blue Pacific Partners)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렇듯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중국이 있다. 이들 안보 네트워크에 호주를 주요 회원국으로 한 것도 주변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군사협력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미국이 역내 안정을 이유로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확대가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4차례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군사협력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던 것도 미국 인태 전략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중국과 인접한 한반도는 미국이 인태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는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6월 마드리드, 11월 프놈펜, 2023년 5월 히로시마, 그리고 8월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타이완 문제 등 중국으로 인한 지역 안보 위기에 한국과 함께 대처할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지역 안보에서 한국에 거는 기대를 분명히 했다.

---

7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act Sheet: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Pacific Island Countries," May 24, 2022, <[https://www.fmprc.gov.cn/eng/wjdt\\_665385/2649\\_665393/202205/t20220524\\_10691917.html](https://www.fmprc.gov.cn/eng/wjdt_665385/2649_665393/202205/t20220524_10691917.html)> (Accessed June 20, 2023).

78/ *ibid.*



사실 미국이 북핵 대응 차원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국 견제와 무관하지 않다. 올해 들어 미국은 한국과 함께 야외 한·미연합연습 프리덤 방패(Freedom Shield: FS)를 확대, 실시했다. 특히 2018년 중단한 야외 실기동 훈련을 재개해 한·미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한국과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와 관련해 올 6월, 미국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오하이오급 잠수함인 토마호크 잠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시간함(SSGN-727)을 한국에 보냈고 7월에도 1980년 이후 40여 년 만에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호(핵추진 탄도 미사일 잠수함, SSBN-737)를 부산에 입항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군사 조치는 북핵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을 보여주는 한편 인태지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과 의지를 확인시키는 의미가 있다.

한·미 군사협력 강화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느끼는 잠재적 위협이 감소하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작년 2022년 5월에 열린 도쿄 쿼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해상영역파악을 위한 인도태평양파트너십(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 IPMDA)’<sup>79/</sup> 구상을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남태평양 도서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에 거는 미국의 기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기대는 북핵 및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며 한·미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전략적 목표에도 부응한다. 지난 5월에 처음으로 한국은 ‘공동번영을 향한

<sup>79/</sup> The White House, “Fact Sheet: Quad Leaders’ Tokyo Summit 2022,” May 23, 202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5/23/fact-sheet-quad-leaders-tokyo-summit-2022/>> (Accessed June 20, 2023).

향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라는 슬로건하에 14개 태평양 도서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는 한국이 역내 부상하는 선진국으로서 태평양 도서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의 우방으로서 태평양 도서지역에서도 한·미연대를 강화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인태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두 번째 영향으로 한·미 양국 모두에서 대북 정책의 독자적 영역이 축소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인태 전략은 북핵 위협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의 인태 전략도 북한 비핵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4월에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핵억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에 기초해 7월에는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전략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입항했다.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한·미는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하고 3국은 정보공유를 통한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강화에 합의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감시할 3자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힘과 연대에 기반한 대북정책은 여전히 현상유지 성격이 강하다. 큰 틀에서 기존 대북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반면 눈에 띄는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전환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인태 전략은 아직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나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협력이 지역 전략으로 구체화되어가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미관계에 북한 요소가 줄어드는 배경에는 악화된 미국의 경제위기가 있다. 경제지표 개선과 관련된 대내외 정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지표가 회복되더라도 미국의 대북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기란 쉽지 않다. 북핵 고도화

가 그 큰 이유다. 2000년 이후 여러 차례 이루어진 남북 고위급 대화뿐 아니라 2차례의 미·북정상회담과 5차례의 남북정상회담도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실험을 저지하지 못했다. 대북 경제제재도 1993년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을 제재나 대화 시도로 변화시키기는 더욱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더 많은 국가자원을 투입해도 해결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문제가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 근본적 원인에는 미·중경쟁이라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요인이 있다. 미·중경쟁으로 인해 미국은 중국견제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국가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는 역내 불확실성을 높여 안정을 해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중경쟁이라는 구조적 틀을 변화시킬 결정적 변수가 아니다. 반면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는 역내 불확실성을 높여 안정을 해칠 수 있다. 게다가 북핵 문제가 진전되더라도 북한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우방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마디로 미·중패권 경쟁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제한된 국가자원을 대북정책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 이러한 판단하에 미국은 압박과 대화라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을 주저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내 여론도 북한 문제가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 과제가 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80/</sup>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자원을 쏟아붓는 것에 대한 미국 내 우려

<sup>80/</sup> Mohamed Youonis, "Most Americans Still Support Ukraine War Effort," *Gallup*, June 29, 2023, <<https://news.gallup.com/poll/508037/americans-support-ukraine-war-effort.aspx>> (Accessed July 10, 2023).

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3년 6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민의 과반수가 여전히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지율은 지지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작년 조사보다 7%p가 늘어난 50%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나치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로서는 북핵 문제와 같은 또 다른 불확실한 대외 사안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인태 전략이 북한 문제를 대중정책의 하위문제로 다루는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재레짐을 변화시키거나 북한과의 대화에 선제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 인태 전략은 남북관계에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 데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핵고도화는 남북관계를 북핵 문제의 하위문제로 고착화시키고 있다. 핵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은 한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는 한 어떠한 남북관계 개선 구상도 무용지물이다. 더욱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더욱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변화를 한국이 주도하려면 매우 '획기적인' 군사 및 경제 유인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이 북한을 변화시킬 독자적 군사 유인책을 갖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경제 유인책 역시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 변화 없이 한국이 주도해 마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인태 전략 추진으로 더욱 뚜렷해지는 역내 진영화는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 추진에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인태 전략하에서 강화되는 한·미·일 관계가 중·러·북의 연대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

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안보리가 소집되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대응에 반대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한·미·일의 군사 활동에 대한 방어 조치라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했다.<sup>81/</sup> 7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의 전승절 70주년에 참가해 중·러·북 연대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관계 진전에 필요한 중·러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북한은 역내 한·미·일 밀착을 이용해 미·중 갈등을 증폭시키고 중·러·북 연대를 강화해 자신들의 운신의 폭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5월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히로시마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논의하자 북한은 한·미·일이 위기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8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자극하여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게 하려는 셈법이 녹아있다. 여기에 보태어 한·미·일 공조를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와 무력도발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남북관계 개선이 점차 지역 문제화되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인태 전략과 함께 강화되는 한·미·일 관계는 힘을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기회인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에는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81/ United Nations, "Briefing Security Council 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Failed Launch, Senior Official Stresses Diplomacy 'the Only Way Forward'," June 2, 2023, SC/15304, <<https://press.un.org/en/2023/sc15304.doc.htm>> (Accessed July 10, 2023).

---

## 4. 한국의 대응

미·중경쟁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심 전략인 인태 전략에서 한·미관계 강화의 중요성은 지속될 것이고 연장선상에서 한·미·일관계 강화도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입장에서 미일과의 관계 강화가 한·중관계의 경색이나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국에게 중요한 협력국이다. 따라서 한·미관계 강화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중경쟁 밖에서 우리 주도의 외교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목표 달성에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 및 정례화에도 불구하고 3국의 정권교체로 협의 내용이 변화 또는 약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미·중관계 밖에서 우리의 경제, 군사, 외교력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sup>82/</sup> 미국의 경우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바이든 지우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한·미·일관계 강화에 있어 변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의 양당과 다수 대중은 진영과 관계없이 실익에 기반한 강경한 대중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무대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미국의 역할을 지지해온 보수진영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한·미·일 군사협력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게 더 큰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

---

<sup>82/</sup> 최근 미국의 양극화 양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Rachel Kleinfeld, “Polarization, Democracy, and Political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What the Research Say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s://carnegieendowment.org/2023/09/05/polarization-democracy-and-political-violence-in-united-states-what-research-says-pub-90457>> (Accessed September 12, 2023).

다. 미·중경쟁과 관련해서도 2024년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대선경선이 진행되는 경우 민주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위주의 관계 전환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미·중경쟁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한국의 독자적 외교능력과 영역 확보가 절실하다.

구체적으로 아세안과 동남아 지역 및 남태평양 군도에 대한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해당 지역은 한국의 한류와 경제성장에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 외연 확장에 주요한 곳이다. 또한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인태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에서 우리의 외교적 역할 및 영역 확대는 중요하다. 따라서 쿼드 참여국들이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남태평양 군도 도서국과 교류를 확대하고 인접 우방 호주와의 협력을 다각화하고 돈독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일본과 자원개발, 도로, 항만, 공공시설 포함 인프라 구축 등의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미·중관계 밖에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제시한 일련의 노력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우선 해당 지역 국가들의 개별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아세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어젠다 혹은 개발프로젝트 논의를 위한 공식 및 비공식 소다자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주도의 공식 협의체 구상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협력의 제도를 추진하는 미국의 인태 전략과 호흡을 맞춘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때 비민주주의 국가가 많은 해당 지역에서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추구 외교가 내정간섭이라는 반감을 사지 않도록

전면에 가치를 내세우는 방식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나아가 아세안 및 남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해당 지역 국가뿐 아니라 해당지역 밖의 우방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인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에도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중관계는 우리의 경제뿐 아니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홀히 할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이 우크라이나 전쟁, 수산물, 반도체 등을 둘러싼 수출 및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스스로 외교 공간을 축소하는 대중 메시지 발신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이 직접적으로 경제·군사 압박을 해오지 않는 한 중국을 자극하는 메시지 발신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외교전략으로는 9월 아세안·G20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의 리창 총리와 만남을 가진 것과 같이 기존의 소다자 협의체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효과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다양한 소다자 협의체를 활용하는 경우 중국과의 협력과 소통이 가능한 사안을 찾아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기존 협의체에 기반한 소위 이슈 쪼개기를 통해 중국과 협력과 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찾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미관계 강화라는 큰 틀 속에 한·중 양국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중국과의 접촉기회를 늘릴 수 있다는 면에서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대북정책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더라도 한국은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한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와 통일로 유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중경쟁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 북한을 압도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력 증강, 특히 국방력 강화가 중요하다. 이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처한다는 면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은 남북관계 개선 방안이 국력 배양과 발맞추어 장기적 관점에서 구상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환경이 장기적으로 조성되는 만큼 꾸준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우선 현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보다 정교화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재개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담대한 구상이 현실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유엔안보리 신임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북핵 문제를 넘어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어젠다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때 북한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노력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균형 있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올해 들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도 3차례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통일연구원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대북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이념과 지지 정당에 관계없이 지지하고 있다. 한·미·일 외에 인태 전략을 발표한 국가들이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도 우리의 북한 인도적 지원 문제 제기는 우방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과 더

불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북문제의 당사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북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 입장이 북한에도 적용되는 점을 북한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 Ⅲ. 인도-태평양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정책

---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인도-태평양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정책

### 1. 인식

#### 가. 일본의 지역 개념 확대

일본에서 아시아를 둘러싼 지역 개념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아시아-태평양’, 1990년대에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한 ‘동아시아’, 2000년대 이후에 현저히 나타나게 된 ‘확대 동아시아’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무역투자관계의 확대와 심화,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심화, 역내 정책협조에 대한 의의 공유에 따라 생성된 산물이었다.<sup>83/</sup>

‘인도-태평양’은 정의하는 국가와 논자에 따라 그 범위는 다르지만 최근 아시아를 둘러싼 지역개념으로는 가장 확대된 지리적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 외교청서는 인도-태평양을 아시아-태평양부터 인도양을 거쳐 중동·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며 세계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세계 활력의 핵심이라고 정의한다.<sup>84/</sup> 하지만 동시에 인도-태평양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다수 존재하고 이 중에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듯한

83/ 大庭三枝, 『重層的地域としてのアジア: 対立と共存の構図』(東京: 有斐閣, 2014), pp. 31~57.

84/ 外務省, 『外交青書2023』(東京: 外務省, 2023), p. 30.

행동이 보이고 있고, 해적,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연재해, 불법조업과 같은 다양한 위협에도 직면하고 있는 지역이다.

일본이 기존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인도와 인도양까지 그 외교 전략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은 이미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테러대책특별조치법에 의해 일본 자위대가 인도양에 파견되었고 급유활동 등에 종사하게 된 것은 일본 외교에서 인도양 해역이 중요한 영역으로 편입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03년부터 두드러진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설립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일본 정부는 아세안+3(한·일·중)에 더해 호주, 뉴질랜드, 더 나아가서는 인도를 회원국으로 해야 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확대 동아시아’ 지역개념의 제시도 일본외교의 범위가 기존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를 포섭한 영역에까지 확대해나가는 과정을 나타낸 하나의 예라고 상정할 수 있다.

인도와 인도양을 포섭한 넓은 지리적 영역을 일본에게 중요한 ‘지역’으로 명확히 정의한 것은 제1차 아베정부 시기인 2007년 8월에 인도를 방문한 아베 총리가 인도 의회에서 ‘두 개의 바다의 교류(Confluence of the Two Seas)’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제창한 “확대 아시아(a broader Asia)”였다.<sup>85/</sup>

이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인도양과 태평양은 모두 자유의 바다, 번영의 바다로서 하나의 역동적인 결합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인도양과 태평양의 교류를 심화시킴으로써 기존의 지리적 경계를 무너뜨려서 새롭게 ‘확대 아시아’가 명확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확대 아시아’ 개념은 당시 아소 다로 외상이 제창하고 있

---

85/ 安倍晋三, “二つの海の交わり,” 2007年8月22日, <[https://www.mofa.go.jp/mofaj/press/enzetsu/19/eabe\\_0822.html](https://www.mofa.go.jp/mofaj/press/enzetsu/19/eabe_0822.html)> (검색일: 2023.10.2.).

던 ‘가치관 외교’와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구상과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2006년 11월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아소 외상은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의 지배, 시장경제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외교 수행에서 크게 중시하는 ‘가치 외교’를 제창하였다. 또한 아소 외상은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부에 성장’하고 있는 ‘신흥 민주주의 국가’에 이러한 가치 실현과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노력을 통해 연계 강화를 진행하는 ‘자유와 번영의 호’의 형성과 이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자유와 번영의 호’ 구상을 주장하였다.

‘자유와 번영의 호’는 ‘미국, 호주, 인도, 유럽이라는 생각과 이익을 공유하는 우방 국가들과 더욱 견고하게 연결되면서’, ‘동북아시아부터 중앙아시아·코카서스, 투르크, 동구권, 발트 제국까지 확대한’ 영역에서 일본이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를 통해서 평화와 행복’으로 연결하는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해서 이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실현해야 한다는 비전이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인도 연설에서는 ‘확대 아시아’의 거의 양 끝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일본과 인도가 존재하고 이러한 양국이 향후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을 ‘자유와 번영의 호’의 핵심이라고 규정하였다.<sup>86/</sup>

아베 총리는 2012년말 총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을 이끌면서 다시 총리 자리에 복귀하였다. 아베 총리는 12월말 국제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NPO)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웹사이트에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2007년으로 상정된 이상의 속도로’ 해양진출에 대한 경계심이 명확히 표현되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바다가 될 가능성

86/ 大庭三枝, “日本の「インド太平洋」構想,” 『国際安全保障』第46卷第3号(2018年12月), p. 15.

이 있으며 동중국해에서 일본이 중국에 굴복하게 되면 이러한 추세는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해양 진출은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일본, 호주, 인도, 미국이 연계해서 인도양에서 서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에서 ‘다이아몬드’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영국과 프랑스도 참가시켜 더욱 아시아의 안보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sup>87/</sup>

이러한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은 아베 정부의 매파적 이미지를 정착시킬 가능성과 대중 배려라는 관점에서 아베 총리 자신은 물론 아베 정부에서 이 구상을 직접 제시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중국의 해양진출로 인한 항행의 자유 등 기존 국제법 규칙으로 지탱해왔던 해양안보 질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외교방침은 유지되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시켜 전략적 공간을 상정하고 안정과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인도, 호주와의 연결성을 중시하는 외교적 발상이 강화되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시키는 공간으로 하고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과 규칙과 법에 기반한 해양안보환경 유지의 필요성은 2013년 1월 18일, ‘열린 바다의 은혜: 일본외교의 새로운 원칙’에도 제시되었다.<sup>88/</sup> 여기에서는 다이아몬드 안보구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명백한 대중 경계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된 5원칙 중 제1원칙인 ‘두 개의 바다가 연결되는 이 지역에서 사상, 표현, 언론의 자유, 즉 인류가 획득한 보편적 가치는 완전히 향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와

---

87/ Shinzo Abe,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Project Syndicate*, December 27, 2012, <<https://www.project-syndicate.org/magazine/a-strategic-alliance-for-japan-and-india-by-shinzo-abe>> (검색일: 2023. 10.2.).

88/ 外務省, “開かれた、海の恵み: 日本外交の新たな5原則,” (2013년1월18일) <[https://www.mofa.go.jp/mofaj/press/enzetsu/25/abe\\_0118j.html](https://www.mofa.go.jp/mofaj/press/enzetsu/25/abe_0118j.html)> (검색일: 2023. 10.10.).



제2원칙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인 바다는 힘에 의해서가 아닌 법과 규칙이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보편적 가치를 반드시 준수하지 않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나.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개 및 변화

일본 아베 총리는 2007년 인도 국회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이라는 ‘두 개의 바다의 교류’에 관한 연설을 하는 등 과거부터 인도양과 태평양을 합친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2015년 1월 인도를 방문한 기시다 외상은 뉴델리 세계문제평의회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골격을 나타냈다. 기시다 외상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에 일본과 인도의 파트너십이 공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을 연결하는 3개의 ‘가교(bridge)’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3개의 가교는 (1) 민주주의, 자유, 열린 경제, 법의 지배와 같은 보편적 가치로 대표되는 ‘가치와 정신’, (2) 일인 경제·기술협력의 심화와 남아시아 역내 및 남아시아·동남아시아 간의 연결성 강화로 얻을 수 있는 ‘활력 있는 경제’, (3) 아베 총리가 논한 ‘해양에서 법의 지배 3원칙’의 존중과 해상안보 강화에 의한 ‘개방되고 안정된 해양’이었다.

2016년 8월에는 이러한 인식을 구상으로 표현하였는데 케냐에서 열린 제6차 아프리카개발회의의 기조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아베 총리는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성장 이 현저한 아시아와 잠재력이 풍부한 아프리카라는 ‘2개의 대륙’, 자유롭고 열린 태평양과 인도양의 ‘2개의 대양’의 교류에 의해 생겨나는 역동성에 있으며, 일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번영의 실현에 대

응해 나갈 것임을 표명하였다.<sup>89/</sup>

이후 단순히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해서 외교상의 지리적 범위 확대를 시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외교에서 새로운 주제로 명시한 것이 2017년판 외교청서(이하 '2017 외교청서')였다. 2017 외교청서는 일본외교의 6개 중점분야 중 하나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특집 칼럼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즉 아베 총리의 아프리카 개발회의 연설에서도 제시하였던 2개의 대륙과 2개의 해양을 연결해서 연결성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아시아에서 정착된 민주주의, 법의 지배, 시장경제에 기반한 발전을 아프리카에도 파급시킨다. 이를 통해 자유롭고 열린 해양질서를 유지하면서 역동성을 환기시켜서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에 이르는 영역에서 인프라 개발, 무역·투자, 비즈니스 환경정비, 개발, 인재 육성 등을 전개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개발에 더해 정치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책 지원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이 전략의 구체화를 위해 미국, 인도, 호주와의 전략적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고 명기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이는 중요한 요소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발전의 중요성의 강조, 주요한 협력항목으로 인프라 개발, 그리고 자유롭고 열린 해양질서의 실현이다. 또한 아베 정부가 내건 '지구의의를 부감하는 외교'와 연동시켜서 일본의 지리적인 외교 범위를 아프리카까지 포함시킨 광범위한 범위를 '인도-태평양'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지리적 범위 확대는 제2차 아베 정부의 '지구의의를 부감

89/ 外務省, 『外交青書2023』, p. 30.

하는 외교'로 단적으로 나타나듯 글로벌 차원에서 일본의 역할을 전개하겠다는 지향성의 표현이다. 또한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외교의 지리적 범위를 보다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인도가 신흥국의 한 국가로서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존재감을 높이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여러 국가가 고도성장을 달성하고 있다는 변화를 받아들여서 세계정치의 중심이 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한편 2017 외교청서에는 중국 견제와 배제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설명하면서 민주주의 등의 보편적 가치 및 이에 기반한 발전의 중요성과 해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법의 지배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위와 같은 가치를 따르지 않는 국가, 즉 중국을 '배제'하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이 내세우는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움직임이 명백하게 진행되면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폭넓은 국제사회 파트너와 협력해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유지 및 강화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기시다 총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전개를 핵심사항 중 한 개로 하는 '평화를 위한 기시다 비전'을 발표하였다.<sup>90/</sup> 이 중

90/ '평화를 위한 기시다 비전'의 주요 5개의 기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강화와 FOIP의 새로운 전개, 둘째, 일본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 미·일동맹의 역지력·대처력의 일층 강화, 유지국(有志國)과의 안보협력 강화, 셋째,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현실적인 대응 추진, 넷째, 유엔 안보리 개혁을 비롯한 유엔의 기능 강화, 다섯째, 경제안보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국제적 연계 강화. 外務省, 『外交青書2023』, p. 30.

에서 지금까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대응을 더욱 가속하여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개발원조)를 통한 국제협력력을 적정하게, 그리고 효율적,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ODA를 확충하는 등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2023년 봄까지 새로운 플랜을 발표할 것을 표명하였다.

2023년 3월 20일 인도에서 기시다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플랜을 발표하였다.<sup>91/</sup> 새로운 플랜의 목적은 국제사회를 분단과 대립이 아닌 협조로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역사적 전환기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사고와 대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지금의 역사적 전환기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각국의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국제질서 존재에 관한 일치된 사고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지지와 찬동을 확대해왔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비전은 타당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전환기에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기본적 사고는 변하지 않았다. ‘자유’와 ‘법의 지배’를 옹호하고 ‘다양성’, ‘포섭성’, ‘개방성’을 존중한다.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하여 향후 가져야 할 접근법은 ‘대화’에 의한 규칙 형성, 법의 지배에 기반한 ‘대등한 파트너십’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인간’에 주안점을 둔 접근법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 호주, 인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 한국, 캐나다, 유럽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중동과 아프리카,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공유하는 지역을 확대해서 ‘공창(共創)’의 정신으로 대응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

91/ 首相官邸, “岸田総理大臣のインド世界問題評議会における政策スピーチ(2023年3月20日),”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3/0320\\_speech.html](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3/0320_speech.html)> (검색일: 2023.6.13.).

이러한 전환기에 적합한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협력의 4가지 기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둥은 ‘평화의 원칙과 변영의 규칙’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평화를 수호한다는 가장 근원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권 및 영토의 존중 등 유엔헌장의 원칙들의 옹호, 일방적인 현상변경에 대한 반대를 강조하였다. 여성, 평화, 안보의 시점도 중시한다. 또한 수준 높은 경제연계의 추진과 스리랑카의 채무재편을 예시로 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금융의 규칙 형성도 언급한다.

두 번째 기둥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협력의 ‘새로운 역할’인 ‘인도-태평양 방식의 과제 대처’이다. 새롭게 기후변화, 식량안보, 국제보건, 사이버 안보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협력을 더하고 각국 사회의 강인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다자간 ‘동등한 파트너십’을 실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세 번째 기둥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협력의 핵심적 요소인 ‘다층적인 연결성’이다. 다양한 면에서 각국을 연결해서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전체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3개의 중요지역(동남아시아, 남아시아, 태평양 도서지역)을 언급하면서 일-아세안 통합기금에 1억 달러의 신규 거출과 벵갈만과 인도 북동부를 연결하는 산업가치사슬 구상을 발표하였다. 새롭게 ‘사람(人)’에 착목한 ‘지(知)’의 연결성도 덧붙였다.

네 번째 기둥은 ‘바다’에서 ‘하늘’로 넓어진 안보·안전 이용의 대응이다. 기존 대응에 더해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업대책과 동지국(同志國)의 군(軍)에 대한 협력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하늘’도 포함한 공역 전체의 안전 및 안전을 확보한다.

---

## 2. 정책

2010년 전후부터 새롭게 일본 외교의 범위를 인도와 인도양을 넘어 폭넓게 바라보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질서 구상의 제창을 촉진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우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 간의 힘의 균형 변화이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진원지였던 미국 경제가 받은 타격은 컸고, 경제위기가 세계로 파급됨으로써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시스템의 정통성에 대해 커다란 의문이 발생하였다. 또한 경제위기에 의해 타격을 받은 미국과 유럽 경제를 대신해서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국 경제의 성장과 존재감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국제적인 경제 거버넌스 체제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추세를 배경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 외교는 기존 ‘도광양회’를 표방한 비교적 온건한 ‘융화 외교’에서 중국의 국익 추구를 전면에 내세우는 ‘대국 외교’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주변국에 대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과 같이 주권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강경 자세를 나타낸 것이다. 두 해역에서 중국 공선의 움직임은 활발해졌고, 센카쿠 제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하고 있는 일본과 남중국해 문제의 관계국인 일부 아세안 국가들을 자극했고, 대중 위협 인식을 증가시켜서 해양안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본격적으로 높아졌다. 게다가 2010년에는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넘어서면서 중국은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것은 일본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아시아에서 유일한 경제대국’이라는 ‘특별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추세를 의미하였다.

## 가. 일본의 해양안보 강화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해양국가 일본은 과거부터 해양세력으로부터의 위협을 가장 커다란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도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고, 현재도 세계 수준의 강력한 해상자위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특히 해공군 증강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해상으로의 진출은 일본에게 매우 심대한 안보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새로운 형태의 해양진출 확대를 모색하면서 일본에게 새롭고 심각한 해양안보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2012년 센카쿠 제도(尖閣諸島) 국유화 이후 중국 공선(公船)의 영해 침범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북한 목선이 동해를 건너 일본 해안가에 표착(漂着)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일본은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해양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일본은 그동안 전통적 해양안보를 담당했던 해상자위대에 더해 위와 같은 새로운 해양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해상보안청이 동중국해와 동해라는 두 곳의 위협요인을 담당하면서 임무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새로운 해양안보 위협을 단순한 국내안보 차원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나가기 위해 해양안보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계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대응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해양질서에 관한 정책 발신과 해양법 지식의 국제사회와의 공유, 둘째,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을 확대하기 위한 규칙 만들기, 셋째, 인도양과 태평양에 걸친 연결성의 실현, 넷째, 능력구축지원을 통한 거버넌스 강화, 다섯째, 해양안보 및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해양질서에 관한 정책 발신과 해양법 지식의 국제사회와의 공유를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국에 대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등에서 해양질서에 관한 정책 발신과 각종 연수 등을 통해 해양법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을 확대하기 위한 규칙 만들기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과 일·EU경제연계협정(Japan-EU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EU EPA), 미·일무역협정, 그리고 2021년 1월에는 일·영포괄적경제연계협정(일·영 EPA)이 발효되었다.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 질서의 유지 및 강화를 향해 경제·통상 분야에서 규칙 만들기를 주도하고 있다.

세 번째인 인도양과 태평양에 걸친 연결성의 실현을 위해, ‘메콩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호치민, 프놈펜, 방콕과 같은 거대 도시를 연결해서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남부경제회랑과, 베트남 다낭에서 라오스, 태국 내륙부를 연결해서 미얀마를 통해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동서경제회랑 등의 연결성 강화로 이어지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네 번째인 능력구축지원을 통한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는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대국 정부의 재정정책과 공적 채무관리에 관한 능력강화를 목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의 국가별 연수 실시와 어드바이저의 파견 등을 아시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안보 및 해상안전 확보와 관련해서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대해 순시선



과 연안감시레이더를 비롯한 기자재 제공, 전문가 파견과 연수를 통한 인재 육성과 같은 방법으로 해상법 집행능력 구축 지원과 해양상황파악(Maritime Domain Awareness: MDA)능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sup>92/</sup>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인도양, 태평양,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여 확대 및 이 지역 연안국의 해상보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 법의 지배, 자유무역, 항행의 자유, 2) 경제 번영, 3) 평화와 안정의 확보라는 3가지 핵심 사항을 인도-태평양 구상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해상전략과 관련해서 해양에서 법의 지배와 같은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항행의 자유와 해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교통로(sea lane)에 인접해 있는 연안국의 해양경찰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93/</sup>

해상보안 인재협력과 순시선 제공 등과 함께 일본은 미국 이외의 국가들과 다층적인 국제 안보환경을 형성해 나가려고 한다.<sup>94/</sup> 일본의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능력구축지원(capacity building)’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다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일본 주도의 해상보안기관 관련 다자 협력은 2000년부터 북태평양 주요 6개국으로 구성된 북태평양해상보안포럼(North Pacific Coast Guard Forum: NPCGF)과 아시아 지역 등 19개국 1지역으로 구성된 아시아해상보안기관장관급회의(Heads of Asian Coast

92/ 外務省, 『外交青書2023』, p. 31.

93/ 이기태, “일본 해상보안청 역할 강화의 흐름과 시사점,” 『일본공간』, 제28권 (2020), p. 137.

94/ 르웰린(James D. Llewelyn)은 일본 해상보안청을 통한 대아세안 외교를 ‘White Hull Diplomacy’라고 부르면서 아세안 지역 내 비전통 안보 이슈가 존재하므로 군사동맹이 아닌 해상보안청에 의한 외교가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James D. Llewelyn, “Preventive Diplomacy and the Role of Civil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Strategic Analysis*, vol. 41 (2017) pp. 49~60.

Guard Agencies Meeting: HACGAM)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38개 국가, 지역, 기관으로 구성된 세계해상보안기관장관급회의(Coast Guard Global Summit: CGGS)를 개최하고 있다.<sup>95/</sup>

현재 일본의 대아세안 해상보안능력향상 지원 형태는 ‘현지형’과 ‘수입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지형’ 능력향상 지원으로 먼저 2017년 10월 아세안 국가의 해상보안기관의 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모바일 코퍼레이션 팀’이 발족되었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단기전문가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순시선과 항공기 파견, 순시선 공여, 아세안 국가들의 해상교통관제센터(Vessel Traffic Service: VTS)의 관제관 인재육성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수입형’ 능력향상 지원으로는 해상보안정책과정(1년, 석사과정)을 2015년 10월에 개강하였는데 해상보안청 및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가 참가하였고, 1년 이내 과제별 연수도 진행되고 있다.<sup>96/</sup>

또한 글로벌 과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해양에서의 항행 및 비행의 자유와 안정을 확보하고, 인도,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 연안국 자신의 해양안보에 관한 능력 향상에 준하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훈련 및 연습, 부대간 교류를 포함한 적극적 기항 등을 추진하면서 관계국과 협력해서 해적 대응, 해양상황파악 능력 강화에 협력하고 있다.

## 나.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대응과 인도와의 협력

2010년은 중·일관계에서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진 해이다.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GDP 규모로 세계 2위에 올라섰고, 센카쿠 제도에서 중국 어선의 일본 순시선 충돌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일

95/ 이기태, “일본 해상보안청 역할 강화의 흐름과 시사점,” p. 139.

96/ 위의 글, p. 139.

본이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하자 중국의 압력이 이어져 결국 중국 선장을 돌려보냈는데, 이로 인해 당시 민주당 정부가 굴복했다는 인식 아래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위협론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리고 등장한 아베 정부는 대중국 견제전략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중·일 갈등과 대립 상황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몽’을 통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내세우며 공세적 대외정책을 전개하면서 2013년 9월 일대일로 구상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일대일로의 연선(沿線)에 위치하고 있는 70여 개국은 세계 인구의 약 64%, 전 세계 GDP의 약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 있다.<sup>97/</sup> 중국은 중국식 가치, 중국식 발전 모델 등의 전파와 함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전향적으로 추진하였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한 육상 네트워크, 해상 네트워크의 구축은 중국의 경제영토 확대, 정치적 영향력의 확산으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일본에게는 그만큼 경계 대상이었다.<sup>98/</sup> 즉 중국의 팽창주의 대외정책과 일대일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일본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게다가 중·일관계에는 과거사 문제, 영유권 문제 및 지역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항상 갈등의 불씨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인 2013년 1월 16일부터 첫 해외 순방지로 동남아의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하였고, 2014년 9월 29일 제2차 내각 발족 직후에 행한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는

97/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세안·인도연구센터 편,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평가 및 추진방안』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pp. 310~311.

98/ 江原規由, “一帯一路の現段階と日本,” 『國際問題』, no. 673 (2018), pp. 42~50.

미국 등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와 같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할 것을 강조하며,<sup>99/</sup> 주요 국가들과의 가치 연대를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할 것을 표명하였다.

그러므로 아베 총리는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맥락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대응으로 2016년 8월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일본이 기업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지만,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적은 중국의 팽창주의적 대외정책과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일방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기업 차원의 협력 수준에서는 일대일로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의 신형대국을 향한 공세적 대외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고, 일대일로 구상에서는 중국의 팽창이라는 전략적 속성에도 변화가 없다. 일본도 이를 잘 인지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 견제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

따라서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인도를 전략적으로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인도가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대치 중이고, ‘일대일로’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핵보유국이자 신흥 경제대국이다.

아베 총리와 모디 총리는 2017년 9월 14일 인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고, 2018년 10월 29일 도쿄 정상회담에서는 자위대와 인도군의 공동훈련 확대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하고, 미-일-인 3국 협력 강화

99/ 日本外務省, “第百八十七回國會における安倍内閣總理大臣所信表明演説,” 2014, 9.29.

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결성을 강화하면서 일본과 인도의 외교국방회의(2+2회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인도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에 적극 동참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다. 미·일동맹 강화

중국의 강대국 부상과 공세적 팽창주의에 대해 일본의 독자적 대응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의 신형대국화와 공세적 팽창주의 대외정책에 대해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대응하여 왔다.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은 집단자위권 해석 개헌,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재개정 등을 통하여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일본 나름의 전략적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동맹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발언을 하였고, 취임 후에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중시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도하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탈퇴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와 일본의 전략적 역할 증대 전략을 선택하였다. 아베 총리는 2017년 11월 6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에 합의하였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일이 파트너가 되어 함께 추진하는 전략으로 발전시켰다.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후퇴, 미·일동맹의 불확실성, 미국의 통상압박 등을 우려하였다. 일본은 대응전략으로 미·일동맹 강화 전략을 선택하였다. 즉,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였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미·일동맹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인식했고, 이에 미·일동맹 강화와 더불어 일본의 전략적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였다.<sup>100/</sup>

일본은 미국이 추구하는 대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일본의 전략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적 맥락에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제시되었다. 즉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적은 미·일동맹 강화이며, 일본의 전략적 역할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의해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확대되었다. 미·일이 파트너가 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일·인·호로 구성된 쿼드 협력으로 연계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일동맹 강화와 쿼드협력 전략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일동맹 강화가 핵심이며, 최근에는 안보분야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2년 말에 발족한 제2차 아베 내각 아래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역대 정부의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안전보장관련 법제를 제정하고 미군과 자위대와의 방위협력의 여지를 확대하였다. 또한 미·일 방위협력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미·일방위협력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그동안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조치는 미국측의 이니셔티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의 특징은 일본측의 ‘능동성’이다. 일본의 자세의 배후에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동시에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과 미국에 의한 대일 방위공약에 대한 불안이 일본측에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G제로의 시대’의 도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국가 중의 하나이다.<sup>101/</sup>

100/ 이기태·배정호,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 56.

101/ 菊地努, “「インド太平洋」戦略の地政学: 地域秩序の主体は誰か,” 『国際問題』, No. 687 (2019年12月), p. 5.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의 국내정치 분단, 국민의 국내지향성, 동맹을 경시하는 지도자의 등장을 염두에 두면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 이행에 일본이 일말의 불안을 가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동맹의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대일 방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중국과의 전쟁을 각오하는 매우 큰 결단을 필요로 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 방위에 미국의 결의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일본에서 생겨났다.

자국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확실하게 미국의 지원을 확보하는 관계를 구축해 두는 것이 일본의 지상과제이다. 일본은 자국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임을 미국의 정부와 국민에게 각인시키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다.<sup>102/</sup>

## 라. 미·일·인·호 쿼드 간 협력

아베 총리 주도로 일본, 미국, 호주, 인도는 2007년 5월 25일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4개국 구상(Quadrilateral Initiative)을 협의하였다. 아베 총리는 후속 작업으로 8월 인도 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일본과 인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바깥쪽, 즉 인도-태평양 연안을 따라 ‘자유와 번영의 호’를 형성하기 위해 미국, 호주와 함께 인도양부터 서태평양까지의 해양수송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호주, 싱가포르와 함께 1992년부터 미국과 인도 해군이 정례적인 공동훈련으로 시작한 말라바(Malabar) 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sup>102/</sup> 위의 글, p. 5.

말라바 훈련 장소는 인도 동해안의 항구도시인 비사카파트남(Visakhapatnam)부터 말라카 해협의 관문을 확보할 수 있는 안다만 니코바르 군도(Andaman and Nicobar Islands) 동쪽까지 이어지는 벵골만 해역이지만, 그것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공동으로 말라카 해협에서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구축의 일환이었다.<sup>103/</sup> 하지만 중국이 이러한 4개국 구상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호주와 인도는 국내 사정과 대중 관계를 고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고 결국 이 구상은 좌절되었다.

미·일·인·호 쿼드 국가 간 안보협력은 아베 총리가 2012년 다시 정권을 되찾으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정권을 잡기 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아시아의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구상을 발표하였다.<sup>104/</sup> 아베 총리는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일본, 인도, 호주, 미국의 하와이로 구성된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 속에서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포괄하는 해양 공공재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은 최대한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하였다.

한편, 실질적인 안보협력은 쿼드 국가 전체를 포함하는 형태로는 아직 진전되지 않고 있다. 대신, 미·일·호, 미·일·인 등 3자 형태의 안보협력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 前 방위상은 일본이 2015년부터 참여해왔던 말라바 훈련에서 2016년부터 정식 회원국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미국과 일본, 일본과 인도 각각의 양국 관계는 매우 중요한 방위협력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103/ 김석수·정혜경, “인도·태평양 시대와 일본과 인도 관계,” 『일본연구』 제81호(2019), p. 16.

104/ Shinzo Abe,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있고, 미·일·인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광범위한 해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훈련 실시를 통해 안보 및 국방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무엇보다 말라바 훈련은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2017년 9월 미국, 일본, 인도 3국 외교장관회담이 뉴욕에서 개최되었는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해양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10월에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인도를 방문하기 직전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안보 및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력 체제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제안에 호응하는 형태로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은 2017년 10월 25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정상급, 장관급, 국장급 전략대화 체제를 구축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무역 증진 및 해상교통로 안전을 위한 협력을 함께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외전략으로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필리핀에서 개최된 APEC 회의를 통해 10년 만에 4개국 국장급 협의를 재개하였다.

이후 쿼드 회의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제2차 쿼드 국장급 협의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4개국은 기존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포괄적 인도-태평양’으로 변경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연결성, 지역 안보 및 해양 협력의 공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 아세안의 중심성(centrality)’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 모디 수상은 6월 1일 개최된 ‘아시아 안보 회의(상그릴라 회의)’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열린 포괄적(inclusive) 지역’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전략, 한정된 국가들에 의한 클럽, 무언가를 지배하는 틀, 특정 국가에 대항하려는 어떠한 것도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4개국 회의의 전략성과 배타성을 회피하면서 중국도 포함해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후 4개국 회의에서는 ‘자유롭고 열린 포괄적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표현이 정착되었다.

#### 마. 일본 외교 지평 확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현상변경 국가로서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 그에 따른 국제 전략환경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화하는 상황에서 인도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 즉, 세계의 성장 중심이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며,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처럼 국제 전략환경의 변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강대국 정치를 펼치며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비록 미국과 중국은 G2로 불릴 정도로 초강대국이지만, 독자적으로 힘(power)을 행사하는 데에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둘러싸고 전략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으며 때때로 협력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한다.<sup>105/</sup>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sup>105/</sup> 이기태·배정호,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p. 61.

안정된 질서 유지와 국제문제 해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를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이들 국가가 아직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 형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일본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정치가 이들 국가를 둘러싸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강대국들의 동향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를 ‘스윙 국가(Swing State)’라고 부르면서 전략적으로 중시하기 시작하였다.<sup>106/</sup>

일본이 중시하는 스윙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아세안, 호주 등이다. 일본은 인도, 인도네시아, 아세안, 호주 등 스윙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중요한 전략외교의 과제로 설정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전략외교 전개는 인도-태평양으로의 외교지평 확대에 귀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적은 새로운 세계 성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고 열린 해양 질서를 수호함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주요 스윙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면서 일본 외교의 전략적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베 정부는 2013년 12월 전후 최초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서를 책정해서 발표하였다. 아베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일본이 지향해야 할 국가이념으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면서 일본의 독자적 방위력 강화, 미·일동맹 강화, 다층적 안보 네트워크 협력을 3대 안보전략 기조로 표명하였다.

아베 정부는 안보 측면에서 미국, 호주, 인도와 함께 4자 안보대화를 통한 쿼드 국가 간 안보 협력을 강조한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106/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 319.

전략은 주로 미국을 비롯한 쿼드 국가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목표 및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안보 네트워크 구축이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쿼드 국가 이외에 ‘미·일동맹+α’라는 연속선 상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국, 프랑스 등 준동맹 국가들과의 안보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안보 아키텍처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즉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안보협력국들과의 네트워크 확대 및 연결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외교청서 2018’에서 일본 외교의 6대 중점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미·일동맹 강화 및 동맹국·우호국과의 네트워크화 추진이다. 그 내용은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고 동맹국·우호국 간에 중층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근린 제국과의 관계 강화이다. 이 중에 유럽연합과 나토를 활용하면서 유럽 국가와의 관계를 중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특히 영국, 프랑스와 안보·방위 분야에서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와 같이 아베 정부가 표명한 지침 및 전략 구상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제 인도-태평양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안보 활동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한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핵심축으로 하면서 안보협력 대상을 호주, 인도, 나토, 아세안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스윙 국가에 대한 전략외교와 협상력(bargaining power)의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초강대국이라고 해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독자적인 영향력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편적 가치, 법의 지배에 공감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바로 호주, 인도 및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아세안의 유력국가들이다. 미국과 중국은 분명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유력한 스윙 국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본은 스윙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대미, 대중 협상력을 높이려고 한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전략적 견제와 정경분리의 전술적 대응이라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일본은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패권주의 추구를 견제하면서도, 세계 성장센터의 변화,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수뇌부의 아베 총리를 향한 끈질긴 일대일로 참여 요청과 설득, 일본 재계의 정계를 향한 일대일로 참여 압박, 중국에 대한 견제와 협력의 강은 대응을 고려하여 기업 간 협력 수준에서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sup>107/</sup>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일대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 미얀마·파키스탄·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의 일대일로에 대한 불만, 일대일로에 대한 인도의 경계,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중국의 재정능력 한계 등을 고려한다면 제3국 시장의 참여를 통한 일본의 간접적인 일대일로 참가는 이를 이용한 일본의 경제적 공간 및 정치경제적 영향력의 확대, 중국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레버리지 확보라는 전략적 효과로 귀결될 수 있다.<sup>108/</sup>

이와 같이 ‘신남진론’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오세아니아 국가들과의 경제, 안보, 인프라 건설 등 다면적인 분야에서의 연계 강화 역시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정책이다. 그

107/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 348.

108/ 위의 글, p. 349.

배경에는 이 지역에서 수행해왔던 미국의 역할을 보완하는 측면과 이러한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보다 확실히 해두려는 기대가 있다. 앞서 언급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과 ‘쿼드’는 이러한 일본의 노력의 일환이다.

한편 일본은 대립이건 협력이건 미·중 기축의 지역질서에는 현실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일본이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대중 무역조치는 일본에게 중요한 국제 자유무역 질서를 약화시켜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준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중대립에 말려드는 사태를 일본은 피하려고 한다. 일본은 호주와 인도,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이 지역의 국제질서가 미·중 관계를 넘어선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구조가 됨으로써 일본의 외교 공간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 3. 대한반도 영향

중국의 부상에 따른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력균형 변화에 대해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의 세력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중국 내부의 강경파를 견제하고 협조파의 발언권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세력균형 유지 수단으로는 ① 일본의 방위력 강화, ② 미·일동맹 강화, ③ 지역 각국과의 안전보장 협력 강화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③의 파트너로는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 한국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삼아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 중 하나가 쿼드이지만, 아직

한국은 쿼드의 파트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미·일동맹의 틀 속에서 ① 주일미군 기지 제공, ②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작전 지원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방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미·일이 방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15년에는 일본이 평화안보법제를 통과시킴으로써 제한적이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비전투 임무에 국한되었던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작전지원 범위가 전투 임무로까지 확대되어 자위대는 괌이나 하와이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한반도 근해에서 행동하는 미군을 방호하거나, 북한 근해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 현재 일본의 한국 방위에 대한 기여는 역사상 최대 수준에 올라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22년 12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인태 전략에 있어 한국과의 연계’를 들었다. 2023년 3월 기시다 총리의 인도 연설에서도 한국을 인태 지역에서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 언급하였다.

사실 아베 정부 시기 일본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전략성’이 결여되었다. 2012년 아베 정부 출범 즈음 발표된 ‘다이아몬드 안보구상’과 이후 아베 정부가 구상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서는 한국을 상정하지 않았다. 특히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한·일 양자관계 현안에만 주목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2021년 기시다 정부 출범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즉 아베, 기시다 정부 모두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소극적 입장과 함께 단순히 대북 핵·미사일 대응 및 대북 제재 공조에 국한된 입장이었다.

현재 일본의 정책 우선은 ‘한·미·일’ 안보협력보다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있다. 그동안 일본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해서 대북 대응만을 상정했지만, 2023년 8월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 견제, 공급망 구축을 비롯한 경제안보 및 글로벌 현안까지 한·미·일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서 발표 및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가능하였다. 하지만 2023년판 방위백서를 보면 일본은 여전히 한국과의 안보협력보다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차원에서의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2023년판 방위백서에서 일본의 안보협력국 기술 순서를 보면 호주, 인도, 유럽에 이어 한국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특히 일본은 최근 유럽(나토)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인태 지역에 대한 유럽(나토)의 관여에 집중하고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본은 국제질서의 변동 상황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타이완 유사, 한반도 유사 상황에서 한·미·일의 역할분담에 관심이 높다. 즉 타이완 유사 상황에서 일본의 후방지원 역할, 특히 타이완 유사와 한반도 유사에 연계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미군 지원에 관심이 높다.

기시다 정부는 타이완 유사시 한국의 일정 역할, 예를 들면 타이완 유사시 정치적 지지 선언, 주한미군 전개 협조, 대북 억제 역할 등을 기대한다. 또한 한반도 유사 상황에서 일본은 비전투원후송작전(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NEO)과 관련한 한·미·일 사전협의, 북한에서 일본 열도로 밀려올 수 있는 난민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에 관심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북한 대량난민 대책, 유사시 장기전 수행 등 한반도 유사에 대비한 한·미·일



및 한·일 양자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현재 ‘중국 견제’의 차원에서 한·일 양국은 근소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협력의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 2022년 12월 한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달리 중국에 대해 기존 규범에 대한 도전 세력, 현상 변경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중국을 안보 위협 또는 견제 세력으로 바라보는 미국이나 일본의 인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인태 전략에서의 한·일 협력 가능성은 오히려 2023년 3월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3월말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p 하락한 30%로 집계되었다.<sup>109/</sup> 이는 강제징용 해법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인데, 낮은 국정지지도로 인하여 향후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정책적 추진력이 많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

## 4. 한국의 대응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28일,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다. 사실 2016년 아베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 밝혔지만, 그동안 외무성 홈페이지에 단지 2페이지 분량의 설명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동안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보다 상세한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3년 3월

---

<sup>109/</sup> “한일정상회담 계속된 잡음에...尹지지도 30%까지 하락,” 『매일경제』, 2023. 3.31., <<https://www.mk.co.kr/news/politics/10700885>> (검색일: 2023. 4.1.).

기시다 총리의 인도 연설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행동계획(action plan)이 발표되었다.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과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려해서 향후 한국이 일본과 어떤 인도-태평양 협력이 가능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 안보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일본이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도 쿼드 회의와 같은 다자안보협력 및 역외 국가인 영국, 프랑스와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목적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 미국의 관여가 후퇴하는 상황을 대비하려는 것도 있다. 즉 특정 국가와의 동맹관계에 의존하는 리스크(risk)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하지만 향후 한반도 및 동아시아,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과 안보협력 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다자주의 안보협력 체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안보를 포함한 비전통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더욱 다자주의 안보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sup>110/</sup>

둘째,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아이덴티티(identity)를 인식하고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 안보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전략적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먼저 시작하고, 향후

---

110/ 2019년 들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로 한·일 갈등이 격화되었다. 일본의 경제보복(7월) 및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8월)으로 한·일 간 안보협력에도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2023년 한·일관계 개선 이후 향후 한·일 간 비전통 안보 분야부터 구체적인 협력 사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국제 전략환경 변화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중국이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규범 준수를 내세운다. 이러한 아세안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게임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당당하고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으로부터의 철수 혹은 반대로 과도한 개입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 해결에 일정 정도 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비전통 안보 분야에 중점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전념해야 한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는 미·중 간 이분법적 선택을 피해야 하며, 따라서 철저하게 비전통 안보 분야 혹은 능력 구축지원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신남방정책을 계승 및 보완하고 있는데 신남방 정책에서는 3P, 즉 사람(people)·평화(peace)·번영(prosperity)을 핵심 요소로 내세웠다. 그중에서도 ‘사람(people)’의 가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인간안보’로 연결할 수 있다. 인간안보는 단순한 안보협력만이 아닌 정부개발원조(ODA)를 비롯한 경제외교, 공공외교 등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추진해야 한다.

물론 일본은 해양국가로서 반도국가인 한국과 달리 영국, 프랑스와의 해양 안보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도 이제는 단순한 북한 대응을 위한 안보협력 차원에서 벗어나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인한 국제전략환경 변화

를 인식하고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 안보협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사례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도-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일본측의 관심 유도가 필요하다. 한국은 대북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 변동에 관심이 적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아베 총리가 발언한 ‘타이완 유사’가 곧 일본 유사’라는 인식(중국) 및 홋카이도 방면 대응 강화(러시아) 등 ‘2정면 위협’을 최우선 안보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의 외교정책 우선도에서 ‘한반도 문제’보다는 ‘타이완 유사’에 관심이 높다. 동아시아 국제질서 현상유지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각각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즉 ‘타이완 유사’와 ‘한반도 유사’를 연계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역할 분담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에 대한 한·일 간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2023년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논의된 핵협의 그룹을 비롯한 ‘핵 확장억제’ 관련 논의 사항에 대한 일본측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 IV. 인도-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

---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인도-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

## 1. 인식

### 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인식

2022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세기는 곧 아시아-태평양의 세기(亚太世纪)라면서,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을 확고히 추진하고 공동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만듭으로서 ‘아태운명공동체(亚太命运共同体)’를 함께 건설할 것을 주창한 바 있다.<sup>111/</sup> 현재까지도 중국 정부는 ‘인도-태평양’이 아닌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고수하고 있다. 즉, 인도-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꺼내 든 이후의 시기가 아닌, 오랜 시간 중국의 주변으로서 존재한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을 대하는 중국의 관점을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은 아시아와 태평양을 포괄하는 지역이며, 중국 등 53개 국가를 포함한다.<sup>112/</sup> 중국은 자국이 아태지역에 뿌리를 둔 국

111/ “坚守初心 共促发展 开启亚太合作新篇章,” 人民网, 2022.11.18., <<https://baijiahao.baidu.com/s?id=1749782470780200868&wfr=spider&for=pc>> (검색일: 2023.5.4.). 이하 아시아-태평양은 맥락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혹은 아태로 표기한다.

112/ ESCAP, “ESCAP Members and Associate Members,” <<https://www.unescap.org/about/member-states>> (검색일: 2023.6.9.).

가<sup>113/</sup>이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중이다. 2019년 발간한 중국의 국방백서(신시대의 중국국방(新时代的中国国防))에 따르면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를 활용해 국방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지역 안보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중국-아세안 국방장관 간 비공식 회동, 아세안 국방장관 확대회의 등 교류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증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중국해의 상황은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대테러협력 조정 메커니즘이 강화되는 등 아시아 특색의 안보가 끊임없이 발전 중이라고 강조하였다.<sup>114/</sup>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은 글로벌 차원의 경제와 전략의 무게중심이 점차 아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강대국 간 파워 게임이 전개되며 지역안보의 불확실성 역시 증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sup>115/</sup> 보다 구체적인 중국의 인식과 정책은 2022년 5월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ESCAP) 회의 당시 ‘아태운명공동체를 함께 건설하자(共建亚太命运共同体)’를 주제로 한 연설<sup>116/</sup>에서 잘 드러난다. 왕이는 전쟁으로 인한 빈곤과 기아에 직면했던 아태지역이 지난 75년 동안 평화와 안정, 지역 간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경제

113/ “(两会受权发布) 国务委员兼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新华网, 2022.3.8., <[http://www.news.cn/2022-03/08/c\\_1128448602.htm](http://www.news.cn/2022-03/08/c_1128448602.htm)> (검색일: 2023.5.4.).

114/ 中国国务院, “新时代的中国国防”(2019), <[https://www.gov.cn/zhengce/2019-07/24/content\\_5414325.htm](https://www.gov.cn/zhengce/2019-07/24/content_5414325.htm)> (검색일: 2023.6.9.).

115/ 위의 글.

116/ 中国外交部, “共建亚太命运共同体: 王毅国务委员兼外长在联合国亚太经社会第78届年会开幕式上的讲话,” 2022.5.23., <[https://www.mfa.gov.cn/web/wjbjz\\_673089/zyjh\\_673099/202205/t20220523\\_10691367.shtml](https://www.mfa.gov.cn/web/wjbjz_673089/zyjh_673099/202205/t20220523_10691367.shtml)> (검색일: 2023.6.9.).



가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태의 기적(亚太奇迹)’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어렵게 일군 성과인 만큼 각 국가는 이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힘을 합쳐 지켜나가야 함에도, 오늘날 아태 지역은 냉전적 사고가 만연하고 일방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으며 국제질서가 심각한 손상을 입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왕이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세계의 미래와 직결된다면서,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개념은 희석되어서는 안 되며 아태협력 역시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아태운명공동체를 모두가 구축하여 협력의 영광을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sup>117/</sup>

표 IV-1 아태운명공동체 구축의 세 가지 원칙과 중국의 역할

원칙	주요 내용	중국의 역할
평화와 안정의 유지	△유엔헌장 준수, 냉전적 사고와 일방주의 배격, △군사집단과 진영대결을 풀어 오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 △공통/종합/협력/지속가능한 안보관 견지, △각국의 합리적인 안보 관심사 중시, △자국의 안보를 타국의 불안한 안보 위에 세우는 것에 반대, △대화화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견지,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을 지지, △지역 내 긴장 고조와 대립을 부추기는 모든 언행에 반대	△아태지역 국가들과 협력해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를 이행, △중국특색의 문제 해결 실천(아프가니스탄, 이란 핵, 한반도 문제 등 사안의 정치적 해결을 적극 추진), △아세안 국가들과 협의를 통해 ‘남중국해 행동 지침’을 이행
경제발전을 위해 협력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지역통합 가속화, △자유무역지대 설립 촉진, △평등하게 협상하고 모두가 참여하며 혜택을 받는 개방된 아태경제를 건설,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 유지, △글로벌 공급망의 인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유지, △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 △높은 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촉진, △아태지역 간 상호연결을 촉진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 △지역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이행(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 △포괄적, 진보적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全面与进步跨太

117/ 위의 글.

원칙	주요 내용	중국의 역할
	세계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아태의 기회(亞太機遇)'를 만들 필요	平洋伙伴关系协定) 및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数字经济伙伴关系协定) 가입 추진
상호원원 실현	△정책 간 연계 강화, △빈곤퇴치와 식량안보, 전염병 대응, 녹색발전, 디지털 경제 등 분야에서 실용적 협력을 심화,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어젠다 실천을 위해 공헌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GD)를 활용한 2030 지속가능발전 어젠다 이행, △세계개발고위급회의(全球发展高层会议)를 적시에 개최, △재정 지원 확대,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의 구축을 촉진

출처: 中国外交部, 共建亚太命运共同体: 王毅国务委员兼外长在联合国亚太经社会第78届年会开幕式上的讲话(2022.5.23)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이처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희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거부함과 동시에 아태운명공동체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 지명의 유래가 곧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중국 언론은 2022년 3월 미국-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리세룽(李显龙) 총리가 인도-태평양이 아닌 아시아-태평양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에 주목하면서, 인도-태평양 용어는 반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을 덧붙인 바 있다.<sup>118/</sup> 이는 중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 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인식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냉전적 사고에서 비롯된 중국봉쇄 전략이라고 평가하는 등 매우 부정

118/ “拜登谈“印太”，李显龙谈“亚太”，” 环球时报, 2022.3.31., <<https://baijiahao.baidu.com/s?id=1728771213464272739&wfr=spider&for=pc>> (검색일: 2023.5.4.).

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태 전략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첫 반응은 2017년 11월 13일에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인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대변인은 아시아-태평양이든 인도-태평양이든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미국과 일본이 제창한 인태 전략은 평화발전과 상생협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해야 하며 정치화가 되거나 배타적인 협정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sup>119/</sup>

2019년 발간한 중국 국방백서는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배치와 개입을 강화함으로써 아태지역의 안보에 복잡한 요소를 더하고 있다”면서 인태 전략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미국이 한국에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해 역내 전략적 균형과 국가들의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들었다. 또한 인태 전략에 참여하는 일본에 대해 군사안보정책을 조정함으로써 ‘전후 체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며 군사적 외향성 증대를 피하고 있다고 평가함과 동시에, 호주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아태지역에 대한 군사적 참여를 강화하며 안보 문제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년 3월 왕이는 인태 전략의 진정한 목적이 미국 주도의 패권 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인태 버전의 ‘나토’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는 아세안 중심의 지역협력과 지역 당사국의 장기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중국은 아태지역에 뿌리를 둔 국가라면서, 앞으로도 인도-태평양의 소집단(小圈子) 대결에 저항하고 아태협력을 위한 큰 무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sup>120/</sup> 여기서 언급한 소집단이란

119/ 中国外交部, “2017年11月13日外交部发言人耿爽主持例行记者会,” 2017. 11. 13., <[http://lk.china-embassy.gov.cn/fyrth/201711/t20171113\\_1489975.htm](http://lk.china-embassy.gov.cn/fyrth/201711/t20171113_1489975.htm)> (검색일: 2023. 5. 4.).

120/ “(两会受权发布) 国务委员兼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

쿼드와 오키스 등 미국 주도 하에 창설된 협의체를 포함한다. 이처럼 중국은 인태 전략이라는 큰 틀 하에 전개되는 쿼드와 오키스에 대해서도 고도로 경계하고 있다. 2022년 4월 중국 외교부는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주제로 회의를 한다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V-2** 쿼드 협력에 대한 중국의 세 가지 입장

분류	주요 내용
민주주의는 소수국가의 특화가 아닌 전 인류의 공통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민주적 이념은 무너진 지 오래인데도 다른 나라에 ‘미국식 민주주의 기준’을 강요</li> <li>• 민주적 가치를 앞세워 선을 굽고 소집단을 짜깁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배신</li> </ul>
중국은 지역 질서의 ‘복음(福音)’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평등/개방/포용적이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아태지역 안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li> <li>•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집단을 구축하고 진영대결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반대</li> <li>• 한 나라 혹은 몇 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의하는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질서’가 아닌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시스템과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인정하고 옹호</li> </ul>
다자 간 메커니즘은 평화적 발전, 국가 간 상호신뢰에 도움이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등 관련 국가는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길 바람</li> </ul>

출처: 中国外交部, 2022년2월9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的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한편 2023년 3월 오키스가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에 관한 세부 계획을 공개<sup>121/</sup>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했다.

记者提问,” 新华网.

<sup>121/</sup> “Aukus deal: US, UK and Australia agree on nuclear submarine project,” *BBC*, March 14, 2022, <<https://www.bbc.com/news/world-australia-64945819>> (Accessed June 9, 2023).

표 IV-3 오커스의 핵잠수함 협력에 대한 중국의 세 가지 입장

분류	주요 내용
미·영·호의 핵 비확산 약속은 기만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국 간 핵잠수함 협력은 사상 처음으로 핵보유국이 핵잠수함의 동력으로 및 다량의 군용 고농축우라늄을 비핵보유국에 이전하는 것으로서,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의 현행체계로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할 수 없음</li> <li>• 호주가 해당 핵물질을 핵무기 제조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음</li> <li>• 3국 간 핵잠수함 협력은 NPT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타격을 주는 심각한 핵 도미노 위험을 초래</li> </ul>
미·영·호는 IAEA 사무국 간 핵잠수함 안전감독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권리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영·호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호주 핵잠수함에 대한 안전감독을 면제해줄 기관을 찾는 것임. 이는 원칙과 배치되는 것임</li> <li>• 기구전면보장감독협정(机构全面保障监督协定) 제14조에 대한 이견도 크므로, 이들은 규정을 독단적으로 해석할 권리도 없음</li> </ul>
핵잠수함 협력에 관한 안전감독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논의해 결정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조의 인용은 모든 회원국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나쁜 선례가 될 것임</li> <li>• 핵잠수함 협력과 관련된 안전감독 문제는 기존의 역사적 관행을 참조해야 하며, 관심 있는 모든 회원국들이 정부 간 프로세스를 통해 논의하고 합의를 모색할 필요</li> </ul>

출처: 中国外交部, 2023年3月15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的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경제 부문에서 중국은 미국이 인태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자국을 배제하는 등 일방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전략을 펼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 보고는 비록 인태 전략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최근 정세에 대한 중국 최고지도부의 인식과 대응원칙 등이 표명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표 IV-4** 제20차 당대회 보고 중 국제경제 부문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원칙<sup>122/</sup>

분류	주요 내용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세계화(逆全球化) 조류가 대두</li> <li>•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크게 증가</li> <li>• 외부로부터의 탄압·억제는 언제든지 확대될 가능성(‘담장 쌓기(筑墙设垒)’, ‘사슬 끊기(脱钩断链)’, 일방적 제재와 압박 등)</li> </ul>
대응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개방의 기본 국가정책을 견지하고 상호이익과 윈윈의 개방전략을 확고히 관철함.</li> <li>• 중국의 새로운 발전을 통해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을 추진하여 모든 국민에게 나은 혜택을 줌.</li> <li>• 경제 세계화의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촉진하며 양자, 지역 및 다자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 거시경제 정책 조정을 촉진하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제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함.</li> <li>• 세계 개발 협력에 대한 자원 투자를 늘리고 남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가속하기 위한 지원을 희망함.</li> </ul>

출처: 中国国务院, 习近平 : 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 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而团结奋斗——在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한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중국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2년 5월 중국 외교부는 어떤 명목의 지역 협력 틀이든 자유무역을 추진해야지 편법적인 보호주의를 해서는 안 되며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지역경제협력 플랫폼은 산업 체인의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되고 개방 협력을 촉진해야 하며, 대립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은 경제 문제를 정치화, 무기화, 이데올로기화하면서 경제적 수단으로 지역국가를 미·중 사

<sup>122/</sup> 中国国务院, “习近平 : 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 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而团结奋斗——在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2022, 10.16., <[https://www.gov.cn/xinwen/2022-10/25/content\\_5721685.htm](https://www.gov.cn/xinwen/2022-10/25/content_5721685.htm)> (검색일: 2023.6.11.).

이에서 편 가르기로 압박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인위적인 경제 디커플링과 기술 봉쇄, 산업 사슬 붕괴를 만들고 공급망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은 세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며 미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학계 역시 대체적으로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다. 췌시잉(左希迎)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배경에는 분명한 지정학적 계산이 있다면서, 미국이 인태 전략을 강요하는 것은 분열과 대립을 통해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 구조에 충격을 주고 역내 국가들의 장기적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아세안의 중심적 위치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지만 그 속내에는 자신들의 글로벌 패권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면서, ‘신냉전’을 일으키는 미국의 행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부언했다.<sup>123/</sup>

---

## 2. 정책

상술하였듯이 중국은 인태 전략을 미국 주도의 對중국 봉쇄전략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크게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 공조, △아태지역 주변국과의 협력,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안보, 경제, 문명) 제창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대응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국의 원칙은 핵심이익의 수호와 내정불간섭, 인류운명공동체 실

---

<sup>123/</sup> “构建开放包容的亚太安全架构(国际论坛),” 人民日报, 2022.5.15., <<http://world.people.com.cn/n1/2022/0515/c1002-32421733.html>> (검색일: 2023.6.12.).

현, UN헌장과 국제법의 준수, 다자주의 등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대응정책이 군사와 경제 등 미·중 간 경쟁이 직간접적으로 충돌하는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가.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 공조

먼저 군사 부문에서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를 활용한 다자적 차원의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태 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2019년 중국 국방백서는 상하이협력기구가 “동맹을 맺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不结盟、不对抗、不针对第三方)”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방과 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안보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sup>124/</sup> 상하이협력기구는 설립 이래 현재까지 평화사명(和平使命) 제하의 합동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다. 2021년 열네 번째로 개최된 ‘평화사명-2021’ 훈련의 경우 러시아 오렌부르크주에서 약 2주(9월 11일~25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회원국(중국,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옵서버국(벨라루스)에서 총 4,000여 명이 동원되었다. 중국은 리쥘청(李作成) 중앙군사위원 겸 연합참모장이 실전훈련을 참관하였다. 훈련에는 최근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드론공격 대응을 훈련과목에 처음으로 포함시키기도 했다.<sup>125/</sup> 장밍(张明) 상하이협력기구 사무총장은 국방안보협력이 상하이협력기구의 중요한 협력 분야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평화사명-2023 훈련이 러시아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추후 모든 회원국들의 합

124/ 中国国务院, “新时代的中国国防,” (2019).

125/ 中国国防部, ““和平使命-2021”联演亮点纷呈,” 2021.9.30., <[https://www.gov.cn/xinwen/2021-09/30/content\\_5640561.htm](https://www.gov.cn/xinwen/2021-09/30/content_5640561.htm)> (검색일: 2023.6.11.).



에 따라 타국을 초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sup>126/</sup>

한편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 가입국이자 쿼드에도 참여 중인 인도를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3년 5월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은 상하이협력기구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인도 외무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중·인 양국이 세계 최대 인구의 두 개발도상국으로서, 함께 양자협약의 교류를 수행하고 다자 간 틀에서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며 국제 및 지역문제에 대한 조정과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up>127/</sup>

다음으로 경제 부문에서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 플랫폼인 브릭스(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경제국)를 통한 대응정책을 구체화하는 추세이다. 2022년 6월 시진핑은 제14차 브릭스 정상회담 당시 연설을 통해 과학기술 독점과 봉쇄, 장벽을 통해 타국의 혁신과 발전을 방해하고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브릭스는 폐쇄적인 모임이나 소집단이 아닌 대가족을 바라보고 협력하며 윈윈하는 파트너라면서, BRICS+ 모델로 확장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sup>128/</sup> 회의 직후 발표된 「베이징선언(北京宣言)」에는 중국의 대응 기조가 세세히 스며들어 있다.

126/ 俄罗斯卫星通讯社, “上合秘书长: 将在俄罗斯境内举行“和平使命-2023”联合反恐军事演习,” 2023.1.5., <<https://baijiahao.baidu.com/s?id=1754153880488685314&wfr=spider&for=pc>> (검색일: 2023. 6. 11.),

127/ 中国外交部, “秦刚会见印度外长苏杰生,” 2023.5.5., <[https://www.fmprc.gov.cn/wjzbhd/202305/t20230505\\_11070654\\_shtml](https://www.fmprc.gov.cn/wjzbhd/202305/t20230505_11070654_shtml)> (검색일: 2023. 6. 11.),

128/ 中国国务院, “习近平在金砖国家领导人第十四次会晤上的讲话,” 2022.6.23., <[https://www.gov.cn/xinwen/2022-06/23/content\\_5697386.htm](https://www.gov.cn/xinwen/2022-06/23/content_5697386.htm)> (검색일: 2023. 6. 11.),

표 IV-5 제14차 브릭스 정상회담 「베이징선언」 주요 내용

분류	주요 내용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와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주의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UN헌장의 취지와 원칙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체제 하 유엔의 핵심 역할 수호</li> </ul> </li> <li>•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li> <li>• IMF 중심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글로벌 금융 안전망에 대한 지지 표명</li> </ul>
세계 경제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경제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브릭스의 역할을 강조</li> <li>• 코로나19 극복과 세계경제 회복 과정에서 디지털경제의 중요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릭스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등</li> </ul> </li> <li>• 신개발은행 확대를 지지, 브릭스 금융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 환영</li> <li>•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인프라 투자의 중요 역할 인식</li> <li>• 기존 국제통화 및 금융협정을 보완할 수 있는 비상준비 메커니즘 강화 필요성</li> <li>• 금융 분야의 정보보안 / 지불 분야에서 국가중앙은행의 추가 협력을 환영</li> <li>• 브릭스 신산업 혁명 파트너십의 공고화</li> <li>• 브릭스 국가 과학기술혁신 지도위원회의 주요 프로젝트 촉진</li> <li>• 디지털 브릭스 포럼 연례회의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협력 촉진</li> <li>• 브릭스 정부 간 관세협력 및 행정의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li> <li>• 지속가능한 개발 과정에서 에너지 안보의 근본적인 역할 강조</li> <li>• 브릭스 중앙은행 간 협력 메커니즘 /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갱신</li> <li>• 브릭스 노동연구기관 간 연구(코로나19 하 소득 및 고용 지원 등)</li> <li>• 브릭스 국가경제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 중요</li> </ul>

출처: 中国国务院, 金砖国家领导人第十四次会晤北京宣言(全文) (2022.6.23.)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 나. 아태지역 주변국과의 협력

중국은 아세안 등을 포함한 아태지역 주변국들과 군사 분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양자 간 신뢰를 강화하고 갈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중국 국방백서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운명공동체 인식이 높아졌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과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 주요 정책방향이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예시로 ‘중국-아세안 국방장관 비공식회담(中国-东盟防长非正式会晤)’과 ‘아세안 국방장관 확대회의(东盟防长扩大会议)’ 등을 제시했다.<sup>129/</sup> 이 중 중국-아세안 국방장관 비공식회담의 경우 2022년 6월에 제13차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웨이펑허(魏凤和) 중국 국방부장관과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하였다. 당시 양측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방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sup>130/</sup> 다음으로 아세안 국방장관 확대회의는 2022년 11월에 제9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웨이펑허가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하였다.<sup>131/</sup> 중국은 이러한 협상 기제들을 통해 남중국해의 상황이 안정되고 개선 중이며, 역내 국가들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균형 있고 안정적이며 개방, 포용적인 ‘아시아 특색의 안보구조(亚洲特色安全架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sup>132/</sup>

중국이 주창하는 ‘아시아 특색의 안보구조’ 개념에 대한 설명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단, 2017년 1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간한 「중국의 아태안보협력 정책(中国的亚太安全合作政策)」에서 명시된 아태지역의 안보협력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주장과 안보이념 등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129/ 中国国务院, “新时代的中国国防,” (2019).

130/ 中国国务院, “第十三次中国-东盟国防部长非正式会晤视频会议举行,” 2022.6.22., <[https://www.gov.cn/guowuyuan/2022-06/22/content\\_5697170.htm](https://www.gov.cn/guowuyuan/2022-06/22/content_5697170.htm)> (검색일: 2023.6.12.).

131/ 中国国务院, “第九届东盟防长扩大会在柬埔寨举行,” 2022.11.23., <[https://www.gov.cn/guowuyuan/2022-11/23/content\\_5728450.htm](https://www.gov.cn/guowuyuan/2022-11/23/content_5728450.htm)> (검색일: 2023.6.12.).

132/ 中国国务院, “新时代的中国国防,” (2019).

표 IV-6 「중국의 아태안보협력 정책」 주요 내용

분류	주요 내용
6대 정책적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발전을 촉진하고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경제기반을 공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대일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등</li> </ul> </li> <li>•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국가가 강대국 사이에서 편을 들 필요도 없고 들 수도 없음.</li> <li>- 강대국은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도전을 대처하기 위한 협력 필요</li> </ul> </li> <li>• 기존의 다자 간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주의 견지 / 일방주의 반대</li> </ul> </li> <li>• 규칙 건설 촉진 및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국가의 규칙은 국제규칙으로 간주할 수 없음.</li> <li>- 소위 법치라는 이름으로 타국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됨.</li> </ul> </li> <li>• 군사교류 및 협력 긴밀화,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힘의 증진</li> <li>• 갈등을 적절히 처리하고 좋은 환경을 유지</li> </ul>
2대 안보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중립, 협력, 지속가능한 안보관</li> <li>• 지역안보구조 개선</li> </ul>

출처: 中国国务院新闻办公室, 中国的亚太安全合作政策(2017.1.)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이와 더불어 중국은 2022년 11월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으로 「중국-아세안 포괄적전 략적동반자관계 행동계획(中国—东盟全面战略伙伴关系行动计划)(2022-2025)」을 발표했으며, 양측 간 안보 분야의 협력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IV-7 「중국-아세안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 행동계획」 중 안보 분야 협력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도자 및 정부수반 간의 고위급교류 촉진 / 상호 이해와 신뢰 강화</li> <li>• 다자주의 견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협력의 틀 유지, 정의롭고 개방적이며 상호존중하는 국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li> <li>• 아세안 주도의 메커니즘을 통해 정치와 안보 부문의 협력을 심화</li> <li>• 동남아 비핵시대 조약(东南亚无核武器区条约) 체결 논의</li> <li>• 아세안 국방장관 확대회의를 통한 전략대화와 실무협력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아세안 국방장관 비공식 회담을 통해 대화를 촉진</li> <li>- 연합훈련 등을 통한 실무협력을 강화</li> </ul> </li> </ul>
--

출처: 中国国务院, 中国—东盟全面战略伙伴关系行动计划(2022-2025)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한편 중국은 준동맹 수준의 우방인 러시아와의 양자 간 군사협력을 통해 쿼드를 견제하는 전략 역시 구체화하는 추세이다. 2022년 5월 중·러 양국 공군은 연합 공중전략순항(聯合空中战略巡航)을 실시하였으며, 훈련 당시 양국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을 무단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 국방부 측은 2019년 이래 네 번째로 시행되는 훈련이며 양국 공군의 협력 수준을 점검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훈련은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현재의 국제 지역정세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sup>133/</sup> 그러나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중·러의 합동군사훈련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쿼드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일본에 대한 시위적 성격이 있으며 도발 강도 역시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sup>134/</sup>

다음으로 경제 부문에서 중국은 아태지역 주변국들과 경제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응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일대일로 정책을 새로 발표한 점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중국이 2022년 11월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중국-아세안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 행동계획」 중 양측 간 경제 분야의 협력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33/ 新华网, “国防部: 中俄联合空中战略巡航不针对第三方 与当前局势无关,” 2022. 5. 25., <<https://baijiahao.baidu.com/s?id=1733775137077322485&wfr=spider&for=pc>> (검색일: 2023. 6. 12.).

134/ “中, ‘카디즈 진입’ 중러훈련 영상 공개...“정세와 무관” 주장(종합), 『연합뉴스』, 2022. 5. 25., <<https://m.yna.co.kr/view/AKR20220525076551083>> (검색일: 2023. 6. 12.).

**표 IV-8 「중국-아세안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 행동계획」 중 경제 분야 협력 방향**

-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구 업그레이드(3.0 버전) 협상 시작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시행
- 일대일로와 '아세안 상호연결 마스터플랜 2025' 간 협력
-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결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연결 촉진
- 2022년부터 5년간 아세안으로부터 1,500억 달러의 농산물 수입
- 아세안과 한·일·중 간 금융협력 강화
- 핀테크 분야의 실질적 협력 모색
- 아세안의 위안화 채권을 포함한 자국통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스마트세관, 스마트국경, 스마트공유연결 관련 협력
- 스마트도시건설, 인공지능, 전자상거래 5G 등 분야 협력 강화
- 디지털경제, 디지털거버넌스 및 기타 분야의 협력 강화
- 긴밀한 과학기술혁신 파트너십의 구축(신진기술 제공 / 청년 과학자 교류 등)
- 중국-아세안 임업협력 포럼 등을 활용한 임업기술협력 등 촉진
- 공간기술 및 응용분야의 정책교류
- 평화적 핵 이용 및 핵기술 정책 관련 대화, 정보 교환 지속
- 기상협력포럼 개최 / 기상서비스 현대화, 재해예방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 양자 및 다자적 차원의 지질광산 등 분야 프로젝트 수행
- 중국-아세안 간 고품질의 철도 연결 촉진
- 양측 간 해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
- 중국-아세안 교통장관회의의 틀에서 항공 운송 자유화 등을 추진

출처: 中国外交部, 中国—东盟全面战略伙伴关系行动计划 2022—2025 (2022.11.)를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

## 다. 글로벌 이니셔티브 제창

최근 중국은 주요 국제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2021년 9월)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2022년 4월), 그리고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2023년 3월) 등 이른바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제창하였다. 이들 이니셔티브는 기본적으로 평화와 안전, 발전을 염원하는 중국의 인식과 방안이 담겨 있으나, 그 이면에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sup>135/</su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미국은 쿼드와 오키스 등으로 대표되는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을 구체화 중이다. 반면 동맹을 냉전적 사고의 잔재로 간주하는 중국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새로운 안보협력 구상을 통해 서방 주도의 질서를 대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는 2022년 4월 보아오포럼을 계기로 시진핑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구상이다. 당시 시진핑은 냉전적 사고는 결국 평화의 틀을 무너뜨리고 패권정치는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면서,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sup>136/</sup>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23년 2월 중국 정부는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개념 문건(全球安全倡议概念文件)을 통해 자국이 구상하는 초국가적 안보협력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sup>137/</sup> 중국은 총 4장(배경, 핵심개념과 원칙, 협력 방향, 협력 플랫폼 및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문건을 통해 향후 UN헌장과 국제법의 기본원칙 등에 입각하여 국제사회에서 마땅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아세안과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태평양도서국 등 전반에 걸친 안보협력 구상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과 각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로 요약할 수 있다.

135/ 김선재, “중국의 新국가전략: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과 함의,” 『현안, 외국에선?』, no. 2023-11, 통권 제61호 (서울: 국회도서관, 2023), pp. 1~8.

136/ 中国国务院, “携手迎接挑战, 合作开创未来: 在博鳌亚洲论坛2022年年会开幕式上的主旨演讲,” 2022.4.21.,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22/content\\_5688778.htm](https://www.gov.cn/gongbao/content/2022/content_5688778.htm)> (검색일: 2023.9.2.).

137/ 中国国务院, “全球安全倡议概念文件(全文),” 2023.2.21., <[https://www.gov.cn/xinwen/2023-02/21/content\\_5742481.htm](https://www.gov.cn/xinwen/2023-02/21/content_5742481.htm)> (검색일: 2023.9.15.).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와 동맹 등의 수단을 냉전의 잔재로 간주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표 IV-9>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표 IV-9**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의 주요 주장에 대한 미·중 간 인식 차

주요 주장	미·중 간 인식 차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 / 사회체제의 선택 권리를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홍콩 민주화 시위, 신장위구르 문제 등은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국제사회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li> <li>• 미국은 중국이 공산당 체제의 권위주의 국가라고 인식</li> </ul>
냉전적 사고, 일방주의, 패권주의, 진영 간 대립을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인도-태평양정책을 통해 對중국 압박을 구체화 중이며, 이 과정에서 쿼드와 오키스 등을 활용해 동맹국과 연대</li> </ul>
정당한 안보 우려를 무시하거나 일방적 제재 등을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중국은 나토의 확장 등에 대한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미국이 무시한다고 주장</li> <li>• 중국은 북한 핵문제 등 사안에서 미국의 일방적 제재를 반대</li> </ul>
테러를 특정 국가나 국적, 종교와 연관시키는 것에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미국과 갈등을 빚는 이란 등에 우호적 접근을 지속</li> <li>• 2023년 2월 중-이란 공동성명에도 해당 주장이 포함</li> </ul>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등을 통한 안보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와 브릭스 등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를 활용해 미국에 대한 외교적인 압박을 강화 중</li> </ul>

출처: 김선재, “중국의 新국가전략: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함의,” 『현안, 외국어선?』, pp. 5~6.



## (2)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2021년 9월 시진핑은 제76차 UN총회 연설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 있어 ‘발전이 국민의 행복을 달성하는 열쇠’라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를 처음 제창하였다.<sup>138/</sup> 아울러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여섯 가지 원칙으로 △발전의 우선순위 견지,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 △포용성과 보편성, △핵심 동력의 견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행동 중심의 접근 방식을 거론하였다.<sup>139/</sup>

2022년 1월에는 중국의 주도 하에 100여 개의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우호그룹(之友小组)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도 했다.<sup>140/</sup> 중국이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를 제창한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중국은 개도국의 식량·에너지 등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국이 주도하는 경제적 지원 정책을 통해 강대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대내외에 투사하고자 한다.<sup>141/</sup>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은 식량과 에너지의 위기가 생산과 수요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차원의 문제라면서 미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해 비판하고 있다.<sup>142/</sup>

둘째,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이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국제개발에 참여하는 목적 중 하나는 자국이 지닌 소프트파워를 전 세

138/ 中国国务院, “习近平在第七十六届联合国大会一般性辩论上的讲话(全文),” 2021, 9.22., <[https://www.gov.cn/xinwen/2021-09/22/content\\_5638597.htm](https://www.gov.cn/xinwen/2021-09/22/content_5638597.htm)> (검색일: 2023.8.3.).

139/ 中国国务院, “习近平在第七十六届联合国大会一般性辩论上的讲话(全文),” 2021, 9.22., 재인용: 김선재, “중국의 新국가전략: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함의,” p. 2.

140/ 김선재, “중국의 新국가전략: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함의,” p. 2.

141/ 위의 글, p. 3.

142/ 위의 글, p. 3.

계적으로 투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와 개발을 분리하여 바라보고 지원하는 중국의 현재 접근방식은 결과적으로 개도국의 독재사회 부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sup>143/</sup> 마지막으로 일대일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대응이다. 그동안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빛의 덫 외교(Debt-Trap Diplomacy)’ 논란에 직면해온바,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중국의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sup>144/</sup>

### (3)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2023년 3월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세계정당 간 고위급대화 계기 연설을 통해 오늘날 각국의 미래와 운명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바, 다양한 문명 간의 공존과 관용, 교류 등은 인류사회의 현대화 과정을 추진하고 세계 문명의 정원을 번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처음 제안하였다. 동 이니셔티브는 △문명의 다양성 존중과 평등, 상호 학습, 대화, △인류의 공동 가치에 대한 옹호와 계승, △문명의 계승과 혁신, △국제 인문교류와 협력 등 네 가지 큰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45/</sup>

다른 이니셔티브들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에 대한 중국과 서방의 시각 역시 매우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상

---

143/ Joseph Lemoine and Yomna Gaafar, “There’s more to China’s new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than meets the eye,” *Atlantic Council*, August 18, 2022,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theres-more-to-chinas-new-global-development-initiative-than-meets-the-eye/>> (Accessed July 22, 2023).

144/ 김선재, “중국의 新국가전략: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함의,” p. 3.

145/ 中国外交部, “习近平出席中国共产党与世界政党高层对话会并发表主旨讲话,” 2023.3.16., <[https://www.mfa.gov.cn/zyxw/202303/t20230316\\_11042624.shtml](https://www.mfa.gov.cn/zyxw/202303/t20230316_11042624.shtml)> (검색일: 2023.9.21.).

오단(吴晓丹)은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가 중국이 책임대국으로서의 시야와 사명을 보여준다면, 오랜 시간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은 현대화와 서구화를 동일시 해왔으나 현대화는 소수의 특허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각국은 세계 문명과 발전 모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국가와 민족이 창출한 우수한 문명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는 인류사회의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했다.<sup>146/</sup> 반면 서방의 학계와 언론은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가 비록 다양성 존중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서방의 보편적 가치를 남에게 홍보하거나 이를 빌미로 내정간섭(홍콩, 신장위구르 문제 등)을 정당화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sup>147/</sup>

### 3. 대한반도 영향

한국은 현재 미국과의 공고한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한국판 인태 전략을 공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보폭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인태 전략 등으로 대표되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향후 한반도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민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가능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146/ 吴晓丹, “全球文明倡议: 点燃人类文明之光,” 光明日报, 2023年5月5日, <[https://www.ciis.org.cn/yjcg/sspl/202305/t20230526\\_8961.html](https://www.ciis.org.cn/yjcg/sspl/202305/t20230526_8961.html)> (검색일: 2023. 8. 3.).

147/ 김선재, “중국의 신국가전략: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함의,” p. 7.

첫째, 우리가 타이완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앞선 절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로서는 중국은 인태 전략 하에서 추진되는 군사안보정책, 특히 타이완 문제에 대해 가장 민감히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기로 사상 최대규모의 對타이완 포위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약 22년 만에 「타이완 문제와 신시대 중국의 통일사업(台湾问题与新时代中国统一事业)」 제하의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sup>148/</sup> 백서는 조국통일의 강조, 타이완 독립세력의 분쇄(민진당의 행보는 평화통일 과정에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라는 내용 포함), 외세의 간섭 일체 불허, 필요시 무력 사용 불사, 통일 이후 타이완정책의 변화(통일 이후 중국 중앙정부에서 군인이나 행정당국자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 등 한층 더 강경하게 변모했다.<sup>149/</sup> 실제로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연합군사훈련을 상시화·정례화하고,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전략을 구체화(타이완과 인접한 지역에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배치)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타이완 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강경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타이완과의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며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마치 치킨게임과도 같은 상황에서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공고한 동맹관계의 강화를 추구하는 우리로서는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타이완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타이완 문제에 대한 언급을 구체화하면서 미국과의 공감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148/ 中国国务院, 「台湾问题与新时代中国统一事业」(2022.8.10.), <[https://www.gov.cn/zhengce/2022-08/10/content\\_5704839.htm](https://www.gov.cn/zhengce/2022-08/10/content_5704839.htm)> (검색일: 2023.10.20).

149/ 김선재, “중국의 「대만백서」 발간과 동아시아 외교·안보,” 『현안, 외국에선?』, no. 2022-17, 통권 제43호 (서울: 국회도서관, 2022), pp. 3~4.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 한다면서,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sup>150/</sup> 이러한 행보에 대해 중국의 외교부장이 “타이완 문제로 장난칠 경우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타국이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중국의 강경한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sup>151/</sup>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타이완 문제를 두고 첨예해지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국은 가치동맹에 기반한 한·미동맹 강화 정책을 극단적인 친미노선으로 간주<sup>152/</sup>하고 경제적인 수단 등을 활용해 보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 등과 공조를 강화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중·러·북 3자 간의 연대가 한·미·일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고 평가하긴 어렵지만, 제도화의 토대로서 기능하는 △중·러, △중·북, △러·북 관계는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이다.<sup>153/</sup> 앞서 다루었듯이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기반으로 준동맹 수준의

150/ 외교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2023.4.).

15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Qin Gang Delivers a Keynote Speech at the Lanting Forum on Chinese Modernization and the World,” April 21, 2023, <[https://www.fmprc.gov.cn/eng/zxxx\\_662805/202304/t20230422\\_11063758.html](https://www.fmprc.gov.cn/eng/zxxx_662805/202304/t20230422_11063758.html)> (Accessed September 11, 2023).

152/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는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극단적 친미노선을 보이고 있으며, 타이완 문제에 대해 거듭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중관계를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Xi meets South Korean PM, calling on embodying the importance of China-South Korea ties in both policy and actions,” *Global Times*, September 23, 2023, <<https://www.globaltimes.cn/page/202309/1298757.shtml>> (Accessed October 20, 2023).

153/ 김선재, “중러북 협력과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 외국에선?』, no. 2023-19, 통권 제69호 (서울: 국회도서관, 2023), p. 1.

협력관계를 유지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매우 큰 변수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 경제무역 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있으며, 타이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입장 역시 굳어지는 모양새이다. 2023년 10월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한 푸틴은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고 타이완 문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양국관계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하기도 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 역시 다섯 차례에 걸친 시진핑과 김정은의 만남을 계기로 꾸준히 발전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지난 2023년 9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한의 對러시아 군수물자 지원 정황이 포착<sup>154/</sup>되면서 더욱 힘을 얻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등과 연대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중국으로선 러·북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며 압박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옵션으로 부상할 수 있다. 러시아와 북한 역시 미국 등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3자 간 이해관계에 기반한 상호 연대는 향후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 △미·중 간 갈등 이슈에 대한 러시아와 북한의 중국 입장 지지, △중국과 북한의 對러시아 군수물자 지원, △북한의 중·러연합군사훈련<sup>155/</sup> 참여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sup>156/</sup>에서 더욱 주목할

---

154/ 2023년 10월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 측에 컨테이너 1천 개 상당의 군수물자를 제공한 증거사진을 공개하였다. “North Korea provided Russia with weapons, White House says,” *The Washington Post*, October 13, 2023,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2023/10/13/north-korea-russia-weapons-ukraine/>> (Accessed October 20, 2023).

155/ 2023년 9월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군사훈련에 북한을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로선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한반도의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묵인하거나 북한을 옹호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 혹은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러 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이전에 비해 더욱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2023년 7월 UN 안보리 긴급회의 당시 중국 측은 북한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안보 우려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오랜 시간 북한을 안보위협으로 여기고 제재와 압박에 집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 등의 국가가 한반도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도발적 훈련과제를 수행하며 ‘확장억제’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취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다른 국가가 안보리를 방해한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sup>157/</sup> 러시아 역시 중국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면서, 안보리 차원의 북핵 문제 논의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미·중 간 대립이 심화될 경우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러의 대립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의 해결은 더욱 출구를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보편적 가치를 둘러싼 한·중 간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Sanctions do not affect interaction between Moscow and Pyongyang — Russian Ambassador,” TASS, September 2, 2023, <<https://tass.com/russia/1668973>> (Accessed October 20, 2023).

156/ 김선재, “중러북 협력과 한반도 외교안보,” p. 7.

157/ 中国外交部, “张军大使在安理会朝核问题公开会上的发言,” 2023.7.13., <[http://un.china-mission.gov.cn/hyyfy/202307/t20230714\\_11113111.htm](http://un.china-mission.gov.cn/hyyfy/202307/t20230714_11113111.htm)> (검색일: 2023.10.20.).

현재 우리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12월 우리 정부가 공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보편적 가치는 총 11차례에 걸쳐 언급된다. 여기에는 “최근 일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자유,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가 도전받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우리 측의 인식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를 바탕으로 압제와 강요가 아닌 규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 질서를 능동적으로 촉진”할 것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sup>158/</sup> 비록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보편적 가치는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문제이자 미·중 간 갈등이 드러나는 지점인 신장위구르, 티베트, 홍콩 등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 등의 가치를 내세워 상술한 갈등에 대한 인도주의적 간섭(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 포함)을 구체화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10월 우리 정부는 가치외교의 연장선에서 신장위구르 문제를 UN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토론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당시 중국 외교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신장위구르 문제를 두고 유언비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인권의 깃발 아래 정치적 조작을 자행하며 자국의 이미지를 먹칠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미국이 UN의 여타 회원국을 힘껏 압박했지만 개도국들로부터 강한 반대에 직면했으며 결국 꼼수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sup>159/</sup> 향후 보편적 가치를 둘

158/ 대한민국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p. 5, p. 8.

159/ 중국 외교부 주 대한민국 대사관, “유엔 인권이사회 신장문제 결정초안 관련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2022.10.8., <<http://kr.china-embassy.gov.cn/kor>>



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로선 가치외교를 국익 극대화의 차원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한·중 간 경제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여러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은 비교적 원만한 발전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무역과 첨단기술 등 전방위에 걸쳐 첨예화되면서, 한·중 간 경제협력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상술한 군사 부문과는 달리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중 간 경제 부문의 갈등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기술협력을 강화 중이라는 평가에 대해 한·중 양국은 영원한 이웃이자 불가분의 파트너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나아가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은 무역투자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협력의 영역을 확대하며 지역협력의 촉진과 무역자유화, 경제세계화를 공동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세계의 발전과 번영에 더 큰 공헌을 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sup>160/</su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감안해 볼 때, 중국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대응 수위는 군사안보 부문에 비해 높지 않으며, 이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가 중국의 핵심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sgxx/202210/t20221008\_10777909.htm> (검색일: 2023.9.2.).

160/ 中国外交部, “2022年5月23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2022.5.23., <[https://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205/t20220523\\_10691438.shtml](https://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205/t20220523_10691438.shtml)> (검색일: 2023.5.4.).

한편 칩4(Chip4)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비교적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2022년 7월 중국 외교부는 인위적인 산업 이전과 국제무역의 규칙 위반을 반대한다면서 한국의 칩4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한·중 양국이 상호 중요한 파트너로서 서로 큰 이익을 얻었으며 한국이 장기적인 이익과 개방적인 시장 원칙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의 발전 및 글로벌 산업 사슬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하는 등 비교적 정제된 입장을 표명하였다.<sup>161/</sup> 물론 이러한 상황은 향후 미·중 간 대립의 정도와 우리의 정책 방향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가능성 중 하나라도 맞물릴 경우 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칩4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에 비해 훨씬 더 강경한 태도로 전환하면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보복을 가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

## 4. 한국의 대응

우리로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첨예하게 전개될 것이며,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대응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일본과 호주 등 주변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만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쿼드와 사드 문제가 한·중 간 첨예한 갈등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으

---

161/ 中国外交部, “2022年7月26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2022.7.26., <[https://www.mfa.gov.cn/fyrbt\\_673021/jzshl\\_673025/202207/t20220726\\_10728257.shtml](https://www.mfa.gov.cn/fyrbt_673021/jzshl_673025/202207/t20220726_10728257.shtml)> (검색일: 2023.10.20.).

므로 이에 대한 대책 역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상술하였듯이 중국은 쿼드가 자국을 견제하는 배타적인 소집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쿼드 실무그룹 참여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sup>162/</sup> 우리로선 쿼드가 지닌 군사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신항기술과 보건, 기후변화 등 부문에서 쿼드와 기능적인 협력을 추진한다는 기존의 입장<sup>163/</sup>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의 끈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중국은 우리 정부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위 ‘사드 3불’을 거론하면서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sup>164/</sup> 우리로선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화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을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한·미·일 공조강화 등 안보정책은 우리의 주권에 관한 사항임을 단호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결과적으로 중·러·북 연대 강화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도록 세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안보 위협요인은 북한의 핵문제이다. 특히 최근 북한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을 중·러·북 연대 강화의 호기로 보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유화적 접근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에 대해서는 고위급교류와 축전외교 등을 통해 사회주의국가 간 혈맹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2023년 10월 북한은 신중국 건설 74주년을 계기로 발송한 축전에서 “조중(북한과 중국)

162/ 中国外交部, “2023年3月8日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 2023.3.8., <[http://bh.china-embassy.gov.cn/fyrth/202303/t20230308\\_11037694.htm](http://bh.china-embassy.gov.cn/fyrth/202303/t20230308_11037694.htm)> (검색일: 2023.10.24.).

163/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3.3.9., <[https://www.mofa.go.kr/www/brd/m\\_4078/view.do?seq=368521&page=7](https://www.mofa.go.kr/www/brd/m_4078/view.do?seq=368521&page=7)> (검색일: 2023.10.24.).

164/ “중국 “한국, 사드 적절 처리하길”...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 견제,” SBS, 2023.5.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56566?sid=104>> (검색일: 2023.10.24.).

이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기 위한 장구한 행로에서 언제나 변함 없이 지지 성원해왔다”면서, “조중 친선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sup>165/</sup>

실제로 미·중 간 여러 갈등 사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대 중국 편승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현재의 타이완 문제가 일촉즉발에 위기에 처해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타이완을 한사코 비호하며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가일층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sup>166/</sup>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안보협력 역시 강화되는 추세이다. 2023년 7월 북한에서 개최된 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 열병식에는 리홍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하여 연대를 과시한 바 있다. 직후인 9월에 성사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러·북 간 군사안보협력의 실질적 추진 가능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과정에서 더 많은 장비와 물자, 기술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북한은 자국의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움의 손길을 찾는 과정에서 러·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sup>167/</sup> 상술하였듯이 중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

165/ “김정은, 시진핑에 축전 “새로운 역사적 시기…북중 관계 공고히 발전”, 『동아일보』, 2023.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23301?sid=100>> (검색일: 2023.10.2.).

166/ “북한, 미중 대만 갈등에 중국 편들기…“미국이 위협 확대”, 『연합뉴스』, 2021.12.18.,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816663?sid=100>> (검색일: 2023.9.30.).

167/ U.S. DEPARTMENT of STATE, “Secretary Antony J. Blinken At the 8th Annual CSIS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Strategic Forum,” September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발전은 중·러·북 간 연대 강화의 토대로서 기능할 수 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될수록 우리가 더욱 세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로선 고위급 교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한·일·중 3자 간 협력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중 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우발적인 상황을 방지하는 수단이자 나아가 한·미·일 대 중·러·북의 진영 대립이라는 신냉전으로의 확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중국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 문제가 불거지자 한·중 양국 공군이 직통전화를 구축한 것은 좋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2023년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우리의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과 회담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셋째, 경제 부문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디리스팅을 적절히 유지해 가면서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향후 우리의 인태 전략 참여 정도에 따라 경제보복을 언제든지 다시 시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국가임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중국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우리로선 보다 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를 통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또한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25, 2023, (<<https://www.state.gov/secretary-antony-j-blinken-at-the-8th-annual-csis-republic-of-korea-united-states-strategic-forum/>> (Accessed October 2, 2023).)

있다.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아세안이 제2의 교역 및 해외투자 대상 지역이자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외 지역이라면서, “아세안과 함께 경제·금융·식량 분야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논의에도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sup>168/</sup>

마지막으로 보편적 가치 부문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외교와 미·중 간 첨예한 갈등 사안(타이완, 홍콩, 신장위구르, 티베트 문제 등)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미·중 간 갈등의 정도와 주변국의 대응 수위를 감안하여 보다 세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상술하였듯이 미국은 보편적 가치를 중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간섭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핵심이익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매우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벌어진 미·중 간의 갈등은 다른 그 어느 사안보다 첨예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치외교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가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국제사회에 홍보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그 수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68/ 대한민국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p. 26.

---

# V. 인도-태평양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정책

---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인도-태평양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정책

---

### 1. 인식

러시아는 소련 시기부터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을 사용해 왔다. 소련 해체 후 러시아연방이 출범한 이후에도 아태 개념 사용을 고수하면서, 미국이 고안해 낸 새로운 인도-태평양 개념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반 중국, 더 나아가 반 러시아적 지정학 전략의 산물로 인식하며 반대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년이 넘는 집권 기간 동안 미국 및 서방 국가들과 대결하는 자세를 강화해 왔다.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령 크림반도 병합을 계기로 미·서방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자, 러시아 대외 정책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돌리는 이른바 ‘신동방 정책’을 추진했고,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신동방 정책의 핵심이었다. 러시아 외교에서 아시아 중시는 낙후된 극동지방 개발을 통해 러시아 국가의 발전 동력을 회복하고 아태 국가로서 러시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푸틴 대통령은 신동방 정책의 추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아태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기도 전에 새롭게 제

기된 미·서방의 인태 전략 앞에서, 러시아는 이를 미국 패권주의의 도전으로 인식하면서 우려와 적대감을 표출한다. 2022년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서방 국가들과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관계를 악화시킨 러시아는 인태 개념을 결연히 거부하고 아태 개념을 고수하는 것이 미 패권주의 종식과 다극적 세계 질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최우선 외교·안보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한다.

### 가.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국가 지향

러시아 정부는 ‘인태’라는 지리적 개념을 미국 패권 확장을 위한 지정학 개념으로 인식하며, 이의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 그 대신 소련 시기부터 사용해 오던 ‘아태’ 지역 개념을 고수해 왔다. 러시아가 인식하는 아태지역의 지리적 범위는 시기에 따라 약간 변화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략 중국과 인도, 일본, 한반도, 몽골,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한 지역을 가리킨다. 러시아 정부가 수년에 한번씩 개정·발표하는 주요 국가 외교·안보 문서인 「국가안보전략」과 「대외정책개념」은 물론, 푸틴 대통령과 장·차관급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기본적으로 아태라는 지역 개념이 사용된다.

소련이 붕괴하고 신생 러시아연방이 출범한지 2년여가 지난 1993년 4월 보리스 옐친 정부 아래에서 최초로 작성된 「대외정책개념」에는 아태지역에 포함되는 국가로서 미국, 중국, 일본, 한반도, 아세안(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 몽골, 베트남을 들고 있다. 이 문서는 아태 지역 구조에서 러시아가 독자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의 관계에서 균형과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적시한다.<sup>169/</sup>

<sup>169/</sup> 소련 해체 후 출범한 신생 러시아연방에서 처음으로 작성된 1993년판 「대외정책개념」은 한반도가 인접 지역에 긴장의 불씨로 작용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엘친의 뒤를 이어 2000년 대통령직에 오른 푸틴은 그해 11월 「러시아: 새로운 동방의 전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일간지에 기고했다. 논문에서 그는 러시아가 아태지역의 일원이 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전제하면서, 러시아 극동 지방과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sup>170/</sup> 같은 달, 푸틴이 승인한 러시아 정부 문서 「APEC(아태경제협력체) 포럼 러시아 참가 개념」은 아태지역과의 경제 관계 강화와 그 전략의 배경이 된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에게 있어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은 교역액 증가와 극동·시베리아에 대한 투자 도입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동 문서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보다 균형 잡힌 국제협력을 발전”시키고 APEC 국가들과의 정치·경제 관계를 유럽 관계 수준까지 끌어올림으로써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논리와 사회의식에 내재한 과도한 서방 지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APEC 역내에서 정치적·외교적 존재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sup>171/</sup>

---

서는 안 되며, 따라서 남북한의 통합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170/ 푸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0년 7월 극동 지방에 위치한 중·러 국경 도시 블라고베렌스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극동 지방의 정세와 인구 감소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그는 극동 지방에 대량 유입되고 있는 중국인 이민에 대한 경계심을 환기하고 극동 지방 개발을 강화할 방침을 피력했다. “Выступление на совещании по проблемам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2002, 8, 23.), <[http://archive.kremlin.ru/appears/2002/08/23/1520\\_type63374type63378\\_29294.shtml](http://archive.kremlin.ru/appears/2002/08/23/1520_type63374type63378_29294.shtml)> (검색일: 2023.5.1.).

171/ “Концепция участия России в форуме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Kontseptsiia (ATЭС),”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http://economy.gov.ru/wps/wcm/connect/6491d680409c512981b8e92c73e16b99/sm\\_takdge\\_o\\_kontceptcii\\_uchasti\\_ia\\_rossii\\_v\\_forum\\_ates.doc?MOD=AJPERES&CACHEID=6491d680409c512981b8e92c73e16b99](http://economy.gov.ru/wps/wcm/connect/6491d680409c512981b8e92c73e16b99/sm_takdge_o_kontceptcii_uchasti_ia_rossii_v_forum_ates.doc?MOD=AJPERES&CACHEID=6491d680409c512981b8e92c73e16b99)> (검색일: 2023.5.12.).

한편, 푸틴 대통령 집권 직후 개정된 「대외정책개념」에서도 아태 지역의 의미가 특별히 시베리아와 극동지방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강조되고 있다.<sup>172/</sup> 이 문서에는 아태지역의 주요 통합 메커니즘으로서 APEC, 아세안(앞에서 언급한 6개국에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를 더해 10개국), 상하이 5국(Shanghai Five,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거론하며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적 참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게 특별히 중요한 양자관계로서 중국과 인도를 언급한다. 특히 세계 정치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공동으로 행동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지역 정치와 세계 정치의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정책 목표 아래 러시아는 푸틴 집권 1기(2000~2004년)와 2기(2004~2008년)가 지속된 8년 동안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 관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간 현안이던 영토 문제를 해결했으며, 북한과는 새롭게 ‘러·조우호선린협력조약’을 체결하고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러·북 관계를 정상화했다. 북한이 건국된 이래 러시아(소련) 정상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푸틴이 처음이었다. 러시아는 2003년 출범한 북핵 문제 다자 협의체인 ‘6자 회담’에도 참여했다. 또한 푸틴은 2000년 9월 일본을 방문해 양국 간 영토 문제 해결 의향이 있음을 피력해 러·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측의 관심을 끌어냈으며, 2004년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Southeast Asian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SEA)TAC) 체결을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등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위상

<sup>172/</sup> 푸틴 대통령 집권 직후 개정된 「대외정책개념」은 2000년 6월 28일자 대통령령으로 승인되었다.

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옵서버 자격이지만 정례적으로 참가해 온바, 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을 노린 포석으로 해석된다.<sup>173/</sup>

2008년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4년간 총리직을 수행하던 푸틴은 2012년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어 집권 3기를 출범시켰다. 이때 아태지역에 대한 푸틴의 전략적 관심은 더욱 증가했다. 출범 직후인 5월 정부 내에 ‘극동개발부’를 신설한 것을 필두로, 9월에는 극동지방의 중심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2013년 3월에는 새로운 국가 프로그램인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제하의 문서를 승인했다.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매년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 또한 아태지역 국가로서 러시아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푸틴의 야심작이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30년 동안 아태지역에 대한 관심을 점차 늘려 왔고, 아태지역 국가로서 러시아의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내하고자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러시아의 경제적 발전, 특히 낙후된 시베리아와 극동지방의 개발과 경제 발전의 맥락에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해양 전력을 강화한 것도 아니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아태지역을 러시아 성장 발전의 동력과 출구로서 인식했지만, 그곳에서 발생하는 안보적 리스크에는 덜 민감한 편이었다. 더욱이 러시아가 옛 소련권역 국가들과의 통합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

<sup>173/</sup> Ian Storey, "What Russia's 'Turn to the East' Means for Southeast Asia," p. 10, <[https://www.iseas.edu.sg/images/pdf/ISEAS\\_Perspective\\_2015\\_67.pdf](https://www.iseas.edu.sg/images/pdf/ISEAS_Perspective_2015_67.pdf)> (검색일: 2023.5.13.).

기 시작하는 푸틴 집권 3기, 즉 2012년부터 아시아보다는 ‘유라시아’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태평양은 아세안 국가들로 제한되는 경향이 목격된다.<sup>174/</sup>

이는 탈냉전 이후 아태지역에서 러시아가 중점을 두던 강대국 관계가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이라는 사각형 구도로부터 러시아, 인도, 중국이라는 삼각형 구도로 전이되는 경향과도 관련된다. 1990년대에 아태지역에서 러·미 관계와 러·일 관계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음을 확인한 러시아가, 2000년대 들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형성된 브릭스 구도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러시아제 무기의 주요 시장이자 지정학적 중요 국가로 부상한 중국과 인도를 중시하게 된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러시아의 전략적 관심은 태평양보다는 내륙 아시아, 특히 러시아에서 말하는 유라시아 방향으로 전이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나.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소련 시기부터 러시아의 외교정책과 대외전략이 늘 그랬던 것처럼, 아태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정책도 일차적으로 미국을 의식한 것이었다. 푸틴 집권 3기 들어 미국에 대한 비판과 견제 의식을 강화하던 러시아는 미국 단일 패권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지향하게 되었고, 이는 옛 소련권 국가들과의 통합 전략인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EAEU)’ 창설과 대중국 전략 연계 강화로 이어졌다.<sup>175/</sup> 이 과정에서 태평양

174/ 러시아의 정·관·학계에서 ‘유라시아’ 지역 개념은 주로 옛 소련권역 국가들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175/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옛 소련권역 5국을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 다자 기구이다. 2015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러시아가 태평양의 전략적 함의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이 ‘아시아’를 대체해 ‘인도양’을 태평양과 엮어 새로운 지정학 개념을 고안해내자, 러시아는 태평양에 대한 관심을 일거에 제고하고, 동시에 인태 구상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고민하게 된다.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서방이 제시한 인태 구상과 전략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인식은 다음과 같다.

### (1) 미국과 서방의 대중국 견제 전략을 위한 지정학 개념

러시아는 인태 전략을 미국이 주도하고 그 동맹국들이 지원하는 대중국 견제 전략으로 인식한다. 여기에서 중국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전에, 러시아가 인태라는 용어 자체를 미국이 만들어낸 지정학 개념으로 단정하며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과거에도 자국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정학 개념을 고안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정치학자인 올레그 아린은 아태라는 지역 개념도 사실 미국이 1970~1980년대에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지배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신화’이자 ‘망상’이라고 비판했다.<sup>176/</sup> 마찬가지로 인태 역시 미국이 세계 및 지역 전략에 이념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해 냈다는 것이 러시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러시아는 미국이 인태 개념을 고안하고 전략으로 발전시킨 가장 큰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그리고 이같은 러시아의 시각이 사실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도 인태

<sup>176/</sup> O.A. Ари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мифы, иллюзии и реальность* (M.: Флинта, Наука, 1997), pp. 1~435.

전략의 우선적 목표가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확장해 나오는 중국 세력을 차단하고 견제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미국이 발표한 인태 전략 문서에도 러시아에 관한 언급은 없다.<sup>177/</sup> 일본이나 한국, 프랑스 등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인태 전략 관련 문서에도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러시아는 이러한 서방의 전략 목표를 잘 알고 있으며, 러시아 정책 결정자들과 전문가들도 이 점을 명확히 짚고 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및국제관계연구소(IMEMO) 인도양 지역센터의 미하일 테르스키흐 박사는 미국이 발표한 인태 전략 문서를 분석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가 유럽에서 아태지역으로 옮겨간 원인이 중국의 부상에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단언한다. 그는 미국이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 타이완 문제 등에 개입하면서 미·중 경쟁을 분쟁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테르스키흐는 미국의 인태 보고서가 베이징을 지칭할 때 ‘PRC(중화인민공화국)’라는 약어만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보고서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PRC’와 ‘China’를 분리해서 사용함으로써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한다.<sup>178/</sup>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미국및캐나다연구소 소속인 국제정치학자 블라디미르 바투크도 2021년 저술한 논문에서 미국의 인태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공식적으로 처음 구상되었으며, 중국을 위협

---

177/ The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202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2/U.S.-Indo-Pacific-Strategy.pdf>> (Accessed May 1, 2023).

178/ М.А. Терских,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ая стратегия США: что нового в азиатской политике Вашингтона?” *ИМЭМО РАН*, 2022, 2, 22., <<https://www.imemo.ru/publications/policy-briefs/text/indo-tihookeanskaya-strategiya-ssha-chto-novogo-v-aziatskoy-politike-vashingtona>> (검색일: 2023. 5. 2.).



1호로 보는 미국의 시각이 그 핵심 동기였다고 분석한다.<sup>179/</sup>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역시 2023년 1월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이른바 ‘인태 전략’은 중국을 체계적으로 봉쇄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전략적 목표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sup>180/</sup>

러시아가 미국을 견제하고 미국 패권 시대를 종식시키며 다극적 세계 질서를 앞당기기 위해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개인적 친밀감을 토대로 한 러·중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러시아와 미·서방 관계가 험악해지면서 더욱 속도를 냈으며,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까지 악화한 러시아로서는 한층 더 중국에 밀착해 들어가는 중이며, 서방의 금융·경제 제재로 초래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미·중 전방위 경쟁 아래서 우군이 필요한 중국에게도 러시아는 포기할 수 없는 후원국이 되고 있다.

시선을 인태지역으로 돌려보면 러시아의 전략 변화 가능성도 감지된다. 러시아는 그동안 인태지역 현안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서도 암묵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인정하는 자세를 견지

179/ В.И. Батюк,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ая стратегия США и Евразия,”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Европы*, vol. 109, no. 1 (2021), p. 138, <[https://upe-journal.ru/files/2021\\_AПЕ\\_1\\_Батюк\\_ВИ.pdf](https://upe-journal.ru/files/2021_AПЕ_1_Батюк_ВИ.pdf)> (검색일: 2023.5.2.).

180/ “Стать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В.Лаврова для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журнала «Разведчик»,”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3.3.24.), <[https://mid.ru/ru/foreign\\_policy/news/1859498/?TSPD\\_101\\_R0=08765fb817ab20001829abc502092284b4abad6fd87c68e39de34e93e1131ad7bf9ac3144dab6f3008559d9357143000630f505d0a40811e393e99fdf129c0d17f18554b4e160f17f2647725d9c51b6f8861687b03bba11d629c15a528dd797e](https://mid.ru/ru/foreign_policy/news/1859498/?TSPD_101_R0=08765fb817ab20001829abc502092284b4abad6fd87c68e39de34e93e1131ad7bf9ac3144dab6f3008559d9357143000630f505d0a40811e393e99fdf129c0d17f18554b4e160f17f2647725d9c51b6f8861687b03bba11d629c15a528dd797e)> (검색일: 2023.4.23.).

해 왔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문제에서도 특별히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이 보여 온 공세적 외교에 반대를 표명하지도 않았다. 이는 러시아가 인태지역에서 중국의 공세 전략에 침묵함으로써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중국도 러시아의 외교 전략에 침묵해 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보상 심리로 분석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중국의 애매모호한 자세, 즉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비난하지 않으며 서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은 러시아가 인태지역에서 중국을 대할 때 보여주는 모습과 유사하다. 향후 미국과 서방의 인태 전략이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를 강화한다면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중국을 비호하고 노골적인 대중국 지원을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2) 인도 포섭을 통한 러·중·인 삼각 연대 이격

러시아는 미국의 전략에서 아태가 인태로 명칭을 바꾸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인도를 포섭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인도양을 태평양과 연결해야만 중국의 해양 진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커지는 중국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인도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인도를 끌어들이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테르스키흐는 미국이 인태 전략에서 인도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하고 있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인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미국의 힘만으로 중국을 억제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sup>181/</sup>

더욱이 러시아는 인도를 포섭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러시아와 인도

---

<sup>181/</sup> M. A. Терских,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ая стратегия США: что нового в азиатско-й политике Вашингтона?”

사이를 이격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와 인도는 1971년 당시 소련과 인도 사이에 군사 동맹적 성격을 갖는 평화·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소련이 해체된 후 두 나라 사이가 다소 소원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2000년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후부터 양국 협력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무기 거래와 군사 기술 분야에서 러시아는 인도의 주요 파트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 러시아의 대외 무기 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육박했다. 2018년 10월에 인도를 방문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을 인도에 수출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러시아 안보 정책에서 인도가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sup>182/</sup>

인도와 러시아 사이에 형성된 협력관계의 기저에는 두 나라가 국제 질서와 세계 정세에 대한 시각을 많은 부분에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 2018년 10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러·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는 다극화 세계에 대한 양국의 일치된 이해가 드러나 있으며, 다양한 세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두 나라가 보여주는 노력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183/</sup>

그러나 이러한 러·인 관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2020년 8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인태판 나토를 선언하면서 미국·인도·일본·호주 4국을 묶은 쿼드를 출범할 뜻을 밝히자, 러시아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쿼드에 인도가 동참한 사실이 러시아와 인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0년 12월 러시아 국제문제협의회(ISC) 싱크탱크 연설에서 인도가 미국에 휘둘려 반중국 전선에 가세했다고 말했다. 그

182/ 현승수, “인도의 유라시아 전략,” 『세계와 유라시아』, 제1권 1호 (한국유라시아학회, 2022), pp. 78~79.

183/ 위의 글, p. 79.

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 인도의 관계를 훼손하려 하며 미국은 인도를 압박해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라브로프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국경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배후에 미국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sup>184/</sup>

중국과 인도는 과거부터 히말라야 국경 지역에서 갈등을 빚어 왔으며, 최근 중국의 세력 확장이 뚜렷해지면서 양국 국경 수비대 사이에 유혈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잦아졌다. 러시아는 인도와 중국을 엮어 러·중·인 삼각 연대를 강화한다는 외교 전략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적대감 불식과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러시아가 상하이협력기구의 정식 회원국으로 인도를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초 중국은 인도의 상하이협력기구 참가에 반대했으나, 파키스탄도 함께 가입시킨다는 조건을 내걸어 결국 2017년 6월 인도를 받아들였다.<sup>185/</sup>

라브로프는 미국이 인도를 회유하고 압박해 쿼드에 가입시켰고 중·인 관계 악화를 부채질함으로써 러·중·인 삼각 연대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던 것이다. 중국 역시 러시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라브로프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단일주의는 국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러한 차별적인 관행은 세계 평화에 현실적인 위협과 심각한 도전이 된다”고 말해 미국을 겨냥했다.<sup>186/</sup>

---

184/ “중국-인도 국경 분쟁 배후는 미국...이유는?,” 『머니투데이』, 2020.12.1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513318249111>> (검색일: 2023.4.9.).

185/ Sachin Parashar, “India to Fight Terror alongside Pakistan, China in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The Times of India*, June 7, 2017.,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india-to-fight-terror-alongside-pakistan-china-in-shanghai-cooperation-organisation/article-show/59039222.cms>> (Accessed April 21, 2023).

### (3) 새로운 진영화 시도

러시아는 인태 개념과 전략을 냉전의 잔재이며 아시아에서 두 개의 진영을 만들기 위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시도로 간주한다. 또한 러·중을 대적해 만들어진 새로운 진영화는 역내 불안정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2019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아태에서 인태로 구도를 변경하는 것은 역내에 분단선과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질서를 제약할 뿐이라고 비난했다.<sup>187/</sup> 그는 인태 구상이 기존에 기능하던 아태 구조를 재구성하고 아세안 중심의 상호 작용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태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보았다. 쇼이구 장관은 역내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88/</sup>

사실 위에서도 지적했듯, 미국의 인태 전략 안에서 러시아는 거의 무시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의 인태 전략이 단지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러시아 역시 인태 전략의 표적이며, 러·중, 러·중·인 연대의 무력화를 노린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정책결정자들의 발언이나 러시아 전략 문서에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인태의 진영화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는 미국의 인태 전략과 그 추진 기제인 쿼드가 결국 아시아판 나토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러시아는 탈냉전 이후 유럽 지역에서 나토의 동방 확대를 자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

186/ “중국-인도 국경 분쟁 배후는 미국...이유는?,” 『머니투데이』.

187/ I. Denisov, O. Paramonov, E. Arapova and I. Safranchuk, “Russia, China, and the Concept of Indo-Pacific,” *Journal of Eurasian Studies*, vol. 12, no. 1 (2021), p. 80.

188/ *Ibid.*, p. 80.

오킨 핵심 원인으로 나토의 동방 확대를 꼽고 있다. 유럽의 진영화가 러시아로 하여금 전쟁을 불사하게 만들었다는 논리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아시아와 태평양에 나토와 같은 ‘블록’을 만들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것이다. 또 러시아는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과 영국, 호주가 결성한 오키스 역시 진영화의 일환이라면서 경계한다.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러시아 안보회의 서기는 2023년 3월 러시아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오키스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인태 전략은 아시아의 나토를 만들려는 시도이다. 새로운 동맹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또 다른 공격적인 블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새로운 오키스 동맹의 틀 내에서 추진된 호주 함대의 재무장, 특히 호주에 대한 핵 추진 잠수함 공급 그리고 타이완과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은 미국과 나토가 동쪽에서 유라시아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sup>189/</sup>

둘째, 인태 전략의 핵심 표적인 중국이 위축되면 푸틴의 러시아가 대외 정책 지상 과제로 설정한 미국 단극 체제 종식과 세계 다극화 질서 구축이 어려워진다. 푸틴은 다극화 세계질서를 향한 ‘성전(聖戰)’에서 시진핑과 뜻을 같이 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들 두 나라 정상의 공통된 세계 인식과 대미 적대적 연대에 쐐기를 박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서방과의 단절과 경제적 침체에 직면한 러시아가 중국의 하위 파트너로 전략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로서는 중국이 인태 전략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시나리오를 악몽으로 간주할 것이다.

셋째, 미국과 유럽 및 서방 국가들과 관계가 악화하자 협력의 시

---

189/ Иван Егоров, “Они совсем страх потеряли?,”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23.3.27., <<https://rg.ru/2023/03/27/oni-sovsem-strah-poteriali.html>> (검색일: 2023.5.1.).

선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러시아에게는, 인태 전략이 러시아의 아시아 및 태평양으로의 진출 출구를 막는 경제적, 안보적 위협일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한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항의해 적극적인 대러 제재에 나섰고 양국 관계는 파탄 직전에 놓였다. 여기에 러시아와 신뢰·협력 관계를 쌓아오던 한국마저 인태 전략을 내놓고 적극적인 친미, 반중, 반러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 러시아의 아시아 진출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푸틴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옛 소련권 통합 구상인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성공을 위해서 러시아는 세계 경제와 연결할 수 있는 해상 항로를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유라시아경제연합 안에서 러시아만이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회원국이기 때문이다.<sup>190/</sup>

---

## 2. 정책

러시아는 인태 개념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이미 동 개념에 대해 우려와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러시아의 이 같은 입장은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함에 따라 더욱 확고하고 선명해졌다.

하지만 러시아의 인태 전략 견제 정책은 그 전략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미·서방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령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후,

---

<sup>190/</sup> I. Denisov, O. Paramonov, E. Arapova and I. Safranchuk, “Russia, China, and the Concept of Indo-Pacific,” p. 81.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가 본격화하자 러시아는 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해 외교·안보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도모한다. 러시아의 대아시아 선회가 그것이다. 미국 및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진전을 꾀했던 것이다. 이는 단순히 안보적 노선의 변경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 수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의 수출 방향을 유럽연합쪽으로부터 아시아 쪽으로 서서히 이동시키고자 했다. 미국의 인태 전략은 이러한 러시아의 대아시아 선회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 가. 중국과의 전략적 밀착 강화

러시아는 미·서방과의 관계가 악화할수록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수준을 높여 왔으며, 많은 서방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두 나라 관계는 이미 “동맹 직전 수준”까지 와 있다. 다시 말해 문서를 통한 동맹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 양국은 이미 준동맹 수준으로 협력을 굳혀 왔다는 것이다.<sup>191/</sup> 러·중 밀착의 주된 원인이 서방, 특히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적대 정책에 있음은 명백하며, 이는 양국 정상뿐만 아니라 두 나라 정책 결정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심심치 않게 확인된다. 국경 분쟁과 이념 갈등으로 서로를 적대시하던 소련과 중국이 소련 해체 이후 새롭게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양국 관계의 격을 지속적으로 높인 이유도 다름 아닌 미·중 갈등, 러·미 갈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푸틴과 시진핑은 만날 때마다 러·중 양국이 “역사상 최고로 좋은 관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는데,<sup>192/</sup>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미국의 군사 전략 연구가

191/ 현승수, “중·러 정치·군사 협력,” 현승수 외,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 83.



인 니콜라스 그보데프가 지적했듯, 러시아와 중국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이 얻는 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왔다.<sup>193/</sup>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중과 미·서방 사이의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인태 지역에서 러·중의 공조 전략도 보다 공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1년을 넘긴 2023년 3월 21일(모스크바 시간),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러·중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 성명 안에서 두 정상은 명백히 미국을 겨냥해 “세계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러·중이 반미 연대를 강화할 것도 공식 선언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 문제에서 러·중은 서로의 입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갈수록 거세지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고자 경제와 군사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타이완의 독립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확실히 밝히고 중국 견제를 위한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 결정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시 주석 역시 “유엔 안보리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말해 서방의 대러 제재에 반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중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해하던 세계 언론은 러·중 관계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런 한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중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192/ Alexei D. Voskressenski, “China’s Relations with Russia,” in *China and the World*, ed. David Shambaug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p. 233.

193/ Nikolas K. Gvosdev, “Russia’s Impact on US National Interests: Maintaining a Balance of Power in Europe and Asia,” *Russia Matters*, August 5, 2020, <<https://www.russiamatters.org/analysis/russias-impact-us-national-interests-maintaining-balance-power-europe-and-asia>> (Accessed April 17, 2023).

마련했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동안 러시아는 중국과 관계를 밀착해 들어가면서도 경제력으로 우위에 있는 중국에 러시아가 의존 또는 종속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로부터 전례 없는 규모로 금융·경제 제재를 받아 세계 금융 시장에서 축출당하고 최대 수입원인 대유럽 에너지 자원 수출길을 차단당했다. 또한 서방 기업들이 대거 러시아를 떠나면서 산업과 경제 발전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국고가 비어가는 위기에 직면했다. 러시아는 유럽에 팔지 못한 에너지 자원을 싼 값에 중국, 인도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sup>194/</sup> 중국의 잠식을 경계해 160년 동안 막아왔던 블라디보스토크 항의 사용권을 중국에 넘겼다.<sup>195/</sup> 이는 러시아의 대 중국 의존도를 가중시켰고,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앞에서도 인용한 바 있는 러시아 학자 바투크는 2021년 쓴 논문 속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인태 전략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지만,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러·중 협력을 통해 견고한 유라시아 대륙 연대가 구축되면 중국을 전략적으로 포위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sup>196/</sup>

194/ 2023년 3월에 성사된 러·중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천연가스 공급망 ‘시베리아의 힘 2’를 건설하는 데 합의했다. 정확한 공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가스관이 가동되면 2030년까지 중국에 최소 98bcm(1bcm=10억m<sup>3</sup>)의 가스를 공급하게 된다고 러시아 정부는 설명했다. 서방의 금융·경제 제재로 돈줄이 막힌 러시아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밖에 러·중 간 무역 결재에서 위안화와 루블화 사용을 늘리기로 하는 등, 다양한 경제협력 안건도 발표되었다. 서방의 전방위적 봉쇄에도 러시아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경제권을 중국이 구축해 준다는 의미로 읽힌다. “중러, ‘반미’ 결속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우크라 전쟁 평화적 해결은 요원.” 『서울신문』, 2023.3.22., <<https://v.daum.net/v/20230322171201533>> (검색일: 2023.5.19.).

195/ “러시아, 중국에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양도…우크라이나 관련 제재 장기화 속 양국 급속 밀착.” 『VOA』, 2023.5.16., <<https://www.voakorea.com/a/7094534.html>> (검색일: 2023.5.19.).

## 나. 러·중·인 삼각 연대의 공고화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러시아는 자국이 목표로 하는 다극화 세계 질서 실현을 위해 중국과 더불어 인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도와의 양자 관계에 기초한 협력 외에도 러시아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러·중·인 삼각 협력틀의 구축이다.

이와 관련한 러시아 정부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변화가 눈에 띈다. 러시아 정부가 2023년에 발표한 「대외정책개념」은 과거에 발표한 것들과는 구성이 크게 달라졌다. 2016년판까지는 특별한 범주화(categorization) 없이 외교적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기구와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 노선을 밝히는 구성이었다. 그런데 2023년판에서는 그 방식이 이전 버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항목과 함께 중국과 인도를 특별히 묶어서 명시한 점이 두드러진다.<sup>197/</sup> 러시아가 인도와 중국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중시하고 있으며, 이 두 나라는 단순히 아시아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강대국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러시아는 러·중·인 세 나라를 합치면 전 세계 GDP의 30% 이상,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러·중·인 삼각 협력은 미·서방 국가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및 인적 자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196/ В.И. Батюк,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ая стратегия США и Евразия,” p. 149.

197/ 현승수, “2023년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의 특징과 시사점,”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14, 2023.4.18., p. 2,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14272&category=53&nav\\_code=mai1674786581](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14272&category=53&nav_code=mai1674786581)> (검색일: 2023.8.18.). 2023년판 대외정책개념에서는 세계를 9개 지역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근외 ▼북극 ▼유라시아 대륙, 중화인민공화국, 인디아공화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슬람 세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지역 ▼유럽 지역 ▼미국과 기타 앵글로색슨 국가들이다. 여기서 근외란 가까운 외국(Near Abroad)이란 뜻으로 옛 소련권 국가들을 가리킨다.

러시아에서 러·중·인 삼각 협력 구상이 처음 제기된 것은 소연방 해체 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1990년대 중반이었다. 당시 러시아 총리를 역임하던 예브게니 프리마코프는 신생 러시아연방의 대외 정책이 대미, 대서방 협력 일변도로 나아가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미국 중심의 단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인도, 중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1998년 12월 텔리를 공식 방문했을 때 러·중·인 삼각 협력의 제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서방은 물론 당사국인 세 나라 안에서도 러·중·인 협력 구상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상호 적대적인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전략적인 연대를 실현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푸틴 집권기 동안, 러시아가 대미, 대서방 대결 색채를 선명히 드러내면서 러시아의 러·중·인 삼각 연대 실현을 위한 노력은 속도를 냈으며 제도화 방안도 구체화되었다. 2002년부터 유엔 총회가 있을 때마다 3국 외무장관이 만나 회합을 갖는 방식이 시도되었고 현재까지 17회 진행되었다. 논의에서는 안보 현안과 대테러, 과격주의 및 마약 밀거래 대응, 정보 안보 등이 다뤄졌다.

2006년에는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회합을 가졌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자리였다. 첫 러·중·인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통합 움직임과 연계할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시킨 다자 경제 기구 브릭스가 설립되었다.<sup>198/</sup>

현재 러시아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와 브릭스의 성공 여부는 러·중·인 연대를 전제로 한 것이며, 쿼드 회원국인 인도

<sup>198/</sup> 브릭스 첫 정상회의는 2009년 러시아 주도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최되었다. 현재 시점에서 러·중·인 정상회의가 마지막으로 개최된 것은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였다. 당시 세 나라 정상은 정상회의의 정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를 친미 블록에 내주지 않기 위해서도 러·중·인 연대의 구축은 러시아에게 사활적인 의미를 갖는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중·인 협력이 다극화로 나아가는 세계 질서를 확고히 하는 데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러·중·인 포맷의 협력은 여전히 세계 및 지역 정치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우리 ‘3국’(트로이카)의 관계 발전은 유엔의 중심 조정 역할 아래에서 보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다극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세계 무대에서 다자주의, 평등, 국제법 지배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확인하는 데 기여한다.<sup>199/</sup>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장 세르게이 사나코예프는 러·중·인 협력이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지배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브릭스와 같은 기구에 가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계는 단극 중심의 독점이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알았고 이미 여기에 지쳤다. 많은 나라들은 서방의 지시가 아니라 자국의 욕구에 따라 발전하기를 원한다.<sup>200/</sup>

그는 러·중·인 협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된다면 기존의 미국 패권 그리고 일극이 타 문명에 대해 부과하는 질서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

199/ 2021년 11월 26일 러·중·인 외교부 장관 온라인 회의에서 한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 “Лавров: формат “Россия – Индия – Китай” содействует развитию многополярного миропорядка,” *TASS* (2021.11.26.), <<https://tass.ru/politika/13030347>> (검색일: 2023.7.22.).

200/ “Россия – миротворец между Китаем и Индией: эксперт 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трех стран,” *SPUTNIK Южная Осетия* (2023.4.11.), <<https://sputnik-osssetia.ru/20230411/rossiya-mirotvorets-mezhdu-kitaem-i-indiey-ekspert-o-vzaimootnosheniyakh-trekh-stran-22492514.html>> (검색일: 2023.7.22.).

고 강조한다. 또 사나코예프는 러·중·인을 묶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들 국가가 절대적으로 자급자족하는 유서 깊은 문명이며, 서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sup>201/</sup> 하지만 러·중·인 3국간 협력의 전망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결정적으로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불편한 사실이 협력의 최대 장애로 작용한다. 두 나라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영토 분쟁을 안고 있으며 최근까지 양국 국경 분쟁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sup>202/</sup> 중국은 인도와 적대 관계에 있는 파키스탄과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 또한 인도가 중국에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러시아는 양국 간 영토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두 나라가 협력할 수밖에 없고 또 협력해 나갈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동방학연구소의 안드레이 오스트로프스키 박사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영토 갈등이 해결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중·인 분쟁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다.<sup>203/</sup> 앞에서 인용한 사나코예프 소장도 인도와 중국의 세계 인식이 상호 접근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러시아가 지금까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새로운 갈등 상황을 방지하는 평화 조성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향후 세계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러·중이나 러·인과 같은 양자관계 못지않게 브릭스 플러스(BRICS+)와 같은 확대된 다자 기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근간이 될 러·중·인 삼각 연대 구축이 러시아

201/ *Ibid.*

202/ 2020년 6월에 발생한 중·인 국경 충돌로 인도 군인 20명이 사망했다.

203/ "В Москве за стол переговоров сели две ядерные державы: Встреча осталась незамеченной для всех, кроме США," *KP.RU*, 2020.9.7., <<https://www.kp.ru/daily/217179/4282978/>> (검색일: 2023.7.1.).

에게는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sup>204/</sup>

## 다. ‘대유라시아 파트너십’ 구상 실현을 통한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3년 1월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라브로프는 세계가 다극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서방이 미국 패권과 단극 체제의 종말을 받아들이고 다극화한 세계를 인정하기 전까지 러시아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또 그는 세계 경제와 정치의 중심이 유럽·대서양에서 유라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더 이상 유라시아 공간에서 정치적, 경제적, 가치적 리더십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라브로프는 향후 러시아 외교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다중 벡터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유라시아 역내 다자 기구들, 예를 들어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유라시아경제연합 등의 역할 강화와 그 안에서 러시아의 위상 제고를 도모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라브로프는 경제에 기반한 유라시아 통합 이니셔티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제안한 바 있는 ‘대유라시아 파트너십(Greater Eurasian Partnership)’에 푸틴의 유라시아 통합 철학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sup>205/</sup> 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

<sup>204/</sup> “Россия – миротворец между Китаем и Индией: эксперт 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трех стран.”

제연합의 개발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결하고 상하이협력기구, 아세안 등과의 관계를 확대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걸친 평화, 개발 및 협력을 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푸틴의 지역 통합 전략이다.<sup>206/</sup> 이 같은 라브로프의 세계 인식은 2023년 3월 말에 발표된 「대외정책 개념」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러시아가 인태 전략 추진국들을 지정학상 해양 세력으로 간주하고, 이에 저항해 러·중 주도의 대륙 세력을 규합하고자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자주 언급하는 유라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포함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는 유라시아를 옛 소련권역 국가들의 통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구대륙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앞에서 라브로프가 언급한 ‘대유라시아’의 범위도 애매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단은 미국 및 서방에 맞서면서 러시아와 협력하기를 원하는 아시아와 일부 유럽 국가들을 대유라시아로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따라서 러시아는 미국의 인태 전략이 위협으로 인식되자 적극적인 대아시아 외교를 전개하며 대응을 강구했다. 또 러시아가 인태가 아닌 아태지역 국가의 일원으로서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은 물론 지역 현안에 관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이런 의미에서 2020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의 전지구적 확산으로 인해 대면 외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푸틴은 대면 회의

205/ “Стать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В.Лаврова для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журнала «Разведчик».”

206/ 2016년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대유라시아 파트너십 구상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고재남, 『러·중의 유라시아 협력 동향과 신북방정책 추진 전략』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pp. 19~25.



참석을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 협력 강화를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 역시 2021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아세안 관계 강화를 통해 아태지역을 복원하고 인태지역을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모든 분야에 걸친 아태지역의 협력과 발전 과정에서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다.<sup>207/</sup> 쿼드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인태’를 아세안 중심의 ‘아태’로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러시아가 ‘대유라시아 파트너십’ 구상에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연계함으로써 인태 전략에 대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푸틴이 제안한 이 구상에서 북극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북극이 보여주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미끼’로 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을 유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부터 러시아는 신동방정책과 기존 아태지역 전략을 북극과 연계하는 새로운 지역 전략을 마련하고자 했다. 2019년 2월 러시아 신동방정책의 상징적 존재였던 극동개발부를 극동·북극개발부로 개편하는 작업을 필두로, 7월에는 대통령 주재 안보회의 안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부의장을 좌장으로 하는 ‘북극에서 국익을 지키는 문제들에 관한 안보회의의 부속 부처간 위원회’를 설치하고, 10월에는 ‘2035년까지의 북극권 개발 및 국가안보전략’이 승인되었다. 동 전략은 북극권에 관한 경제와 군사의 관점을 통합한 포괄적 북극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일련의 움직임은 북극권 아말 반도의 LNG 프로젝트, 북극해 항로의 정비, 아태의 현관이라 할 수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프로젝트 등, 북극권과 극동지방 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207/ “[인터뷰] 방한 러 외무 “미 ‘인도·태평양전략’은 블록 만들기” 비판,” 『연합뉴스』, 2021.3.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3120500080?input=1195m>> (검색일: 2023.6.21.).

2018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서는 북극권과 태평양 및 인도양을 하나의 전략 지대로 인식하는 ‘연속성’이 강조되었다. 당시 동 포럼에 참석한 일본의 아베 전 총리는 전체회의 석상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지역 전략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북극(ARCTIC) LNG-2’ 프로젝트의 추진, 쇄빙 LNG선을 활용한 아시아 지역으로의 에너지 운송망 발전을 언급하면서, “일필휘지와 같은 응혼한 연결의 실현”이 눈앞에 와 있다고 말했다. 아베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러시아가 개발을 추진 중인 북극해, 이 두 개의 바다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로 되어 위대한 물류의 큰 길이 탄생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sup>208/</sup> 이 발언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던 아베 총리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가 구상하는 대유라시아 개념이 인태지역과 연계 가능성을 역설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고립에 직면한 러시아가 이러한 지역 구상을 실현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러시아가 미·서방과의 단절을 고집하면서 인태 국가들을 중립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은 예측하기 힘들다. 러시아 국제정치학자인 크세니아 예고로바는 러시아가 결국 인태 개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강력한 협력 파트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칭 강대국 콤플렉스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모스크바가 인도·태평양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스폰일러 또는 자칭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재고(再考)

---

208/ 首相官邸, “東方経済フォーラム全体会合 安倍総理スピーチ,” 2018.9.5., <[https://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019/0905eef.html](https://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019/0905eef.html)> (검색일: 2023.6.1.).

해야 한다. 러시아는 하드파워에 열중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가 인태에 참여하려면 외교정책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인태에 하드 파워를 심고자 한다면 모스크바는 엄청난 위험과 훨씬 더 큰 장애물을 안게 될 수 있다. 책임감 있고 순종적인 강대국으로서 역할 하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과 인태에서 존경을 얻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전략적 인내이다. 다시 말해, 당분간 이 지역에서 더 겸손하고 덜 영향력 있는 강대국의 길을 걸어야 하며 이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푸틴이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는 답하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인태 지역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이 지역의 진화하는 지정학적 지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sup>209/</sup>

### 3. 대한반도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종결되든, 러시아가 미국 및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도 수차례 인용한 2023년 개정 러시아 「대외정책개념」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에 대한 ‘성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과 서방이 다극적 세계 질서를 받아들이고 러시아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또 동 문서에는 서방 국가들의 인태 전략에 대한 러시아의 적

<sup>209/</sup> Kseniia Egorova, "RUSSIA'S PERSPECTIVE ON THE INDO-PACIFIC," *Pusat Riset Politik*, 2021.6.30., <<https://politik.brin.go.id/kolom/politik-internasional/russias-perspective-on-the-indo-pacific/>> (검색일: 2023. 8.16.).

대감과 대응 전략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특히 아태지역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과거에 발표된 러시아 「대외정책개념」은 아태지역을 다루면서 남북한은 물론 일본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했다. 러시아와 이들 국가의 관계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러시아 정부의 대응 정책을 상술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발표된 새로운 「대외정책개념」은 아태지역의 대부분을 아세안 국가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우고 있다. 남북한과 일본은 보고서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인태 전략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방향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아태 지역에서 전개되는 진영화 추세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러·중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진영으로 인도를 끌어들이고, 아세안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서 활발한 반미, 반서방 외교를 전개한다는 것이다. 강대국 지정학이 응집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는 러시아 대외 정책의 전면적 전환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밀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대한 북한의 지지 표명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또 과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2월 28일 북한 외무성은 전쟁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내고 “사태의 근원은 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에 있다면서 러시아를 옹호했다.<sup>210/</sup> 뒤이어 3월 2일(뉴욕 시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

210/ “북한, “러시아 지지·연대성 더욱 강화…친선 발전시킬 것”, 『연합뉴스』, 2022.3.17.,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7149100504>> (검색일: 2023.7.7.).

고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북한이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은 반대를 표명한 5개국 가운데 하나였다. 이후에도 북한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내 2개 친러 공화국(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거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 합병을 인정하는 등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분명하게 러시아의 결정을 지지했다. 김영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하나의 전호(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러시아에 대한 연대감을 표명했다.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탄생했다. 한국전쟁에 소련은 참전하지 않았지만 김일성이 소련 지도자 스탈린의 허락을 얻어 전쟁을 감행했고, 소련 조종사가 모는 전투기가 전쟁에 투입된 사실도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북한은 소련이 붕괴된 1991년까지 소련이 제공하는 경제 원조에 크게 의존했다. 철도, 공장 등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북한 내 사회기반시설과 산업 인프라는 대부분 소련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으며, 무기와 군수품 역시 소련으로부터 제공된 것들이다. 따라서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연방이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원조를 끊자 북한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고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최악의 기아 상태를 경험해야 했다.

악화된 러·북 관계가 복원되기 시작한 시점은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한 2000년이였다. 푸틴이 대통령직에 오른 직후 방문한 외국 국가가 쿠바와 북한이었다는 사실은 많은 시사를 던져 준다. 러시아와 미·서방 간 관계가 악화할수록 러시아는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에 주목하고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했다. 2014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90%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파격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이렇다 할 수출품이 없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큰 성

과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2016~17년 북한 핵 실험에 따른 유엔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로 인해 러·북 경협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대북 제재를 용인한 사실에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했던 미·북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러시아에 접근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후에도 정상 간 빈번한 친서 교환을 통해 러·북 관계 복원의 의지를 끊임없이 전달했다.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북한의 대러 메시지는 더욱 과감해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반미 연대감 고취를 통한 러·북 관계 강화라는 김정은의 외교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었다.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알렉산드르 솔로비요프는 2023년 들어 더욱 가시화된 러·북 밀착 관계를 평가하면서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담론적 수준에서 오늘날 모스크바와 평양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에 맞서는 투쟁 의지도 유사하지만, 주권을 무조건적으로 우선시한다는 생각도 닮았다. (러시아와 북한의) 대외 정책 담론의 또 다른 공통된 특징은 국가주의, ‘포위된 요새’의 이미지, 그리고 정치적 결정의 원천으로서 국가 지도자의 의심할 수 없는 권위다. .... 또 하나는 무력 과시를 통해 대결 의지를 표출하면서 국제 문제를 악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sup>211/</sup>

---

211/ “Страна, живущая в трёх эпохах: к 75-летию КНДР,”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2023.9.9.), <<https://globalaffairs.ru/articles/k-75-letiyu-kndr/>> (검색일: 2023.9.13.); 현승수,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30, 2023.9.14., p. 2,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nav\\_code=mail674786581&category=53&idx=115989](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nav_code=mail674786581&category=53&idx=115989)> (검색일: 2023.9.15.)에서 재인용.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기념하는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참석한 사실은 러·북 밀착, 특히 러·북 간 군사 협력을 예고하는 것으로 세계 언론은 받아들였다. 북한 정권 수립 이래 소련 또는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023년 7월 25~27일 평양을 찾은 쇼이구 국방장관은 중국 대표단보다 더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 언론이 쇼이구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보도한 사실도 이례적으로 보였다. 평양에서 러·북 사이에 어떤 안건이 논의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 무기의 러시아 제공 가능성을 언급했다. 평양에서 열린 무기 전시회에서 김정은이 쇼이구에게 자국산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등 무기를 직접 설명하는 영상도 러·북 무기 거래 설에 힘을 실어주었다.<sup>212/</sup>

9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지방을 방문해 4년 만의 러·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던 2019년 5월 정상회담과는 달리 푸틴과 김정은의 두 번째 만남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까닭에 큰 관심과 우려 속에 진행되었다. 러시아 우주 산업의 핵심 기지인 극동 아무르주의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가 회담 장소로 결정된 원인을 두고도,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개발 기술을 지원할 계획임을 시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받아들였다. 4시간 넘게 진행된 정상회담은 별도의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이 없어

212/ 쇼이구 국방장관은 2023년 8월 15일 러시아에서 열린 제11차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서 최근 자신의 방북 사실을 언급하면서 러·북 두 나라의 “군사 협력 발전은 양국 국민의 핵심 이익에 부응하며 어느 누구에게 어떤 위협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복잡한 사회 및 국방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인상적인 성공을 달성했다고도 평가했다. “러 “북한과 군사협력, 누구에게도 위협되지 않아.” 『YTN』, 2023.8.15., <[https://www.ytn.co.kr/\\_ln/0104\\_202308152000068625](https://www.ytn.co.kr/_ln/0104_202308152000068625)> (검색일: 2023.8.23.).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와 합의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소모전 양상을 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탄약과 포탄, 구형 무기가 필요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필요한 군수품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식량이나 에너지 자원 등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러시아는 노동 인력 부족이 심각한 탓에 북한에게 노동자 파견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나돌았다. 문제는 러·북이 거래하려는 품목이 무기이건, 군사 기술이건, 아니면 노동력이건 간에 모두 유엔 안보리가 정한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다는 점이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자국 TV 채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같은 국제 규정 틀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 푸틴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sup>213/</sup>

둘째는 한·러 협력 중단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해 들어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수교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은 전쟁 발발 직후 선진 7개국(Group 7: G7) 주도의 대러 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와의 교류·협력을 중단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1년 뒤로 연기했던 한·러 수교 30주년 행사를 어렵게 끝낸 직후였다.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맞대응에 나섰다. 한국제 무기가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될 가능성도 경계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10월 27일(현지 시각)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는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재개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면서 한국이 이 점

213/ 현승수,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p. 3.



을 잘 생각해 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sup>214/</sup>

1990년 9월 30일 한국이 소련과 국교를 수립한 사건은 냉전 종식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자, 한국 북방외교의 쾌거였다. 그 때로부터 30여 년을 거치는 동안 한국과 러시아는 탄탄한 경제협력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sup>215/</sup> 2008년에는 양국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2013년 11월에는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한·러 간에는 한반도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이견의 골이 깊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미국의 패권주의와 대북 압박 정책 탓으로 돌린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미국이 북한에 가한 제재를 폐기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남북한 모두 자제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의 대북 협력 기조를 폐기하고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면서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북한으로 인한 갈등은 더욱 첨예화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러 정부 간 협의는 물론 민간 레벨에서의 소통까지 차단해 버렸다.

214/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마친 후,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던 사회자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급하게 “폴란드를 경유해”라는 말을 두 번 반복했다. 즉 한국이 폴란드를 경유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당시 푸틴 대통령의 발언 녹취와 회의 영상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할 것. “Заседа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искуссионного клуба «Валдай»,”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2022.10.27.,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9695>> (검색일: 2023. 8. 16.).

215/ 수교 이후 한·러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258억 달러에 달했으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해 같은 해 16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여 2021년에는 27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러시아는 한국의 10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2년 양국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22.7% 감소했다. 고상두, “우크라이나 전쟁의 동북아 지역 영향과 한국의 대러 전략 및 과제,” 『슬라브학보』, 제38권 2호 (2023), pp. 168~169.

러시아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며, 한국이 인태 전략을 통해 한반도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와 진영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한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및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올레그 다비도프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한국의 전략이 ‘확대’ 안보 개념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외교정책 자율성’을 포기했다. 그 대신,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규칙에 기반한 정책’을 강조한다. 또 한국을 ‘아시아의 서방’ 국가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나토 접근 노선이 이를 잘 보여준다.<sup>216/</sup>

다비도프는 한국이 유럽과 아태지역 사이에 ‘안보적 불가분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나토가 북한에 대해 적절한 압력을 행사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나토가 한국과 한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다비도프는 나토가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 나토의 연대는 순전히 상징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그는 한국이 한·미·일 군사 협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으로, 그동안 미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해 왔던 한반도 전략과 핵 관련 논의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고 분석한다.<sup>217/</sup>

---

<sup>216/</sup> O.B. Давыдов, “Новые контуры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МЭМО РАН*, 2023.7.24., <<https://www.imemo.ru/special-rubrics/pacific-asia-in-focus/text/new-contours-of-confrontation-on-the-korean-peninsula>> (검색일: 2023.7.7.). 이 글에서 다비도프가 지칭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자율성’이란 군사 동맹국인 미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에 대해 등거리 외교를 펼치는 것을 말한다.

그런 한편으로, 러시아 정부가 대러 제재에 참여한 여타 서방 국가들에게는 강력한 수준의 맞제재로 대응하는 데 반해, 한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완화된 수준의 대응을 견지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러시아뿐 아니라 일부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러시아 정부가 대러 제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고충’을 이해하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특히 러시아 시장을 석권하던 현대와 기아 등 자동차 업계는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한 부품 확보의 어려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서방 기업들과 행동을 같이 해야 하는 고충, 러시아 정부로부터의 압력 등으로 인해 조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대표 기업들도 러시아 현지 생산법인이 가동을 중단한 지 1년을 넘기면서 러시아 시장 철수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218/</sup>

셋째는, 러시아와 중국 간 외교·군사 협력의 확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북아에서 타이완을 둘러싸고 안보 위협을 가중시켰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의 행동을 모방해 타이완을 군사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이례적인 횟수로 증가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식 진영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의 안보 환경 변화에 직면해 러시아는 중국과 공조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다음 두 가지 형태를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하나는 북한 체제의 위기를 막기 위한 유엔에서의 공조다. 러시아

217/ 위의 글.

218/ “공장 매각도 못하고 가동도 불가능 … 韓기업 탈러시아 딜레마,” 『매일경제』, 2023.8.28., <<https://www.mk.co.kr/news/it/10816963>> (검색일: 2023.8.29.).

와 중국은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3단계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취지 아래 공동 로드맵을 작성한 바 있으나 미국과 한국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했다. 2018년 성사된 미·북 정상 간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고 재개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 강화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 살리기에 나섰다. 러시아는 2022년 1월 20일(뉴욕 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반대표를 던진 것을 시작으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강화안과 비난 결의에 연달아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국 역시 러시아의 북한 감싸기에 동조하고, 사태의 원인을 미국의 대북 압살 정책 탓으로 돌리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 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중 간 협력 기조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서방의 기대와는 달리, 러시아와 중국은 양국 협력을 전방위적이고 무제한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한반도에서 주로 유엔 내 북한 감싸기 공조로 표출되고 있다.

또 하나, 러시아와 중국은 동북아와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이 기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미·중 경쟁이 가열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미·서방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자 러시아는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한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현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주변 동해상에서 정찰 비행 횟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합동 군사 훈련도 실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력한 대러 제재에 나서면서 일·러 관계가 악화하자, 일본 열도 주변에서 중국과 함께 위협을 조성하는 군사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야기한 안보 문제에 대해 묵인 또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러시아의 노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키웠다.

사실 동해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의 군사 행동을 보인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였다. 러시아 및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은 이미 2019년부터 매년 한 차례꼴로 발생했으며, 독도 주변 영공을 침범한 사례도 있다. 우리 군의 항의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러·중 항공기가 엄격하게 국제법을 준수했고 타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순찰 임무는 연례 군사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sup>219/</sup>

미국 국방대학 중국군사문제연구센터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2022년에만 모두 6차례의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는 20년 만에 가장 많은 횟수였다. 또 중국군이 2022년 외국군과 진행한 합동 군사 훈련 가운데 3분의 2가 러시아군과 진행한 훈련이었고, 러·중 합동 군사 훈련 가운데 5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시야를 동아시아와 한반도 주변으로 돌려보면, 러·중은 2023년 6월에 한반도 주변 동해와 동중국해, 서태평양에서 ‘제6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벌였으며,<sup>220/</sup> 7월에는 러시아 해군 태평양함대 소속 호위함 등이 참여한 연합 훈련 ‘북부연합-2023’을 실시하기도 했다.

향후 중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를 공언하는 러시아는 중국에게 사활적인 타이완해협 인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러시아의 태평양 출구에 해당하는 한반도 주변 동해 상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

219/ “중·러 군용기 ‘카디즈 동시진입’…러 “제3국 겨냥한 것 아니다,” 『동아일보』, 2022.11.30.,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1130/116780618/1>> (검색일: 2023.9.8.).

220/ “지난해 중·러 합동군사훈련 6차례…20년 사이 최다,” 『KBS뉴스』, 2023.7.1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25696>> (검색일: 2023.9.8.).

및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의 지정학적 이해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미·일 안보 연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 4. 한국의 대응

한국의 인태 전략 관련 문서에는 러시아에 관한 언급이 없다. 2022년 미 국가안보회의가 발표한 공식적인 인태 전략에도 러시아는 거론되지 않는다. 2019년 미 국방성이 낸 인태 전략 보고서에는 러시아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분량도 적으며 그곳에서 러시아는 “다시 활발해진 해로운 행위자”로 묘사된다. 러시아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러시아의 국가 안보 전략에서도 최근까지 인태지역에 대한 관심은 컸다고 볼 수 없다. 러시아의 외교적 관심은 주로 유럽에 쏠려 있었고 경제적 이유로 인해 유라시아로 확장되어 갔지만, 그렇다고 러시아를 아시아 또는 아태지역 국가로 인식하는 러시아 엘리트들은 많지 않았다. 푸틴이 천명한 신동방정책은 러시아를 아태지역 국가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러시아의 외교 지향은 ‘유럽·태평양’일지언정 ‘아시아-태평양’은 아니었다. 따라서 미국은 러시아를 아시아에서 중국의 안보적 역할에 편승하는 ‘현상 유지 세력’으로 인식했고, 인태 전략에서도 러시아의 역할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서방의 인식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러시아의 모험주의적 군사 도발이 예측 불가능한 수준까지 극대화됐고,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러·중

의 전략적 밀착이 오히려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인태 전략도 러시아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러시아는 인태 지역에서 전개될 미·서방과 중국의 대결 구도 속에서 더 이상 중립적인 행위자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향후 러시아는 중국과의 공조 하에서 유엔 등 다양한 국제기구를 활용해 반미, 반서방 외교전을 강화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인태 전략 추진에도 만만치 않은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또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첨예화하고 있는 영유권 갈등 속에서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또는 역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대미 견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할 경우, 한국의 인태 전략의 원만한 추진은 어려워질 수 있다. 러시아의 인태 대응 전략에 대해 한국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한·러 협력의 새로운 틀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크게 훼손됐다. 전쟁이 어떤 형태로 끝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 추이와 결말과는 무관하게 한·러 관계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의 과거 30년 외교 관계는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싼 이견 조정의 관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러 양국 간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의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북한은 늘 한·러 관계의 진일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한때 남·북·러 삼각 경협이라는 협력 틀이 3국 관계 개선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지만, 북핵이라는 난제와 러·북, 한·러 및 남북한 간 신뢰 부족으로 인해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좌초되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남·북·러 경협 포맷을 제안해 왔지만, 남·북·러가 공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한국의 대러 외교는 새롭게 형성된 글로벌 및 동북아 지역 정세를 반영해야 하며, 30년을 지속해 온 대러 협력의 틀을 바꿔야 한다. 러시아가 북핵 문제나 북한 문제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러시아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반성이 필요하다. 물론 러시아가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상, 러시아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에서 배제되는 사태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 달성을 위해서 러시아의 이해와 협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러시아가 기형적인 북한 체제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자국 국익의 관점에서 이용하려 할 경우, 한국은 이를 묵인하거나 좌시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북한 감싸기를 고집하는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적 연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러시아가 한국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전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한국이 진보 성향의 정권으로 교체되면, 현 정부의 대북 및 대외 정책 노선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민주주의의 딜레마를 외교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 9월 개최된 러·북 정상회담을 지나치게 불안의 시선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밀착과 군사 협력의 기대 효과를 한껏 부풀림으로써 한국 내 진영 논리를 자극하는 심리전 재료로 이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악화시키면 러·북이 밀착할 수 있다는 한국 사회 내의 우려를 러시아는 잘 알고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러시아도 북한과 군사 협력을 할 수 있다고 한 푸틴 대통령의 경고, 한국 정부가 원한다면



러·북 정상회담 내용을 “한국에게만”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최근 러시아 외무차관의 발언은 러시아가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에서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221/</sup>

둘째, 러·중·북 삼각 연대 저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3년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극동지방 방문 및 러·북 정상회담 개최로 인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향후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될 것이다. 전쟁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한 러시아에게는 외교적 선택지가 많지 않으며, 과거 소련이 구축했던 동맹국들과의 관계 복원 및 강화의 일환으로 북한과도 일정 부분 협력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러·북 간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수준은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우리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군사 협력이 어느 정도 규모로, 또 어떤 수준에서 진행될지는 알기 어렵다. 특히 북한과의 무기 및 군사 기술 거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인 만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고 대북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더 지켜봐야 한다.

러·북 관계의 추이를 전망하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받을 손익도 계산해야 한다. 러·미 관계와 러·중 관계 그리고 미·중 관계의 추이 등도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가 중국, 북한, 이란 등 반미 성향 국가들, 그리고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적 선택에 고심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회유하고 규합해 반미 연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러·북 밀착의 추동 요인이 대미 적개심인 만큼 양국 관계의 지속 여부도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반미 연대감의 양과 질에 달려 있다.

221/ 현승수,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p. 5.

다만, 일각의 우려처럼 러·북 군사 동맹이 체결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또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경제협력이 재개되더라도 대북 제재가 유효한 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 상황도 낙관하기 힘들며, 러시아는 이미 경험을 통해 북한과의 정상적인 무역·경제 관계 구축이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이 원하는 경제협력이 소련 때와 같은 원조 경제라면 러시아가 여기에 호응해 나서기는 쉽지 않다. 러시아의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한 북한 노동력 활용은 실질적으로 러·북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경제협력 아이템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지만, 이 역시 현존하는 대북 제재 아래에서는 불법이다.

러·북 밀착 못지않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러·중·북 연대의 향배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러·중·북 연대는 대미 견제를 위한 상징적 차원 이상의 역량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차에 있다. 즉 중국이 북한을 ‘순망치한(唇亡齒寒)’의 외교·안보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데 반해, 러시아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유럽이나 아시아 타 국가에 비해 각별히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미·서방에 대한 인식에서도 중국은 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외교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데 반해, 러시아와 북한은 관계 단절과 전면 대결 자세를 내세운다. 미국을 협상 파트너로 인식하는 중국이 대미 ‘성전’을 부르짖는 북한과 러시아의 시각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 만일 러시아와 북한이 중국이 예상하는 이상으로 과도한 밀착 행보를 보일 경우, 중국은 이에 대한 저지에 나설 수도 있다. 또 당장 미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러·중·북이 공동의 군사 행동을 시도할지라도, 그것은 한·미·일 공동의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긴밀해질수록 러·중·북의 고민은 깊어

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 심화도 러·중·북 삼각 연대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로 경제적 피해가 불어나고 있는 러시아는 자국 최대 수출품인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출길이 막혀 판매처를 중국과 인도 쪽으로 돌렸다. 싼 가격에 제공되는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서방 제재와 장기전을 버텨야 하는 러시아에게 구명줄 역할을 한다. 더욱이 서방 기업들이 떠난 러시아 시장은 중국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형국인바,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러시아는 2023년 6월 1일부터 러시아 극동의 최대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의 항만 사용권을 중국에 제공했다. 인프라와 인구가 희박한 극동 지방에 중국이 경제력을 앞세워 밀려드는 것을 막아오던 러시아가 165년 만에 중국을 향해 닫았던 땅을 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려되는 러·중·북 연대를 막기 위해서 한국은 중국과의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한·일·중 협력 포맷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동북아 국가들이 직면한 공동 과제를 3국이 논의해 해결하는 한편, 중국이 러시아처럼 북한 문제를 활용해 한국을 적대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끝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세계의 분단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냉전식 진영화를 추동하고, 러시아는 북한을 진영화에 끌어들임으로써 상황을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끌여가고 있다. 이미 서방으로부터 고립된 러시아는 반미 성향이 강한 북한과 중국, 이란과 같은 국가들은 물론, 미·중 경쟁과 러·미 갈등 사이에서 고심하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포섭해 '다극화'라는 미명 하에 거대한 반미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러시아가 벌이는 적극적인 반미 외교는 한국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러·북 정상회담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북한의 체제 생존과 도발을 러시아가 돕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북한도 러시아의 반미 연대 속에서 나름대로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냉전 시기에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비동맹 외교를 활용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을 다시 맞이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세계화가 만들어낸 지금의 세계는 냉전 당시와는 확연히 다르다. 하지만 세계의 분단화는 불가피하며, 과거의 비동맹 국가들은 글로벌 사우스라는 새로운 국가군으로서 세계 질서 변화에 독자적인 행위자로 나설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는 차별된 방식으로, 또 그동안 축적한 외교 자산과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사우스 외교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맞춰진 시야를 전지구적으로 넓혀,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가 가져올 다양한 도전들에 응대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지원하고 우리가 가진 장점들을 공유해야 한다.

한국이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외교적 관심을 잃지 않는 일도 중요하다. 인태 전략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우리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통일 한반도의 미래는 유라시아에 있다. 통일 한국이 유라시아와 연결되면 러시아와 중국은 접경국이 되며, 평화롭게 공존해야 할 이웃이다. 한국 최대의 외교적 쾌거로 기억되는 북방 정책은 새로운 국제환경 하에서 새로운 판짜기가 필요하다. 한국이 인도-태평양에 쏟는 관심 이상으로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면서 통일 미래 비전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

# VI.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

---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한반도 비핵 · 평화 · 번영을 위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

### 1. 한반도 주변 4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대응 전략) 비교 분석

앞장에 서술된 미·일의 인태 전략과 중·러의 대응 전략을 ‘인식’, ‘정책’, ‘한반도에 대한 영향’ 및 ‘한국의 대응’으로 나누어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1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정책

인식	변화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미국 서해안을 넘어선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시아’,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인도-태평양’으로 변화</li> <li>• 인태라는 용어는 독일 지리학자 하우스호퍼가 1920년대에 만든 신조어</li> <li>• 오바마 정부부터 ‘인태’라는 개념이 외교안보 결정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용어로 언급되기 시작</li> <li>• 트럼프 정부에서 발간된 「2017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2017)」에서 처음으로 ‘인도-태평양’이 전략지명으로 공식 언급</li> <li>• 인태가 지칭하는 지역 범위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여전히 부재</li> </ul>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역에 대한 인식변화는 동 지역을 바라보는 관련국의</li> </ul>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학적 이익을 반영</li> <li>특히 패권국 미국의 인식변화가 중요한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바라보는 미국의 위기감이 해당 지역에 대한 국익과 의미 재평가의 핵심 요인</li> </ul> </li> </ul>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트럼프 정부: 미국의 서부 해안에서 인도의 서해로 정의</li> <li>바이든 정부: 태평양 해안에서 인도양까지로 정의</li> </ul>	
정책	오바마 정부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의 부상, 특히 경제부상으로 아시아에 관한 관심 증가</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태지역에 대한 전략으로 ‘아시아로 회귀(Pivot to Asia)’ 그리고 이후 ‘재균형 전략(Strategic Rebalance to Asia Pacific)’ 추진</li> <li>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쟁보다 협력에 방점을 두고 중국의 일대일로를 긍정적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편입 가능한 협력대상으로 인식</li> </ul> </li> <li>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국내 경기 악화와 이란 핵,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같은 대외정책 사안으로 인해 소극적인 아시아 전략 추진</li> </ul>
	트럼프 정부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바마 정부의 아시아에 관한 관심이 국익을 구체화 하는 전략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출발</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태전략을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으로 공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아시아 전략이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본격적으로 ‘인도-태평양’으로 확장</li> </ul> </li> <li>중국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무대에서 미·중 경쟁 본격화</li> <li>인태지역의 중요성을 경제적 이익에 집중하여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맹 및 우방과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실익 확보에 치중</li> </ul> </li> </ul>
	바이든 정부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계승</li> <li>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중국을 미국의 국익 확보에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li> <li>전임 트럼프 정부로 인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상실되었다고 평가</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free)와 개방(open), 연계(connection), 번영(prosperity), 안보, 그리고 회복성(resilience) 확보를 목표로 제시</li> <li>우방과의 연대강화를 통한 전방위적 대중 견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에서 개방성과 배제의 혼재</li> <li>• 협의체, 규범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협력의 제도화</li> <li>• 역내 우방과 군사협력을 통한 억지력 및 군사력 강화</li> <li>• 경제실익 추구에 집중한 전략 지속</li> </ul>
한반도영향	한미 관계	•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공급망을 확보하고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관계 강화
	대북 정책	• 한·미관계에서 미·중경쟁이라는 구조적 틀에 변화를 가져올 변인으로 영향력이 작은 대북정책의 독자적 영역 축소
	남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내 진영화로 주변국 지지가 중요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추진에 도전 요소로 작용</li> <li>- 북한은 한·미·일 공조를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와 무력도발의 명분으로 활용</li> </ul>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중경쟁 밖에서 외교 네트워크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안과 동남아 지역 및 남태평양 군도 도서국과 군사, 경제, 외교 협력 강화</li> <li>-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외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li> </ul> </li> <li>• 대중국 메시지 발신에 유의하고 기존의 소다자 협업체를 활용한 중국과의 소통 창구 유지</li> <li>• 북한의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대한 구상을 현실화할 후속 방안의 구체화</li> <li>- 국제사회에서 대북 어젠다 내용 확장</li> </ul> </li> <li>• 현상변경에 반대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이 북한에도 적용된다는 메시지 지속 발신</li> </ul>

출처: 민태은 작성

표 VI-2 인도-태평양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정책

인식	인도-태평양 전략	역사적 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아베 총리의 인도 의회 연설(서태평양과 인도양의 융화 개념)</li> <li>• 이전까지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개념을 선호</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케냐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VI)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OIPs)' 발표</li> <li>•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냄.</li> </ul>
		범위	•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양을 거쳐 중동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역

정책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인태 전략 등장 배경에는 지역 질서의 불안정이 전제임.</li> <li>• 중국의 독자적이고 공세적인 행동과 미국의 관여와 지속의 불확실성</li> <li>• 인도의 건설적인 역할 증대 및 의도</li> <li>• 소규모 및 중견 규모 국가(swing state)들의 존재</li> </ul>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와 ‘법의 지배’ 옹호, 다양성·포섭성·개방성 존중, 대화에 의한 규칙 형성, 대등한 파트너십, ‘인간’에 중점을 둔 접근법</li> </ul>
	전략적 수단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 공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보) 쿼드, 한·미·일 등 소다자 군사안보협력 강화</li> <li>• (경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주도적 역할,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적극 참여</li> </ul>
	인태지역 주변국과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보) 미·일동맹 핵심축, 쿼드(미·일·인·호) 협력, 아세안 중심성 인정, 나토의 인태 전략과의 협력 강화</li> <li>• (경제)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ODA 공여 강화 등), 메콩강 협력 강화 등</li> </ul>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중국해 문제 대응을 위한 남서제도 방위 강화</li> <li>• 중·러 안보협력 견제, 외교적 갈등 관리와 안보적 대응 강화</li> <li>•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감시(유엔 제재 차원의 안보협력국과 협력)</li> </ul>
글로벌 이니셔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보) 미·일동맹의 글로벌 차원 협력, 안보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글로벌 안보(보통국가 일본)</li> <li>• (경제) 정부개발협력(ODA)의 재확대 및 반도체 및 시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 규범 형성에 주도적 역할</li> <li>• (가치)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 및 규범 확대 및 주도</li> </ul>	
대한반도 영향	군사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인태 전략과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구체화 가능성</li> <li>• 새로운 영역(우주, 사이버 등)에서의 한·미·일 협력</li> </ul>
	경제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일의 대중국 공급망 협력</li> <li>• 한·일 경제규제의 정상화</li> </ul>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통 인식 강화</li> <li>• 한국과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li> </ul>

우리의 대응	군사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다양한 안보 네트워크(호주, 캐나다, 나토 등) 형성 추구</li> <li>• 북한 문제를 인태 전략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 일본은 북한 문제보다 타이완 문제에 정책 우선순위가 높음.</li> <li>• 중·러와의 갈등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 채널 유지</li> </ul>
	경제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개발협력 강화, 태평양 도서국 등 외교 지평의 확대 추구</li> <li>• 아세안 등 경제무역의 다양화 추구</li> </ul>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과 보편적 가치 공유 강화</li> <li>•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준수'를 추구하는 일본과의 협력 강화, 표면화된 대중 견제 표현은 자제</li> </ul>

출처: 이기태 작성

표 VI-3 인도-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

인식	인도-태평양	역사적 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아태지역에 뿌리를 둔 국가</li> <li>• 75년간 지역협력 등을 통해 '아태의 기적'을 창출</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날 아태지역은 냉전적 사고가 만연, 질서가 훼손</li> <li>•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 자체에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속 대중국 견제 의도가 내포 → 아시아-태평양 용어 사용을 고수</li> </ul>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태평양: 아태지역 포괄 / 중국 등 53 개국</li> </ul>	
	인도-태평양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방국가들의 냉전적 사고에서 비롯된 중국 봉쇄 전략</li> <li>• 인태 전략의 진정한 목적은 미국 주도의 패권 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인태 버전의 '나토'를 만드는 것</li> </ul>	
정책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응 / 전략적 경쟁의 우위 선점</li> <li>• 강대국으로서 역내 영향력 확장</li> <li>•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에 필요한 주변국의 평화와 안정</li> </ul>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이익 수호, 내정불간섭, 인류 운명공동체, UN 헌장과 국제법의 준수, 다자주의 등</li> </ul>	

	전략적 수단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 공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보) 상하이협력기구를 활용한 다자적 차원의 군사안보 협력 강화</li> <li>• (경제) BRICS+ 플랫폼 신설 등 경제적 대응 정책 구체화</li> </ul>
	아태지역 주변국과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보) 중국-아세안 국방장관 비공식회담, 「중국의 아태 안보협력 정책」, 중·러 양자 간 군사협력 심화</li> <li>• (경제) 일대일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중국-아세안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 행동계획」 등</li> </ul>
	인태 전략 참여국에 대한 회유/압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차원의 구두 경고</li> <li>• 타이완해협, 남중국해, 한반도 인근 군사행위 상시화</li> <li>• 경제협력 지속을 위한 노력 병행</li> </ul>
	글로벌 이니셔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보)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li> <li>• (경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li> <li>• (가치)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li> </ul>
대한반도 영향	군사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타이완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li> <li>• 중국이 러시아, 북한 등과 공조를 강화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견제할 가능성</li> </ul>
	경제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대중국 견제 공급망(칩4 등) 참여를 경계하면서, 국제적 고립의 탈피를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할 것</li> </ul>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이완, 홍콩, 신장위구르 문제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중국의 핵심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여를 원천 봉쇄(관여 시 보복 조치 구체화 가능성)</li> </ul>
우리의 대응	군사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일본과 호주 등 주변국과 안보협력을 강화</li> <li>•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결과적으로 중·러·북 간 연대 강화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도록 세밀한 전략을 수립</li> </ul>
	경제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과의 디리스킹을 적절히 유지해 가면서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li> </ul>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 인권, 민주 등 가치의 보편성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되, 중국의 핵심 이익 등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할 필요</li> </ul>

출처: 김선재 작성

표 VI-4 인도-태평양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정책

인식	아시아-태평양 국가 지향	역사적 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련 시기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념 사용</li> <li>• 러시아의 전략적 관심이 유라시아(내륙 아시아)에 집중된 탓에 태평양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진</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틴 집권 이후, 특히 집권 3기(2012년~)부터 극동 개발 및 신동방정책 등 통해 러시아의 아태 국가 편입을 위해 노력</li> <li>• 러시아의 유라시아 정체성 강화로 인해 아태 정체성 확립은 부진</li> <li>• 러시아는 여전히 아태지역 개념 사용을 고수</li> </ul>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국가를 포괄하나, 협력 대상국은 중국·인도·아세안에 집중</li> </ul>
	인도-태평양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서방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지정학 개념</li> <li>• 인도 포섭 통해 러·중·인 삼각 연대를 이격하려는 미국의 음모</li> <li>• 미·서방의 새로운 냉전식 진영화 시도</li> </ul>	
정책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응</li> <li>•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반미·반서구 공세 정책과 연계</li> <li>• 러시아를 미·서방 인태 전략의 핵심 표적으로 인식하는 경향 증가</li> </ul>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극화 세계질서 실현, 색깔혁명 분쇄, 반미·반서구 지향의 국제 연대, UN 헌장과 국제법 준수, 다자주의</li> </ul>	
	전략적 수단		
	중국과의 전략적 밀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극적 세계질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제반 정책 강구</li> <li>• 무역·금융·에너지·군사 협력의 무제한적 확대</li> <li>• 러시아의 대중국 종속 가속화</li> </ul>	
	러·중·인 삼각 연대의 공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인 관계 개선 위한 협력 기제 강화</li> <li>• 인도와의 군사 협력 확대</li> <li>• 인도의 유라시아 진출 지원 및 경제협력 확대</li> </ul>	
	'대유라시아 파트너십' 구상 실현을 통한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극 포함 유라시아 역내 개발 프로젝트에서 러시아가 주도권 확보</li> <li>• 미·서방 배제한 유라시아 다자기구(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등)의 역할 강화</li> <li>• 중동, 아프리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반미·반서방 연대 확대</li> </ul>	

대한반도 영향	러·북 밀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북 간 반미, 반서방 연대 강화</li> <li>• 러·북 정상회담 개최와 군사협력 가능성 제고</li> </ul>
	한·리 협력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대러 제재 참가와 러시아의 맞대응</li> <li>•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의 위기</li> </ul>
	중·러 간 외교적 공조 강화와 군사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안보리에서 중·러의 북한 감시기 공조 강화</li> <li>• 한반도 주변 중·러 군사 활동 증가</li> </ul>
우리의 대응	한·리 협력의 새로운 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비핵화 관련,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기대 버려야</li> <li>• 러시아 내 반한 담론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및 공공 외교 강화</li> </ul>
	중·러·북 삼각 연대 저지를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협력, 대북 제재 무력화 등 러·북 밀착 적극 견제</li> <li>• 한·미·일 협력 통한 러시아 단독 군사 행동 및 중·러·북 군사 공조 견제</li> </ul>
	글로벌 사우스 대상 외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대한 외교력 강화 모색</li> <li>•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유라시아에 대한 관심과 관여 지속</li> </ul>

출처: 현승수 작성

## 가. 인식

미·일·중·러 4국은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전에는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일본의 아베 정부가 ‘인도-태평양’ 개념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가 ‘대결적’, ‘냉전적’, ‘대중국 견제’와 같이 비판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용어 사용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 군사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패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했다.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의 범위를 태평양 해안에서 인도양까지 이어지는 지역으로 확대했다. 일본도 기존의 아태지역

인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양을 지나 중동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역을 인태지역으로 인식하며,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인태 전략이 중국을 봉쇄하는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대결적 양상을 조장하는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평화로운 아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미국 주도의 '나토'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 러시아도 인태 전략은 대중국 견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러·중·인 삼각 연대를 분쇄하고 신 냉전식 진영화를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지역 국가 중 중국, 인도, 아세안을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삼고 있다.

## 나. 정책

미·일의 인태 전략 수립과 이에 대한 중·러의 대응 전략 추진 배경에는 서로에 대한 견제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의 증가와 미·중 경쟁의 심화로 인태 전략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한 맞대응 전략을 입안 및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부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아시아에서 축소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아시아로 회귀'를 추진하면서도 중국을 자유주의 질서 형성의 협력대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인태 전략을 공식화한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방국과 다자 및 양자 협력을 통한 질서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도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에 위협을 느끼는 동시에 미국의 지속적인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인도 등 지역 내 중견국 및 소규모 국가들과의 연대 필요성을 느껴 인태 전략을 수립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인태

지역 정책을 수립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우세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역내 영향력 확장과 현대화를 위한 지역 내 평화 안정 도모를 계획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집중 표적이 되면서 미국의 인태 전략이 러시아에 대한 봉쇄 전략이라고 판단해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미·일의 인태 전략과 중·러의 대응 전략은 원칙과 목표에서도 차별성이 뚜렷하다. 미국과 일본은 자유, 개방, 연계,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질서 확립을 목표로 상정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의 견제 대응 원칙인 다자주의(혹은 다극화), UN 헌장 및 국제법 준수, 내정불간섭, 연대라는 원칙을 공통으로 표방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정책에서 미·일·중·러 4국 모두 기존의 국제기구, 동맹, 우방국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다자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우방국, 동맹국 및 지역 국가와 연대해 다자(및 소다자) 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안보에서는 쿼드(미·일·인·호), 신쿼드(미·일·한·캐),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체, 나토와의 군사력 강화 협력을 통해 중·러 안보협력에 대응하고, 동·남중국해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정책이다.

반면, 중·러는 상하이협력기구를 적극 활용해 다자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은 중-아세안 국방장관 비공식회담 및 2017년 「중국의 아태안보협력 정책」에서 발표한 아태지역 국가와 다자적 안보협력을 추진하여 남중국해 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중동, 아프리카, 아세안 등 글로벌 남부를 대상으로 반미·반서방 연대를 확대하고자 한다.

경제 분야에서도 다자주의는 두드러진다. 미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지역 내 경제 질서, 규범, 규칙 형성을 주



도하고, 공급망에서 탄력성을 회복하는데 주력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개발 원조를 통한 개도국과의 경제개발 협력 확대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브릭스를 통한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기반으로 아태지역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대유라시아 파트너십’ 구상 실현을 통한 글로벌 사우스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서 주도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미·일·중·러는 다자주의와 더불어 우방 및 동맹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해 인태지역에서 안보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 북한, 러시아의 안보적 위협 대응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양자컴퓨터와 같은 첨단 기술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일본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그간 소원했던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바, 한·일관계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무역, 투자, 기술,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과도 무역과 항공기 운항 재개 등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양자 경제협력을 회복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중추 국가인 인도를 유라시아의 파트너로 규정해 경제, 군사협력 도모, 나아가 중·인·러 삼각 연대 형성을 위해 중·인 관계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다. 대한반도 영향

각국의 인태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일의 한국과의 협력 확대 및 강화와 중·러의 대응으로 요약된다. 미국과 일본은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도 감소와 중국 군사력 확장 견제를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일 안보협력 기제 수립이 구체화될 것이고, 3국의 협력은 우주 및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배터리,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에서의 공급망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법치주의,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일의 인태 전략은 북한 문제 해결에 긍정적, 부정적 효과 모두를 유발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납북자 문제와 같은 미해결 북한 관련 문제를 서로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미·일의 인태 전략이 미·중 경쟁에 집중되다 보면 북한 문제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해 한·미관계에서 대북정책의 중요도가 감소할 수 있다. 또한, 한·미·일 협력 강화는 북·중·러 연대를 초래할 수 있어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변국인 중·러와의 협력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중·러가 북한을 지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고도화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한·미·일 경제, 안보, 가치 협력이 구체화될수록 한국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구체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미·일 경제, 안보, 가치 협력으로 한국이 남중국해 분쟁과 중국의 영토 안정(타이완, 홍콩, 티베트, 신장)에 개입하게 되거나, 중국 배제의 공급망 재편에 과도하게 편승한다면 중국은 강한 경제적·군사적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중·러가 한반도 주변에서 공동 군사행동을 할 여지를 줄 수 있으므로 한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중 공급망 경쟁이 강화되면서 중국은 국제적 고립을 피하고자 반도체 등 첨단산업 허브인 한국과 협력을 지속할 가능성

도 작지 않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중·러·북 경제·안보 협력 강화로 남·북·러 경제협력을 대체하는 중·러·북 경협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 라. 한국의 대응

한국의 대응은 미·일과의 협력 및 중·러에 대한 관계 지속 또는 견제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인태 전략 대응을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자주의 외교를 통해 한국 외교의 외연을 확대해 가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 동맹국인 일본, 호주, 캐나다, 나토와 협력하는 다자안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러와의 분쟁과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본과 함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도국 및 도서국과 외교적 협력 및 이들의 경제 발전을 위한 원조, 투자,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한편,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과 최대한 협력을 추구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지 않고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과 경제, 안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중국과의 교류 및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는 향후 북한이나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세계 최대 생산 허브인 동시에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대국이므로, 한국은 미국의 인태 전략에 협력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 또한 유엔과 같은 국제 다자기구를 통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해야 하고, 이들과 함께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일본과 함께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를 수호하되 중국의 핵심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제 안보를 위해 중국에 집중된 교역과 투자를 다변화하여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미·일의 인태 전략에서 북한 문제는 미·중 경쟁과 타이완 문제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져, 북한 문제 해결에 이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북한 문제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중·러·북 경제·안보 협력이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이들의 대북 지원을 추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일과 공조해 이를 차단해야 하며, 중·러·북 협력이 초래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 내 러시아의 군사력 동원(단독 혹은 중국과의 합동)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한·미·일이 공조해야 한다.

서방으로부터 집중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특히 북한을 포함해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남·북·러 경제협력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미국의 인태 전략과 공급망 재편에 동조하는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서 상품 수출과 투자에 고전이 예상된다. 공공 외교를 확대하여 러시아 내 반한 감정의 확산을 조기에 막아야 하며, 중앙아시아 등 구소련 역내 시장 확대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 2.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과 추진 경과

### 가.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

2022년 12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르면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은 추진 배경, 비전,

협력 원칙 및 지역적 범위, 중점 추진과제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표 VI-5 한국의 인도 전략 주요 내용

지역	북태평양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몽골
	동남아	아세안 10개국
	남아시아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중동 및 아프리카 동부 연안국
	유럽 & 중남미	유럽연합, 나토,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비전	자유	보편적 가치: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평화	- 규칙(국제법과 국제 규범)과 대화 - 무력 충돌 방지: 북핵 문제, 테러, 사이버 범죄, 해양 분쟁
	번영	- 경제활동(생산, 무역, 투자, 기술개발) - 지역 번영(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 지속 가능한 발전)
원칙	포용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음
	신뢰	공고한 상호 신뢰
	호혜	상호 이익 보장
추진 과제	① 규범·규칙 기반 질서 구축	- 보편적 가치 공유: 자유, 법치주의, 인권 - 국제 규범, 규칙, 질서 모색
	② 법치주의·인권 증진 협력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발전을 위한 협력 모색
	③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대테러, 군축,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④ 포괄안보 협력 확대	전통 & 비전통 안보 위협 퇴치: 해상 위협, 전염병, 사이버 공격, 기후변화, 신형기술
	⑤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공급망 안정화: 자유무역, 해외투자, 호혜적인 디지털 통상 규범
	⑥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 국제협력: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첨단 바이오, 차세대 통신, 우주 - 연구개발, 표준화, 기술 규범, 기술 보호, 인력 양성 도모
	⑦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관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 탄소시장 발전,

	<p><b>연 역내 협력 주도</b></p>	<p>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녹색 해운, 재생에너지 개발</p>
	<p><b>⑧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실시</b></p>	<p>- 공적개발원조 확대 - 최우선 협력 분야: 디지털, 교육, 기후변화, 스마트시티, 교통, 보건 -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시민사회와 협력</p>
	<p><b>⑨ 상호 이해와 문화적·인적 교류 증진</b></p>	<p>- 소프트 파워: 한류 문화 전파, 공공외교 - 미래세대 신뢰 구축: 청소년 교류</p>

출처: 대한민국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참고하여 정리

### (1) 추진 배경

대한민국 정부의 인태 전략 추진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 것에서 시작한다. 인태지역은 규모 면에서 세계 인구의 65%, 세계 경제(GDP)의 62%, 무역과 해양 물동량의 약 50%를 차지하며, 경제와 안보를 포괄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한국 경제는 전통적으로 국제의존도가 매우 높고, 전체 무역에서 인태 지역 의존도가 수출 78%, 수입 67%, 해외직접투자 66%에 달한다.<sup>222/</sup>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타이완 등 첨단·전략산업 주요 협력국이 모여 있다. 인태지역은 최근 여러 가지 경제, 정치, 안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①경제적으로 보호주의, 공급망 분절, 기술 경쟁 확산, ②정치적으로 일부 국가에서 민주주의 퇴보, 인권유린, 법치주의 훼손 등의 현상 출현, ③안보적으로 군비 경쟁 심화와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 등이다. 한국은 지역 국가들과 협력해 인태지역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타개하고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역내 질서 형성을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았다.<sup>223/</sup>

<sup>222/</sup> 인태지역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을 거쳐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유·가스 수송로가 있다. 대한민국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pp. 4~5.

<sup>223/</sup> 위의 글, pp. 5~6.

## (2) 비전, 협력 원칙 및 지역적 범위

대한민국 정부가 규정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굉장히 광범위하다. 동북아와 미국, 캐나다와 몽골이 포함된 북태평양, 동남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동부 연안, 유럽과 중남미가 인태지역에 포함된다. 한국의 인태 전략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이다.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조화롭고 협력적인 질서를 강화하고, 규칙(국제법과 국제 규범)과 대화 등 평화적 방법을 통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며, 무력 충돌(북핵 문제, 테러, 사이버 범죄, 해양 분쟁)을 방지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형성하여 개인, 기업, 국가들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생산, 무역, 투자,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 번영(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비전을 제시한다.<sup>224/</sup>

인태 전략의 3대 협력 원칙은 포용, 신뢰, 호혜이다. 한국의 인태 전략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포용적으로 비전과 협력 원칙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을 추구한다. 다양한 지역적, 세계적 위협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공고해야 한다. 또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협력 당사자들의 상호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이 가진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장점을 적극적으로 협력 파트너들과 공유하여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한다.<sup>225/</sup>

## (3) 추진 과제

인태 전략은 9대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①규범과 규칙

224/ 위의 글, pp. 8~9.

225/ 위의 글, pp. 9~10.

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②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③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④포괄안보 협력 확대, ⑤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⑥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⑦기후변화·에너지 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⑧맞춤형 개발 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⑨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이다.<sup>226/</sup>

규범 및 규칙 발전과 증진 측면에서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분쟁도 법치주의에 근거하여 해결할 것이며, 사회적 취약 계층(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지원하고, 민주주의 발전이 성숙하지 않은 개도국에 민주적 거버넌스와 선거 관리 관련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에 지역 국가들과 연대하여 엄중히 대응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227/</sup>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는 전통(군비 경쟁)과 비전통(테러, 핵무기, 해상 위협, 사이버 공격, 팬데믹) 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 국가들과 협력해 이러한 안보 위협에 포괄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다자안보 협력 질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한·미·일이 협력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군비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자협의체를 결성해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해양은 인태지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지역을 연결하기 때문에 해양에서의 안보에 대한 공동 대응도 주요한 목표로 설정했다. 해상로 보호와 안정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의 합동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기적으로 연합훈련

226/ 위의 글, p. 18.

227/ 위의 글, pp. 19~21.



을 시행함을 목표로 한다. 사이버와 보건 안보를 위하여 지역 내 국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사이버 및 보건 안보 대응능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sup>228/</sup>

경제안보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안정적 공급망을 관리하고 첨단과학기술(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첨단 바이오, 차세대 통신, 우주) 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국가들과 양자 및 소다자 소통을 기반으로 공급망 다변화, 자유무역 증진, 핵심 산업 품목의 회복력 향상, 연구개발, 표준화, 기술 규범, 기술 보호 및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을 도모한다.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향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도 참여하여 자유무역을 통한 공급망 안정을 추구하고, 디지털 기술을 주도하는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과 협력하여 디지털 기술의 국제 표준과 규범 형성에 앞장서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sup>229/</sup>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개발협력, 교류증진을 위한 협력을 목표과제로 제시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무공해차 확산, 신재생(청정)에너지 개발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양자, 다자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건설, 정책 수립을 추진할 것이다. 한국은 인태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하여 역내 14개 개발협력 중점 협력국에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 양자, 다자적 지원을 할 계획이며, 중점 지원 분야는 디지털, 교육, 기후변화, 스마트시티, 교통, 보건위생, 에너지, 농업이다. 역내 상호 신뢰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미래세대(청소년)를 대상으로

228/ 위의 글, pp. 21~24.

229/ 위의 글, pp. 25~27.

대면, 비대면 방식의 문화(대중문화, 전통문화, 역사)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sup>230/</sup>

## 나. 추진 경과

### (1) 추진 과정

외교부는 2023년 2월 3일 이행 체계 마련과 구체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교차관보, 외교전략기획관, 외교부 유관 지역·기능부서 국장으로 구성된 내부 협의체인 인태 전략 이행 TF(task force)팀을 출범시키고 4월 27일 2차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sup>231/</sup> 9대 중점과제 추진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sup>232/</sup>

특히, 4월 26일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태지역의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과 인태지역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워싱턴 선언의 채택을 통해 국방부 차관급의 핵협의그룹 구성 및 연 4회 개최, 전략핵 잠수함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와 동맹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 및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APEC 등에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공급망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sup>233/</sup>

---

<sup>230/</sup> 위의 글, pp. 27~31.

<sup>231/</sup> 18개 부, 4개 처, 18개 청, 5개 위원회

<sup>232/</sup> 외교부,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위한 제2차 점검회의 개최,” (외교부 보도자료, 2023. 4. 27.),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69943](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69943)〉 (검색일: 2023. 6. 3.).

<sup>233/</sup> 민정훈,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및 향후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23-10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pp. 5~10,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192&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

2023년 5월 한·일 정상회담(7일), G7 정상회의(19일), 한·미·일 정상회담(21일)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한·미·일 3국은 북핵·미사일 정보 공유, 안보협력, 인태 전략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 전략적 공조에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6월 7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태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 수준 제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확대, 중국과 상호존중과 호혜에 입각한 성숙한 관계 형성 및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 추진, 국제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한·러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sup>234/</sup>

## (2) 평가: 특징 및 한계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고, 신장한 한국의 위상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포괄적 지역 전략(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y)으로서 인태 전략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적 함의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국가발전 기반이었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하에 비슷한 정책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인태지역의 규범과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을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구조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의 대 권위주의의 체제경쟁 및 국제질서 구축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둘째, 기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1) (검색일: 2023.8.15.).

234/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서울: 국가안보실, 2023), pp. 28~45,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D26t9Wdf>> (검색일: 2023.8.15.).

서는, 공간 범위를 확대한 포괄적 지역 전략이다. 한국의 기존 대외 정책은 아시아에 집중했지만, 인태 전략은 아시아 외에 북미, 유럽,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등 탈지역적 협력을 도모하고 한국의 대외적인 활동과 역할을 역외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포함한다. 셋째, 역내 포괄적 경제 및 안보 이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의지를 표방한다. 인태지역 국가와 기존의 경제 분야(개발 협력, 원조, 무역, 투자)에서의 협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인태지역의 외교·안보 이슈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소임을 수행한다.<sup>235/</sup>

한국의 인태 전략은 초기 구상 실현에 다음과 같은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남중국해 분쟁과 같은 지역 내 민감한 이슈에 개입할 위험이 있다. 한국은 기존의 남중국해 분쟁에 거리를 두었지만,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역내 포괄적 안보 이슈에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보여, 향후 중국이나 동남아 역내 남중국해 당사국과의 외교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sup>236/</sup> 둘째, 가치 기반의 협력이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법치주의, 인권신장, 민주주의 등 가치 발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정치적 자유 등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들과의 경제와 외교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가치 기반 협력을 일부 국가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폭넓은 국내적 지지 기반 확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인태 전략은 여러 가지 영역을 포괄하는 전략인 만큼 정책적 일관성 유지가 관건이다. 가치 규

235/ 최원기,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지역적 역할 확대 추진 방향』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pp. 1~2.

236/ 전재성 편,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및 4년 과제: 외교안보분야,” (EAI 스페셜리포트, 2023. 5. 18.), pp. 7~10, <[https://www.eai.or.kr/new/ko/etc/search\\_view.asp?intSeq=21923&board=kor\\_special](https://www.eai.or.kr/new/ko/etc/search_view.asp?intSeq=21923&board=kor_special)> (검색일: 2023. 8. 10.).

범, 경제 안보, 기후, 안보에서 인태 전략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 3.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

#### 가. 한·미·일 협력 방안

한·미·일은 인태지역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부상(경제력, 군사력) 및 위협 행위(남·동중국해 분쟁, 타이완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안보협력 여지가 매우 크다. 특히 올해 개최된 나토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의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어 향후 3국 협력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미래 협력을 위해 고려해야 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미·일 협력에서 최선의 방안은 2023년 8월 미국 메릴랜드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은 인태지역에서 우방국 및 동맹국과 연합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최근 강화된 한·미·일 협력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향후 쿼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오커스와 같은 포괄적(안보, 경제, 기술, 기타 분야), 전략적 협의체(가칭 KOJAUS: 코자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sup>237/</sup>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협력의 제도화 및 정례화(매년 정상, 외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

<sup>237/</sup> 정인환, “윤 정부...노골적 중국 적대 동맹이 어찌 ‘기회’ 되나: 외교안보의 ‘외주화’ ‘도구화’ 사이에서 길을 잃은 건 국익,” 『한겨레21』, 2023.8.25.,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54318.html](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54318.html)> (검색일: 2023.8.30.).

좌관 회담),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 합동군사훈련 및 실시간 정보 교환에 합의한바,<sup>238/</sup> 이러한 합의가 실천에 옮겨지도록 한국은 미국의 주도하에 일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여 인태지역 내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며, 3국 협력이 공고한 제도적 틀(규범, 규칙)을 가진 기구 혹은 준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포괄적, 전략적 안보 협의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일본과의 협력을 반대하는 국내 여론을 변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적 앙금으로 인해 양국 협력에 대한 국내의 강한 반대 여론에 직면해 왔다. 인태 전략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한·미·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일 국민의 서로에 대한 악감정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일 간 역사 왜곡, 위안부, 독도 문제를 상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선협력, 후해결(일본과 우선 협력하고, 양측 간 문제는 나중에 해결함)’ 전략은 한·미·일 협력의 지속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한·미·일 협력의 장이 열린 지금 이 시기를 잘 이용하여, 적극적인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한·일 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 3국 협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군사 위협,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자위대 활동 범위(후방지원, 집단 자위권)를 일

---

238/ 조은정 외,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후속 과제: 포괄적 안보 위협과 한미일안보협의체(KOJAUS)의 출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제460호 (2023.8.21.), p. 1,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36943&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d=KOJAUS](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36943&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d=KOJAUS)> (검색일: 2023.8.30.).

본 영토를 넘어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다. 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를 도모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한·미·일 협력 강화의 부작용으로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 위협으로 타이완과 주변 해협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근처에 거주하는 일본 남서제도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경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sup>239/</sup>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같은 한반도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미군을 후방 지원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유사 사태를 대비해 3국 합동 군사훈련이 정례화되면 자위대의 한반도 주변 접근을 피할 수 없다. 한·일 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3국은 2022년 10월 동해상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정치권과 국민 여론은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sup>240/</sup> 인태 전략 구체화로 3국 안보협력이 강화되어 연합훈련이 정례화되면 국내 반대 여론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은 2023년 3국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안보협력의 제도화 및 정례화이다.<sup>241/</sup> 3국 고위급(정상, 외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회담을 정례화하여, 북한 핵무기 고도화 및 도발에 대한 대책을 수시로 협의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 한·미 간 핵 억제 협의체인

239/ 이기태, “일본 방위백서 발표와 한국의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20 (2023.8.10.), p. 2,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14363&category=53&nav\\_code=mai1674786581](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14363&category=53&nav_code=mai1674786581)> (검색일: 2023.8.31.).

240/ 김민석, “국민 과반, 한미일 합동훈련 ‘적절’...9·19 합의 파기는 ‘반반’ [데일리안 여론조사],” 『데일리안』, 2022.10.13.,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61734>> (검색일: 2023.8.31.).

241/ 조은정 외,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후속 과제: 포괄적 안보 위협과 한미일안보협의체(KOJAUS)의 출범,” p. 1.

‘한·미 핵협의그룹’의 기능을 세밀하게 제도화하여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무용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sup>242/</sup> 한·미 핵협의그룹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이 공격받았을 때 미국이 북한을 강력히 공격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핵협의그룹 제도화를 통해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

핵협의그룹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은 일본의 참여이다. 미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해 방관할 경우 또 다른 동맹국인 일본의 대미 안보 신뢰가 실추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핵협의그룹에 비해 한·미·일 핵협의그룹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신뢰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sup>243/</sup> 한·미가 일본의 핵협의그룹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므로 향후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확장억제 및 비핵화 환경 조성을 위해 일본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sup>244/</sup> 또한, 핵협의그룹을 통해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획득할 수 없었던 북한 핵무기 관련 고급 정보를 얻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핵자산과 전략에 대한 정보공유, 공동기획과 공동 연습 등한국의 관여도와 발언권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sup>245/</sup>

---

242/ 한·미는 2023년 7월에 한·미 핵협의그룹을 출범시키고,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확장억제를 위하여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한반도상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하였다.” 주한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언론발표문,” 2023.7.18., <<https://kr.usembassy.gov/ko/07192023-joint-readout-of-the-inaugural-u-s-rok-nuclear-consultative-group-meeting-ko/>> (검색일: 2023.10.5.).

243/ 황태희, “워싱턴 선언과 한미동맹 확장핵억제의 게임이론적 분석,”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 월간 뉴스레터」, 제11호 (2023.8.1.), p. 25, <<https://www.president.go.kr/download/64a66833cab32>> (검색일: 2023.10.5.).

244/ “핵협의그룹, 일본 참여 가능성과 역할은?” BBC NEWS 코리아, 2023.5.8.,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mme884ydl2o>> (검색일: 2023.10.5.).

245/ 황태희, “워싱턴 선언과 한미동맹 확장핵억제의 게임이론적 분석,” p. 26.



아울러, 미국과 일본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인다면 대북 경제지원(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북한 민생 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실질적 비핵화’노력을 보인다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남북 경제협력(5대 산업)을 진행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미·일과 협력하면 담대한 구상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sup>246/</sup> 미국과 일본은 첨단·핵심 산업(컴퓨터, 이동통신, 인터넷, 반도체), 의료, 농업, 건설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인프라 건설, 농업 기술 발전, 의료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자원, 기술, 원료·중간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추진하는 북한에 직접투자를 하도록 미·일을 독려함으로써 비핵화 기반의 북한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다.

## 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시아 전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연안, 오세아니아 등 글로벌 남부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므로 본 전략의 성패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 (1)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며, 지

<sup>246/</sup> 5대 산업은 발전·송배전 인프라 건설,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 병원·의료 인프라 건설, 국제투자·금융 지원이다. 통일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2022.11., p. 19, <<https://www.uniedu.go.kr/uniedu/home/pds/pdsatcl/view.do?id=20872&mid=SM00001172>> (검색일: 2023.10.5.).

리적으로 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여 전략적 요충지이다.<sup>247/</sup> 한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남방정책을 추진해 온 지역이어서 인태 전략의 핵심 협력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sup>248/</sup>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해지는 최근 아세안(비회원국인 동티모르 포함)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지역이며, 대중국 공급망(첨단기술,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포괄적인 해양안보 협력 파트너이기도 하다. 2022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에 따르면 한국과 아세안은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각 회원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안보(국방, 해양 안보), 경제(산업, 통상, 공급망, 첨단기술, 핵심 광물), 기후변화, 인적교류에서 ‘맞춤형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sup>249/</sup>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참고해 한국과 아세안과의 협력을 안보,

---

247/ 아세안은 6.6억 명 인구(유럽 전체 인구 7.7억 명)를 보유하고 있으면, 경제 규모(GDP)는 3조 1,731억 달러이며, 총 교역량은 GDP를 뛰어넘는 3조 5,608억 달러이다. 2022년 GDP 성장률은 5.7%이며, 이는 EU의 3.5%와 북미의 2.2%보다 높다. KF 아세안문화원, “아세안 소개,” <<https://www.ach.or.kr/ach/cm/cntnts/cntntsView.do?mi=14754&cntntsId=1921>> (검색일: 2023. 10. 5.); New Zealand Foreign Affairs & Trade, “ASEAN: Regional Economic Outlook, August 2023,” August 2023, <<https://www.mfat.govt.nz/en/trade/mfat-market-reports/asean-regional-economic-outlook-august-2023/>> (Accessed October 13, 2023); World Bank databas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Series/NY.GDP.MKTP.KD.ZG>> (Accessed October 13, 2023).

248/ 2004년 한국은 아세안과 포괄적협력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였고, 2010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2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주 아세안 대표부가 설립되었고, 2017년 한국 정부는 신남방정책인 ‘한-아세안 미래공동체구상’을 발표하였다. 김영신, “한-아세안관계 30주년, 신남방정책의 나아갈 방향은?,” 『아시아지역리뷰』, 제2권 1호 3월호 (2019), pp. 1~2.

249/ 외교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2023. 4. 11., p. 2, <[https://bel.mofa.go.kr/www/brd/m\\_3924/view.do?seq=363570&page=1](https://bel.mofa.go.kr/www/brd/m_3924/view.do?seq=363570&page=1)> (검색일: 2023. 10. 14.).

경제, 기후변화 분야에서 고찰하도록 하겠다. 아세안 지역, 특히 ‘남중국해’는 세계 최대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중요 ‘무역로’이므로,<sup>250/</sup> 한국의 경제안보를 위하여 안전하고 안정된 해상안보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테러, 해적, 불법행위(밀수)를 퇴치하기 위하여 아세안 국가와 남중국해에서 합동 해상 군사훈련(미국과 아세안 국가와의 합동 해상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함)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사력을 파견하는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sup>251/</sup> 그래서 아세안 국가가 남중국해 해양 안보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군수물자와 무기(전투기, 군함, 잠수함) 지원, 판매, 공동 개발과 군사 정보 공유 등 여러 가지 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이 격화되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 아세안 여러 국가는 국방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한국은 (서방 선진국의 비싼 무기보다) 고품질의 중저가 무기를 원하는 국가들과 국방 현대화에서 협력을 확대할 여지가 크다.<sup>252/</sup> 그리고 한국 상선의 안정적,

250/ 남중국해는 유럽·중동과 동아시아·태평양을 잇는 수송로로서, 남중국해의 연간 물동량은 “세계 연간 물동량의 3분의 1가량으로 금액으로 환산시 3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아세안, 남중국해 둘러싼 긴장 고조,”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이슈트렌드」, 2021.7.16.,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18032&mid=a10200000000&systemcode=03>> (검색일: 2023.10.15.).

251/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아세안 국가와 다자·양자 합동 군사훈련을 해오고 있고 이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Commander, Logistics Group Western Pacific Public Affairs Office, “First ASEAN-US Maritime Exercise Successfully Concludes,” U.S. 7th Fleet, September 6, 2019, <<https://www.c7f.navy.mil/Media/News/Display/Article/1954403/first-asean-us-maritime-exercise-successfully-concludes/>> (Accessed October 15, 2023); Dzirhan Mahadzir, “Japanese, U.S., the Philippines Drill in the South China Sea; China Contest U.S. Position on Territorial Disputes,” *USNI News*, September 5, 2023, <<https://news.usni.org/2023/09/05/japanese-u-s-the-philippines-drill-in-the-south-china-sea-china-contests-u-s-position-on-territorial-disputes>> (Accessed October 15, 2023).

252/ 2014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상은 한국과의 진

평화적 항해를 방해하는 나포나 침몰과 같은 긴급사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동티모르를 포함한 아세안과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sup>253/</sup> 정기적인 국방 고위급 회의를 통한 서로 간의 빈번한 소통이 향후 인태지역 급변사태에 한국 국민의 인명·재산상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중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아세안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아세안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상대적으로 근접한 지역이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라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한국의 과도한 대중국 의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은 이미 2007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고,<sup>254/</sup> 동남아는 공급망에서 ‘(탈중국) 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이기에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첨단·핵심 산업에 필요한 10대 전력 핵심 광물 중 희토류, 니켈, 코발트가 다량 매장되어 있다.<sup>255/</sup> 아세안 국가는 미

---

함, 잠수함 산업 개발에 관심을 가졌고, 인도네시아 군수산업 시장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이 차지하는 누적 점유율은 16.1%이고 이는 1위인 미국(17%)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김중하, “아세안(ASEAN) 해군력 현대화와 한-아세안 방산협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PERISCOPE」 no. 32, 2016. 3. 11., pp. 1~3, <<https://kims.or.kr/issubrief/kims-periscope/peri32/>> (검색일: 2023.10.16.); 강국진, “한국 방위산업, 인도네시아 시장 1위 노린다,” 『서울신문』, 2022.11.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07020057>> (검색일: 2023.10.16.).

253/ 한국 국방부는 2022년 9월 6일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아세안 각국 대표들과 ‘2022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를 개최함. “국방부차관, 2022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국방부, 2022.9.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634>> (검색일: 2023.10.16.);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p. 4.

254/ “한-ASEAN FTA,”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asean/>> (검색일: 2023.10.16.).

255/ 베트남은 세계 2위 희토류 매장국이고,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 니켈, 6위 코발트 매장국이며, 필리핀은 세계 2위 니켈, 4위 코발트 생산국이다. 박정호, “베

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니켈과 같은 아세안 지역에서 채굴된 배터리 광물을 사용해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sup>256/</sup> 배터리 광물의 생산과 가공에서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sup>257/</sup>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기존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해야 한다.<sup>258/</sup> 각국은 서로 다른 디지털 무역 규범을 가지고 있고, 특히 ‘개인정보보호’, ‘데이터·서버 현지화’, ‘디지털세’ 등 디지털 무

트남 정부의 최신 광물 개발 목표 및 계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10.16.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80&CONTENTS\\_NO=2&pNttSn=206830](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80&CONTENTS_NO=2&pNttSn=206830)> (검색일: 2023.10.17.); 이윤주, “광물·인구 부자 나라 인도네시아... “중국 의존 공급망 분산 시킬 핵심 지역,” 『한국일보』, 2023.9.1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0620220001275>> (검색일: 2023.10.17.); 정예린, “필리핀, 정부 주도의 광물 탐사 계획 발표,” 『더기루』, 2023.10.2., <<https://theguru.co.kr/mobile/article.html?no=60673>> (검색일: 2023.10.17.).

256/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포함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 혹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하고 가공한 광물을 40% 이상 포함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총 \$7,500)을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Releases Proposed Guidance on New Clean Vehicle Credit to Lower Costs for Consumers, Build U.S. Industrial Base, Strengthen Supply Chains,” March 31, 2023,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379>> (Accessed October 18, 2023).

257/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에서 채굴·가공한 배터리 핵심 광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정한 보조금 혜택에 포함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고, 협상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PEPF)’에 ‘핵심 광물협정’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Steven Overly, “More Countries Line up for U.S.’s EV Tax Credits,” *POLITICO*, June 2, 2023, <<https://www.politico.com/news/2023/06/02/southeast-asian-trade-partners-push-for-ev-tax-perks-00099800>> (Accessed October 18, 2023).

258/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디지털 무역은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 스트리밍 서비스, 클라우드, 다운로드)와 온라인 서비스(금융, 교육, 레저, 문화)를 포함한다. OECD, “Digital trade,” <<https://www.oecd.org/trade/topics/digital-trade/>> (Accessed October 16, 2023); “한-아세안 연대 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p. 5.

역 관련 이슈에서 글로벌 북부와 남부 간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sup>259/</sup> 향후 한-아세안 디지털 무역 확대를 위하여 한국과 아세안(혹은 개별 회원국)과의 디지털 무역 규범에서 합의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청정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동남아 전기차 수요는 근래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현지 공장을 건설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sup>260/</sup> 우리 기업도 기존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를 통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현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현지 공장 설립 및 수출을 통한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동남아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가 유리하다. 동남아 국가(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타개하고 탈탄소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 태양광, 풍력, 지열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sup>261/</sup>

---

259/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북부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지하고, 중국, 러시아 등 글로벌 남부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데이터와 서버의 현지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혜영, “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통상 리포트』 vol. 12, 2022.12.14., p. 13,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cmercReportDetail.do?no=2380>> (검색일: 2023.10.17.).

260/ 2022년 기준으로 동남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기업은 약 68%를 차지하였고, 현대·기아는 10%에 미치지 못하였다. 유창욱, “年 30% 성장 동남아 전기차 시장...한중 선점경쟁 격화,” 『서울경제』, 2023.6.4., <<https://www.sedaily.com/NewsView/29QQ42XT9E>> (검색일: 2023.10.19.).

261/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동시에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과 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Yang Liu and Riasat Noor, “ENERGY EFFICIENCY IN ASEAN: TRENDS AND FINANCING SCHEME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no. 1196, October, 2020, pp. 5~9,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648701/adbi-wp1196.pdf>> (Accessed October 20, 2023); Nuki Agya Utama, “Role of the ASEAN Center for Energy to Promote the Energy Transitions in ASEAN,” <[https://asiacleanenergyforum.adb.org/wp-content/uploads/2020/07/meti-ddw\\_nuki-agya-utama\\_ace-role-in-energy-transition.pdf](https://asiacleanenergyforum.adb.org/wp-content/uploads/2020/07/meti-ddw_nuki-agya-utama_ace-role-in-energy-transition.pdf)> (Accessed October 20, 20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은 대표적인 청정에너지인 원자력, 태양광, 수력, 풍력 발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발전소 수주를 통하여 동남아 청정에너지 생산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와 기업이 활용해야 한다.

## (2) 인도

인도는 미국의 인태 전략 핵심 협력국이자 중·러와 함께 브릭스 중추 회원국인면서 미·중 양국과 중요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방위적인 다자협력을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 강국이며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졌으므로 글로벌 남부의 새로운 리더이다. 2023년 9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인태지역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sup>262/</sup> 인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므로 향후 협력을 확대할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미 2005년 인도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2009년 양국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을 체결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제한을 완화하였다.<sup>263/</sup> 그러나 인도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

원, “(빅데이터로 보는)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동남아에서도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원자력 발전,” 아세안·인도·남아시아 전문가포럼 「월간경제」 2022.6.30.,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32106&mid=a3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4&currentPage=3&pageCnt=10](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32106&mid=a3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4&currentPage=3&pageCnt=10)> (검색일: 2023.10.20.).

<sup>262/</sup> 외교부,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2023.9.11., <[https://www.mofa.go.kr/www/brd/m\\_26079/view.do?seq=379](https://www.mofa.go.kr/www/brd/m_26079/view.do?seq=379)> (검색일: 2023.9.23.).

산업을 보호하고 독자적인 생산 능력을 강화하여 경제자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2018년부터 무역 장벽을 높이는 추세이다.<sup>264/</sup> 한국은 인도로부터 나프타<sup>265/</sup>, 면사, 철강 제품 등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하고 석유화학제품, 철강(아연), 기계, 메모리, 전자기기를 주로 수출한다.<sup>266/</sup> 인도와의 무역에서 한국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면, 양국 무역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인도산 중간재 수입 비용 감소로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sup>267/</sup>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5년, 8년, 12년 기한 내 순차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고, 매년 관세율을 감소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sup>268/</sup> 현행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대인도 수출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sup>269/</sup> 한·인 양국이 협상을 통한 조기 관세 감축 및 철폐로 교역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

---

263/ 이준호,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양국의 경제협력과 성장 동력 기대,”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2023.1.3.,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9754](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9754)> (검색일: 2023.8.31.).

264/ 김정근 외,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p. 3.

265/ “나프타를 원료로 열분해(NCC)하여 석유화학기초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을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다시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성섬유, 염료, 의약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제품을 만들어 낸다.” 여천 NCC, “나프타란 무엇인가?,” <<https://www.yncc.co.kr/ko/product/chemistry/naphtha1.do>> (검색일: 2023.8.31.).

26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현황,” <<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korea#search/IN/ALL/2023/7/exp>> (검색일: 2023.9.7.).

267/ 김정근 외,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p. 146.

268/ 산업통상자원부,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IA,” August 7, 2009, <[https://www.fta.go.kr/webmodule/\\_PSD\\_FTA/in/1/ALL\\_OF\\_CEPA\\_E.pdf](https://www.fta.go.kr/webmodule/_PSD_FTA/in/1/ALL_OF_CEPA_E.pdf)> (검색일: 2023.9.11.).

269/ 그 요인으로는 인도의 대중국 수입 확대, 비슷한 상품을 수출하는 일본과 인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2011), 모디 정부의 국내 생산강화 정책(Make in India) 등이 있다. 김정근 외,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p. 151.



가 있다.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삼성, 현대, LG, 포스코 등 대기업 위주의 제조업(전자제품, 통신기기, 자동차(위탁생산), 철강, 기계)에 집중되어 있지만,<sup>270/</sup> 인도는 2000년대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IT(information technology)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높은 교육 수준으로 형성된 풍부한 인재풀, 많은 IT 스타트업 기업, 글로벌 네트워크(미국 실리콘밸리)로 향후 인도는 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sup>271/</sup> 첨단기술 관련 제조업 강국인 한국과 제조업 디지털화 발전에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인도는 최근 재생에너지와 정보통신과 같은 미래지향적 신산업에서 대규모 해외투자를 받아들이고 있어, 우리 기업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AI, 이동통신, 전기차 등 첨단기술·전략산업에서 인도와의 공급망 협력이 가능하다. 인도는 풍부한 기술 인재와 낮은 임금으로 한국의 ‘탈중국 다변화’ 전략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고,<sup>272/</sup> 한·인 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회원국이라 다자기구를 통한 공급망 협력도 용이하다.

양국은 국방, 우주개발 산업에서도 협력을 합의한 만큼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G20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진행 중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국방 협

270/ 위의 책, p. 237.

271/ 이명무, “특집: 과학기술 경쟁력의 현황과 전망 (2): 인도의 IT산업 태동과 4차산업 전략”,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 브리프」, 제1권 28호, 2021.10.11., <<https://snuac.snu.ac.kr/?p=33687>> (검색일: 2023.9.11.).

272/ 이준호,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양국의 경제협력과 성장 동력 기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1. 3.,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9754](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9754)> (검색일: 2023.9.11.).

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고, 2023년 인공위성 발사 성공(누리호 발사 성공과 인도 찬드라얀 3호의 달 남극 착륙 성공)을 계기로 우주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sup>273/</sup>

### (3) 중남미

한국은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인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이슈에서 중남미와 협력할 수 있다. 우선 세계 식량문제 해결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남미는 기후가 따뜻하고 농지와 담수가 풍부하여 세계 최대 식량 생산(14%) 및 수출(14%) 지역이다.<sup>274/</sup> 세계 인구 중 약 10%인 8억 2,800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50%의 식량을 증산해야 한다.<sup>275/</sup> 중남미의 광활한 삼림을 파괴하지 않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혁신농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디지털, 정보, 통신, 기계, 화학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기에 중남미 국

---

273/ 대한민국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대통령실 보도자료, 2023.9.10.

274/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re “pillar for world food security,” <<https://www.fao.org/news/story/en/item/1395027/icode/>> (Accessed September 12, 2023); Inter-American Institute for Cooperation on Agriculture (IICA), “International trade in agri-food products from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nd the transformation of food systems,” 2021, p. 5, <<https://repositorio.iica.int/bitstream/handle/11324/18591/BVE21088342i.pdf?sequence=2&isAllowed=y>> (Accessed September 12, 2023); Mauricio Mesquita Moreira 외, “한국과 중남미: 지속가능한 무역과 투자를 위한 파트너,”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pp. 14~15, <<https://publications.iadb.org/publications/korean/document/latin-america-korea-partners-for-sustainable-trade-investment-korean.pdf>> (검색일: 2023.9.12.).

275/ Sevil Omer, “10 World Hunger Facts You Need to Know,” World Vision, August 28, 2023, <<https://www.worldvision.org/hunger-news-stories/world-hunger-facts>> (Accessed September 12, 2023); Mauricio Mesquita Moreira 외, “한국과 중남미: 지속가능한 무역과 투자를 위한 파트너,” p. 12.

가들과 농업 혁신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여 저탄소, 저비용, 에너지 효율적 식량 증산을 도모할 수 있어, 세계 식량 가격 안정과 하락에 도움 되어 국내 소비자들도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리고, 한국은 브라질(사탕수수, 옥수수, 콩), 페루(커피, 과일, 차), 콜롬비아, 파나마(축산)와 공동으로 스타트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sup>276/</sup> 농사의 전 과정(파종, 모종, 제초, 관개, 수확)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통신, 기계, 전자, 데이터 관련 기술이 광범위하게 필요하고, 한국은 이러한 첨단기술을 중남미 국가들에게 제공하여 스마트팜 인프라 건설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중남미는 한국과 에너지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이 가능하다. 중남미에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여러 산유국이 있고, 세계 석유 생산의 6.7%를 차지한다.<sup>277/</sup> 세계 석유, 천연가스 생산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한국의 높은 중동 석유 의존도(67%)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sup>278/</sup> 중남미는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광물 중 리튬(칠레, 아르헨티나), 니켈(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브라질), 코발트(쿠바), 망간(브라질, 흑연(브라질), 희토류 5종(세륨, 란탄, 네오디

276/ 김동천 외, “2023 중남미 진출전략,” KOTRA자료 22-114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2), p. 31, <<http://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29202>> (검색일: 2023.9.12.).

277/ 그러나 중남미의 천연가스 생산은 세계 총생산에서 단지 4%를 차지했다. “Distribution of oil production worldwide in 2022, by region,” Statista, August 25, 2023,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7621/distribution-of-global-oil-production-by-region/>> (Accessed September 13, 2023); “Natural gas production by region,” Statista,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natural-gas-production-by-region-terawatt-hours-twh>> (Accessed September 13, 2023).

278/ 도원빈, 허슬비,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러시아 대응: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2023-11, 2023.6.27.) p. 1, <[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pageIndex=1&no=2454&logGb=A9400\\_20230628](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pageIndex=1&no=2454&logGb=A9400_20230628)> (검색일: 2023.9.9.).

몹, 디스프로슘, 터븀)(브라질)의 주요 생산지이다.<sup>279/</sup>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가 향후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전략산업의 발전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기업은 중남미 광산 매입과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남미 국가는 탄소배출권 거래와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중남미는 풍부한 열대우림, 낮은 인구 밀도와 산업 성숙도로 인하여 탄소배출 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표 VI-6>에 따르면 한국은 중남미 주요 국가보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이 2~3배 이상 많다. 한국과 중남미의 탄소배출 불균형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표 VI-6** 한국과 주요 중남미 국가의 1인당 탄소 배출량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칠레
1인당 탄소 배출량	11.9t	2.3t	4.1t	3.2t	1.7t	4.4t

출처: Hannah Ritchie, Max Roser and Pablo Rosado, “CO<sub>2</sub>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Our World in Data, August, 2020. <<https://ourworldindata.org/co2-and-greenhouse-gas-emissions>> (Accessed September 13, 2023)를 참고하여 정리

중남미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가뭄, 수확량 감소, 수력발전 장애 등의 피해가 증가해 중남미 국가들도 탄소 중립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기회

<sup>279/</sup> 한국 정부는 첨단산업(반도체, 이차전지) 공급망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 광물을 선정함.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 산업통상자원부, 2023.2., p. 4. <[https://www.motie.go.kr/common/download.do?fid=bbs&bbs\\_cd\\_n=81&bbs\\_seq\\_n=166862&file\\_seq\\_n=1](https://www.motie.go.kr/common/download.do?fid=bbs&bbs_cd_n=81&bbs_seq_n=166862&file_seq_n=1)> (검색일: 2023.9.13.); “Share of top producing countries in total processing of selected minerals and fossil fuels, 2019,” International Energy Agency, May 5, 2021,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harts/share-of-top-producing-countries-in-total-processing-of-selected-minerals-and-fossil-fuels-2019>> (Accessed September 13, 2023); Mauricio Mesquita Moreira 외, “한국과 중남미: 지속가능한 무역과 투자를 위한 파트너,” p. 12.

가 커졌다. <표 VI-7>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여러 중남미 국가는 온실가스 20~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VI-7 중남미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목표 연도	국가	감축 목표
2030	파라과이	20% 감축
	멕시코	22% 감축
	브라질	50% 감축
	에콰도르	50% 감축
	콜롬비아	22% 감축
	아르헨티나	26% 감축
2050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	탄소 중립

출처: 김동천 외, “2023 중남미 진출전략,” p. 15.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광물 개발도 한국-중남미 협력이 유망한 분야이다. 여러 한국 이차전지 기업이 브라질(LG 에너지솔루션)과 아르헨티나(포스코)의 리튬 개발에 투자 중이다.<sup>280/</sup>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 가공된 광물을 일정 비율 포함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만이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sup>281/</sup>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의 광물 개발 협력을 확대하여 대미 전기차 수출에 활용해야 한다.<sup>282/</sup> 이차전지 핵심 광물 개발 외에도 원

<sup>280/</sup> 김동천 외, “2023 중남미 진출전략,” p. 10.

<sup>281/</sup> “BUILDING A CLEAN ENERGY ECONOMY: A GUIDEBOOK TO THE INFLATION REDUCTION ACT’S INVESTMENTS IN CLEAN ENERGY AND CLIMATE ACTION,” The White House, January, 2023, p. 49,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2/Inflation-Reduction-Act-Guidebook.pdf>> (Accessed September 23, 2023).

자력·풍력·수력 발전, 태양광 패널, 배터리 부품, 전기차 생산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칠레에서는 리튬을 싸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배터리 부품 기업을 유치 중이고,<sup>283/</sup> 한국은 태양광 패널, 이차전지, 전기차, 기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선진기술 및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에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sup>284/</sup>

#### (4) 중동

중동은 한국의 인태 전략에서 빠질 수 없는 협력대상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고, 최근 들어 중동국은 ‘비전 2030(Vision 2030)’(사우디아라비아)과 ‘아부다비 경제 비전 2030(Abu Dhabi Economic Vision 2030)’(아랍에미리트) 등 경제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여러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풍부하다.<sup>285/</sup> 이에 따라 해상 수송로를 공동으로 보호해야 하고, 문화적 이질성을 줄이기 위한 문화 교류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

282/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Free Trade Agreement (FTA) Partner Countries,”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https://www.trade.gov/us-free-trade-agreement-partner-countries>> (Accessed September 23, 2023).

283/ 김동천 외, “2023 중남미 진출전략,” p. 10.

284/ Mauricio Mesquita Moreira 외, “한국과 중남미: 지속가능한 무역과 투자를 위한 파트너,” p. 9.

285/ Vision 2030, “Overview,” <<https://www.vision2030.gov.sa/en/vision-2030/overview/>> (Accessed September 15, 2023);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Abu Dhabi Economic Vision 2030,” <<https://u.ae/en/about-the-uae/strategies-initiatives-and-awards/strategies-plans-and-visions/finance-and-economy/abu-dhabi-economic-vision-2030>> (Accessed September 15, 2023); 김강석, “새로운 협력 기회를 품고 중동시장이 다가온다,” 한국개발원, 2023. 3., <[https://ie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cidx=14217&sel\\_year=2023&sel\\_month=03&pp=20&pg=1](https://ie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cidx=14217&sel_year=2023&sel_month=03&pp=20&pg=1)> (검색일: 2023. 9. 14.).

석유 수출에 의존해 오던 중동 국가들은 ‘포스트 오일(Post-Oil)’ 시대를 대비하여 ‘탈석유’ 경제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에게 ‘제2의 중동 봄’이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2년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과 윤석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방문으로 한국은 중동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sup>286/</sup> 특히 우리 기업이 우수한 기술과 풍부한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건설(교통, 도시 인프라), 제조업(식품, 자동차, 기계, 전자), 에너지(신재생에너지(수소, 태양광)), 원전(송배전), 첨단기술(디지털 전환, 스마트시티), 식량 생산(스마트농업), 보건 의료(인력 양성, 제약, 의료기기), 방위산업(무기 수출) 분야에서 이 지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sup>287/</sup>

지중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홍해, 바발만데브 해협, 호르무즈 해협, 소말리아 동부 해안은 석유, 천연가스, 상품의 중요한 수송로이다. 그러나 테러리스트, 해적, 이란 함정(및 무인기)이 수시로 상선과 민간 선박을 나포·공격하는 지역이므로,<sup>288/</sup> 이 지역에서 항해의 자유와 안전 보장은 인태지역 경제의 발전과 번영에 아주 중요하다. 미국은 해군 함대 추가 파견을 통해 해상 안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아라비아해 국가(사우디아라비아, 오만,

286/ “한국과 UAE 양국은 300억 달러(약 37조 원) 규모의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강석, “새로운 협력 기회를 품고 중동시장이 다가온다.”

287/ 송효규 외, “新중동(Neo-Middle East) 경제협력 및 수출 확대 방안,” 한국무역협회, 「Trade Brief」, no. 3, 2023.2.6., pp. 3~4, pp. 6~7; 보건복지부, “중동국가와의 K-의료 협력 활성화,” 2023.3.10.,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5321&SEARCHKEY=TITLE](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5321&SEARCHKEY=TITLE)> (검색일: 2023.9.15.).

288/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aritime Administration, “2023-003-Persian Gulf, Strait of Hormuz, Gulf of Oman, Arabian Sea, Gulf of Aden, Bab al Mandeb Strait, Red Sea, and Somali Basin-Threats to Commercial Vessels,” <<https://www.maritime.dot.gov/msci/2023-003-persian-gulf-strait-hormuz-gulf-oman-arabian-sea-gulf-aden-bab-al-mandeb-strait-red>> (Accessed September 15, 2023).

예멘, 지부티, 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들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아라비아해 국가 및 미국과의 정기적인 합동 해상 군사훈련 실시, 실시간 정보공유, 무기 지원을 통한 인태지역 해상안보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과 중동은 물질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지만, 이질적인 문화와 먼 지리적 거리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중동 국가에 대해 ‘테러지원국’이라는 인식이 있고, 중동 국가는 한국에 대해 친미 성향이 강한 ‘미국 앞잡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sup>289/</sup> 이러한 이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적인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호 문화적 이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중동 국가에 한국문화 프로그램 운영, 한류 전파, 한국문화 소개 포털 사이트 운영 및 책자 발간, 한국 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한국문화 현지 전문가 육성, 종교 지도자 초청, 중동 문화유산 공동 조사·발굴·복원 사업 참여를 추진해야 하고, 국내에서는 중동 교과서 왜곡에 대한 수정작업, 중동문화 연구 프로그램 추진, 중동-이슬람 문화원 설립, 중동-이슬람 문화 전문가 양성, 중동 전담 대사직 및 전담 문화보좌관을 신설해야 한다.<sup>290/</sup>

### (5) 북한 비핵화 협력

동남아, 인도, 남미, 중동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에서 멀리 위치하여 북핵 문제에 직접적인 당사국은 아니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 이들과의 협력 여지가 크다. 인도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도발에 우려를 표해왔고,<sup>291/</sup> 인태 전략의 핵심 국가이기에 향후 북핵 문제 해결에

289/ 이희수, “한국과 중동지역 문화협력 과제: 장기지속적인 관점에서,”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pp. 3~4, (<[https://www.kiep.go.kr/boardDownload.es?bid=0034&list\\_no=6048&seq=1](https://www.kiep.go.kr/boardDownload.es?bid=0034&list_no=6048&seq=1)> (검색일: 2023.9.15.).

290/ 위의 글, pp. 4~10.



인도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인도와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가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인도는 한·인(2023.9.10.), 쿼드(2023.5.20.)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무력 고도화를 규탄한 바 있으며, 북한의 유엔 결의안 준수와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으로의 복귀를 주장했다.<sup>292/</sup> 또한 2023년 9월 23일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최근 ‘러시아-북한 무기·미사일 기술 거래’ 의혹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sup>293/</sup>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인도와의 연대는 중·러의 대북 지원 및 협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인도는 중·러와 함께 브릭스 핵심 회원국이므로, 중·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중·러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국제 제재를 받는 이란의 브릭스 가입을 인도가 반대하였다(인도의 반대에도 이란은 브릭스에 가입하였다).<sup>294/</sup> 중국은 북

291/ 인도는 2022년 11월 5일 유엔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Swati Bhasin, "India Expresses Concern at UN after North Korea ICBM Launch: 'Adverse Impact...'," *Hindustan Times*, November 5, 2022,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 (Accessed October 6, 2023).

292/ 대한민국 대통령실, "尹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2023.9.10.,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cP3ptfcF>> (검색일: 2023.10.6.); The White House, "Quad Leaders' Joint Statement," May 20, 202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5/20/quad-leaders-joint-statement/>> (Accessed October 6, 2023).

293/ 쿼드 4국 외교장관들은 유엔 결의안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다시 확인하였고, 북한의 유엔 결의안 준수와 비핵화 협상 복귀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Anirban Bhaumik, "India, joins US, Australia, and Japan to Urge Russia against Arms Deal with North Korea," *Deccan Herald*, September 23, 2023, <[23deccanherald.com/india/india-joins-us-australia-and-japan-to-urge-russia-against-arms-deal-with-north-korea-2698681](https://www.deccanherald.com/india/india-joins-us-australia-and-japan-to-urge-russia-against-arms-deal-with-north-korea-2698681)> (Accessed October 6, 2023).

294/ 인도 총리 모디는 국제 제재를 받는 국가의 브릭스 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Shahir Shahidsaless, "The Implications of Iran's Inclusion in BRICS," The Henry L. Stimson Center, August 31, 2023, <<https://www.stimson.org/2023/the-implications-of-irans-inclusion>>

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해오고 있으며,<sup>295/</sup> 최근 러·북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 미사일·위성 기술과 북한의 재래무기를 교환하는 거래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sup>296/</sup> 인도와 연대해 중·러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대북 지원과 협력을 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남아, 남미, 중동 국가들은 북핵 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아, 이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사우스와 긴밀하게 협력해 북핵 이슈가 인태지역의 안보 이슈 중 우선순위로 격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개별 국가의 대북 독자제재 강화를 독려하여 인태지역에 ‘동시·연쇄 제재’가 가능한 촘촘한 ‘대북 제재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sup>297/</sup> 적극적인 양자·다자 외교를 통해 이들에게 세계·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한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당위성 및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 순방 당시, 페루, 칠레, 콜롬비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sup>298/</sup>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북한 비핵화

---

-in-brics/> (Accessed October 6, 2023).

295/ 코로나-19 종식 후 중·북 국경 봉쇄가 해제되어 양국의 무역이 재개되었다. Ethan Jewell, “North Korean Exports to China Hit COVID-era High as Trade Continues to Recover: Despite jump, expert says figures remain far enough below pre-pandemic levels that single shipment can sway totals,” *North Korea News*, September 19, 2022, <<https://www.nknews.org/2022/09/north-korean-exports-to-china-hit-covid-era-high-as-trade-continues-to-recover/>> (Accessed September 19, 2023).

296/ Tessa Wong, “Vladimir Putin Says Military Cooperation with Kim Jong Un a Possibility,” *BBC*, September 15, 2023, <<https://www.bbc.com/news/world-asia-66783384>> (Accessed September 19, 2023).

297/ 김민성, “담대한 구상 여건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열린토론회 발표자료, 2023.8.30.

298/ 백성원, “남미 국가들 ‘북한, 핵 포기하고 인권개선 해야,’” *Voice of America Korea*, 2015.4.21., <<https://www.voakorea.com/a/2727322.html>> (검색일: 2023.10.10.); “한국-콜롬비아 정상회담, 중남미와 30억 달러 전자상거래

외교'의 적극적 추진은 북핵 문제에 대한 글로벌 사우스의 공감대 형성에 큰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 다. 중국·러시아 관리 대응과 한계

한국의 인태 전략은 중국을 포용하지만, 미국의 인태 전략은 중국을 견제한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인태 전략에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인태 전략 국가인 한국도 이를 고려해 대중국 접근에 신중해야 한다.<sup>299/</sup> 미국의 인태 전략이 대중국 견제 의도가 강하더라도,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노골적으로 거리를 두는 전략은 한국의 국가 안보, 경제 안보, 북핵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세심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와 육지로 이어져 있고 서해를 사이에 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다음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군사 대국으로서 한국에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sup>300/</sup> 또 공급망에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입 파트너이자 해외 직접 투자처이다.<sup>301/</sup> 중국은 북한의 오랜 사회주의 우방국이며, 북한이 경제적(무역, 투자)으로 가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므로, 북핵 문제 해결에 미국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다.<sup>302/</sup> 한국의 인태 전략 성패에 대중국 관리

추진," Voice of America Korea, 2015.4.18., <<https://www.voakorea.com/a/south-korea-columbia/2724898.html>> (검색일: 2023.10.10.).

299/ 韦宗友, "拜登政府“印太战略”及对中国的影响," 『国际问题研究』, vol. 3 (2022), p. 31.

300/ 중국은 200만 군, 1,199대 전투기, 2대 항공모함, 78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The Global Firepower, "2023 China Military Strength," ,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y-military-strength-detail.php?country\\_id=china](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y-military-strength-detail.php?country_id=china)> (Accessed September 18, 2023).

301/ 2022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는 각각 19.7%, 22.9%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현황," <<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korea#search/ALL/ALL/2023/7/exp>> (검색일: 2023.9.18.).

302/ 2021년 중·북 무역 비중은 95.6%로 사실상 북한 무역 전체의 흐름을 보여준다

가 중요한 이유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중국 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중 전략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 중·러 간 ‘신냉전’적 진영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한국은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의 전략(인태 전략 및 공급망 재편)에 최대한 협조하되, 중국과의 협력 고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 2017년 사드 사태와 2019년 코로나-19 후 한국 정부와 기업이 탈 중국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오고 있지만, 세계 최대 생산 허브인 중국은 여전히 한국 기업의 반도체, 이차전지 및 여러 제조업 상품의 주요 생산지이다. 한국무역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일국 수입 비중이 80% 이상인 품목은 3,941개였으며, 이 중에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1,85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03/</sup> 특히 산화텅스텐(94.7%), 수산화리튬(83.5%), 마그네슘 잉곳(100%) 등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생산의 핵심 원자재의 중국의존도가 특히 높다.<sup>304/</sup> 급진적인 탈중국 전략은 공급망 혼란과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 기존의 중국 생산 허브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대체할 생산 거점을 점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남방정책에 따르면 인도, 동남아(베트남, 태국)가 대체 가능한 생산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역은 젊은 노동인구(평균연령 30세, 총인구 20억 명)가 풍부하고, 소비 시장이 빠르게 성장(연평

---

고 할 수 있다. 최장호, 최유정, “2022년 북중 무역 평가: 경제난의 가속과 위드코로나 전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no. 22-6, 2023.3.23., p. 3,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list\\_no=10632&act=view](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list_no=10632&act=view)> (검색일: 2023.9.18.).

303/ 김영채, “탈중국, ‘어떻게’가 관건…핵심은 구조적 공급망 안정,” 『한국무역신문』, 2021.12.24., <<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3&no=77943>> (검색일: 2023.9.19.).

304/ 위의 글.

균 15%)하고 있어 미래의 생산 거점 및 소비 시장으로 유망하다.<sup>305/</sup>

한편, 미·중 공급망 경쟁에서 한국 단독으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거나, 혹은 중국의 공급망 정책에 동조하는 전략은 미·중에게 압박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바, 다자기구를 통한 공급망 참여가 현명한 대안이다. 예를 들어 아세안+3,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APEC에서 다자협상을 통한 미국 혹은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한다면 미·중 양국을 자극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북한 문제에서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므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한·중, 한·미·중, 한·일·중 양자 혹은 다자 정상회담(및 고위급회담)을 추진해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중·북 국경 봉쇄가 해제되어 양국 무역이 재개되었고,<sup>306/</sup> 러시아와 북한 정상이 만나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맞교환하는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sup>307/</sup> 동시에 중·러·북 연대 가능성도 회자되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은 국제적 제재를 받는 러시아, 북한과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지만, 군사적 지원이나 외교적인 교류는 삼가고 있다.<sup>308/</sup>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중국과의 접촉을 원하고 있고, 중국도 러·북 연대로 인한 자

305/ 외교부, “신남방정책: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2019.10.15.,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65591#visualNews>> (검색일: 2023.9.19.).

306/ Ethan Jewell, “North Korean Exports to China Hit COVID-era High as Trade Continues to Recover: Despite jump, expert says figures remain far enough below pre-pandemic levels that single shipment can sway totals,”

307/ Tessa Wong, “Vladimir Putin Says Military Cooperation with Kim Jong Un a Possibility.”

308/ Simone McCarthy, “The West Fears a Closer Russia and North Korea, China May Not,” *CNN*, September 15, 2023, <<https://edition.cnn.com/2023/09/15/china/china-kim-putin-summit-russia-north-korea-intl-hnk/index.html>> (Accessed September 19, 2023).

국의 영향력 약화를 원하지는 않는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의 공급망 경쟁으로 외교적 파트너가 필요할 수 있어 향후 중국이 러·북과 협력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sup>309/</sup> 따라서 한·중, 한·미·중, 한·일·중 회담을 개최하여 중국이 러·북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차단하고, 북핵 문제에서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중국은 러·북에 영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서방과의 관계 회복으로 공급망 위기를 타개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회담을 통해 공급망 위기를 벗어나고, 그 대가로 공급망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러·북과 거리를 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sup>310/</sup>

한편, 러시아는 한국의 인태 전략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 고립 상황에 빠져 있지만, 북한과 육지로 접해있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태평양 함대를 보유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와 지정학에 영향을 주는 국가인 만큼 한국의 인태 전략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한국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한국 상품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다.<sup>311/</sup> 향후 러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

309/ David Pierson, "Putin and Kim's Embrace May Place Xi in a Bind: Closer ties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could weaken Beijing's leverage over both countries and set back China's efforts to stabilize its ties with the West,"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6, 2023, <<https://www.nytimes.com/2023/09/16/world/asia/china-putin-kim.html>> (Accessed September 20, 2023).

310/ *Ibid.*

311/ Michelle Toh, "Chinese Brands have Replaced iPhones and Hyundai in Russia's War Economy," CNN, February 25, 2023, <<https://edition.cnn.com/2023/02/25/business/russia-chinese-brands-sales-surge-ukraine-war-intl-hnk/index.html>> (Accessed June 8, 2023); Tadviser, "Household appliances and electronics (Russian market)," April 10, 2023, <[https://tadviser.com/index.php/Article:Household\\_appliances\\_and\\_electronics\\_\(Russian\\_market\)](https://tadviser.com/index.php/Article:Household_appliances_and_electronics_(Russian_market))> (Accessed June 23, 2023).

이익이 더 축소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은 대러 제재 대상 품목을 확대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그런 한편으로,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양측 간 군사협력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sup>312/</sup>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는 등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면 우리 정부는 러·북에 단호하게 경고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 부과를 고려할 수도 있다.

## 라. 한국 중심의 국제 기제

한국이 인태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탈냉전 시대 강대국 외교에서 벗어나, 국제 안보, 무역, 투자, 기후변화, 인권 보장, 빈부격차 감소 등 여러 이슈에서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자외교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sup>313/</sup> 첫째, 중견국(한국, 호주, 터키,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스웨덴)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체제에서 강대국에 협력하고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므로,<sup>314/</sup> 기존 국제기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새로 설립 되는 인태지역 국제기구 준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312/ Guy Faulconbridge and Soo-Hyang Choi, "Putin and North Korea's Kim Discuss Military Matters, Ukraine War and Satellites," Reuters, September 14, 2023, <<https://www.reuters.com/world/nkoreas-kim-meets-putin-missiles-launched-pyongyang-2023-09-13/>> (Accessed September 20, 2023).

313/ 유재광 외, 『한국의 국제기구 외교평가: 성과, 한계, 개선 방향 -유엔 PKO·안보리, IMF, WHO, UNDP를 중심으로-』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2020), p. 22.

314/ 김우상, 『중견국 책략: 미·중 사이 한국의 스마트 외교』 (서울: 세창출판사, 2016), p. 19.

지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규범, 규칙, 법규가 제정되도록 신흥 기구의 규칙 및 법규 제정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중견국은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점을 가지는 특정 분야에서 정책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 협력해야 한다.<sup>315/</sup> 한국은 첨단기술(반도체, 이차전지, AI, 전자, 기계,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제조업에서 강점이 있어 첨단과학기술, 무역, 공급망 관련 기구에서 유사한 정책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중추적 역할을 도모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는 단순 교역을 넘어 디지털 경제, 기술 표준, 공급망 탄력성, 탈탄소, 노동 표준화에서 지역 국가들의 협력을 도모하는 인태지역의 대표적인 국제기구이다.<sup>316/</sup>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해져 공급망 탄력성 회복이 국가 경제안보의 관건이 되었다. 한국은 미·중 공급망 경쟁에서 중요한 첨단기술·전략산업 공급망 허브이므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일본, 싱가포르와 협력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한편, 인태지역 신흥 국제기구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경제·통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루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나토와 쿼드 등 기존의 국제 안보기구와 소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한국은 2006년부터 나토와 다양한 글로벌

<sup>315/</sup> 위의 책, p. 19.

<sup>316/</sup> The White House, "FACT SHEET: In Asia, President Biden and a Dozen Indo-Pacific Partners Launch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May 23, 202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5/23/fact-sheet-in-asia-president-biden-and-a-dozen-indo-pacific-partners-launch-the-indo-pacific-economic-framework-for-prosperity/>> (Accessed September 16, 2023).



안보 이슈(사이버 공격, 테러, 대량살상무기)에서 협력을 해오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와의 안보·기술 파트너십을 준회원국 수준으로 강화한 바 있다. 한국은 이 같은 기회를 활용해 북핵 문제 해결에서 나토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sup>317/</sup>

표 VI-8 국가별 인구 대비 유엔사무국 자국 인원 진출

순위	국가	자국민력 비율	인구 비율	초과 대표성
1	핀란드	0.0276	0.00115	24.03
2	스웨덴	0.0437	0.00198	22.15
3	노르웨이	0.0185	0.00096	19.21
4	뉴질랜드	0.0136	0.00071	19.00
6	덴마크	0.0142	0.00120	11.80
11	스위스	0.0126	0.00149	8.44
15	캐나다	0.0406	0.00551	7.37
81	한국	0.0037	0.00820	0.45

출처: Paul Novosad and Eric Werker, "Who Runs the International System?: Nationality and Leadership in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ol. 14 (2019), pp. 15~16.

셋째, 한국은 인태지역 국제기구 고위직<sup>318/</sup>에 참여하는 인원을

317/ 한국은 2022년 5월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나토의 사이버방위센터'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11일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와 만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인공지능(AI)·우주·미사일·양자 기술 등 신형기술, 사이버 방위 등 11개 분야의 한-나토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다." 장관석, "韓, 나토 군사훈련 참여... '준회원국 수준' 협력 강화," 『동아일보』, 2023.7.1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712/120188929/1>> (검색일: 2023.10.11.); "국정원 "한국,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 가입...아시아 최초", KBS, 2022.5.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56327>> (검색일: 2023.10.11.); 대한민국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p. 24.

318/ 국제기구에서 고위직은 "국장급 이상 사무국 직원, 이사회/위원회 의장, 이사/위원, 국제재판소 재판관"이다. 외교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 e-나라지표, 2023.7.4.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

늘려 이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의 소집, 중재, 조율, 의제 선정 및 규범 주창을 주도해야 한다.<sup>319/</sup>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참여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 영향력을 반영하는 척도이지만,<sup>320/</sup> 한국은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재정 분담률에 비해 인력 진출 비율이 낮아, 한국 국익 도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22년 한국은 유엔분담률(2.57%)이 세계 9위이나,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이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기구 사무국에서 활약하는 인력(특히 고위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sup>321/</sup> <표 VI-8>은 국가별 인구 대비 유엔사무국 자국 인원 진출을 보여준다. 본 표의 ‘초과 대표성’은 한 국가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각국 인력의 유엔사무국에서의 점유 비율을 의미한다.<sup>322/</sup> 유엔사무국 초과 대표성에서 상위에 자리 잡은 국가들은 북유럽, 노르딕(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오세아니아(뉴질랜드) 중견국들이고, 한국은 81위에 머무르고 있다. 스웨덴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 중 0.1%에 불과하지만, 유엔사무국 고위직 자리는 4.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 세계 인구의 0.8%를 차지하면서도, 유엔사무국 고위직 자리는 0.37%만 차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 인태지역 국제기구 사무국에 인력(특히 고위직)을 적극적으로 진출시켜 국제기구에서 우리 정부의 이익을

---

EachDtlPageDetail.do?idx\_cd=1679) (검색일: 2023. 8. 16.).

319/ Sook-Jong Lee, et al., “Middle Power in Action: The Evolving Nature of Diplomacy in the Age of Multilateralism,” East Asia Institute MPDI Special Report, April, 2015, p. 6, <<https://www.files.ethz.ch/isn/191150/30.04.2015.pdf>> (Accessed September 16, 2023).

320/ 외교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

321/ 위의 자료.

322/ Paul Novosad and Eric Werker, “Who Runs the International System?: Nationality and Leadership in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ol. 14 (2019), p. 13.

대변하도록 해야 한다.

인태지역의 지역적 범위는 매우 광활한바, 북핵 문제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상술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인태지역 국제기구에서 북핵 문제가 최상위 이슈로 격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인태지역 국제기구 설립 작업(규범, 규칙, 법규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북핵 문제가 국제기구에서 최상위 어젠다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일단, 북핵 문제가 인태지역 국제기구에서 중요 의제로 선정되면, 북핵 문제 해결에서 회원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으며, 비핵화 규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 마. 경제 안보(공급망)

경제 안보란 국가 안보에 필요한 자원, 재화, 서비스를 생산 또는 공정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상태를 지칭한다.<sup>323/</sup> 더 간단하게 정의하면 경제 안보는 국가의 유지를 위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자원, 재화, 서비스) 공급망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인태 전략은 첨단기술·전략산업에서의 안정적인 공급망 강화를 포함하고 있어, 인태지역 내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에 협력하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특히 인태지역에서 미국은 우방국과 동맹국 위주로 형성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를 통하여 ‘일본-타이완-동남아-호주-인도’ 공급망 연대를 확대하고 있다.<sup>324/</sup>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의 이익 분야

<sup>323/</sup> Brenda L. Horrigan, Theodore Karasik and Rennison Lalgee, “Security Studies,” in *Encyclopedia of Violence, Peace, & Conflict*, eds, Lester Kurtz, second edition (Cambridge: Academic Press, 2008), pp. 1892~1900.

<sup>324/</sup> Abigail Dahlman and Mary E. Lovely, “US-led Effort to Diversify Indo-Pacific Supply Chains away from China Runs Counter to Trends,”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eptember 6, 2023,

에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협력하여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고, 세계 최대 생산 허브인 중국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sup>325/</sup>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에서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공급망 전략은 미국 혹은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생산하는 반도체와 애플의 아이폰 휴대전화에 제재를 가하고 있고,<sup>326/</sup> 핵심 광물인 갈륨과 마그네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sup>327/</sup> 미국 주

---

<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s/us-led-effort-diversify-indo-pacific-supply-chains-away-china-runs-counter> (Accessed September 22, 2023).

<sup>325/</sup> 중국은 세계 휴대전화(67%), 자동차(32.5%), 배터리 셀(75%), LCD(55.5%) 생산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딩 생산 허브이다. Minsoo Kang, “China Accounted for 67% of Global Handset Production in 2021,” Counterpoint, September 13, 2022, <https://www.counterpointresearch.com/insights/global-handset-production-2021/> (Accessed September 22, 2023); Statista, “China’s share in global vehicle production from 2008 to 2021,” March 23, 2023,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33942/chinas-share-of-global-production-capacity-of-the-automobile-industry/> (Accessed September 22, 2023); Barry van Wyk, “Supercharged China: Cars, Batteries, and Lithium,” China Observer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July 10, 2023, <https://chinaobservers.eu/supercharged-china-cars-batteries-and-lithium/> (Accessed September 22, 2023); Young-sil Yoon, “China Narrows Its Gap with Korea in OLED Production Capacity,” Business Korea, July 26, 2023,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156> (Accessed September 22, 2023).

<sup>326/</sup> Laura He, “Micron Warns of Lost Revenue after China Slaps It with Sanctions,” CNN, May 23, 2023, <https://edition.cnn.com/2023/05/22/tech/china-ban-us-micron-chips-intl-hnk/index.html> (Accessed September 22, 2023); Yoko Kubota, “China Bans iPhone Use for Government Officials at Work: Restrictions are the latest step in Beijing’s campaign to reduce reliance on overseas technology,” *The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6, 2023, <https://www.wsj.com/world/china/china-bans-iphone-use-for-government-officials-at-work-635fe2f8> (Accessed September 22, 2023).

<sup>327/</sup> “商务部 海关总署公告2023年第23号 关于对镓、锗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公

도의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한국의 지나친 편승은 중국의 대한국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점진적인 탈중국 다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다자기구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미국과 중국의 압박을 피하는 방안이다. 인태지역에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APEC, D-10(ten leading democracies) 전략 포럼 등 여러 다자기구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기구들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면 한국 단독의 다변화 전략보다 미국과 중국을 자극할 여지가 적어진다. 다자기구는 첨단기술·전략산업의 핵심 기술, 원료,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공급망 위기‘조기경보 시스템’과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을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다.

미·중 공급망 경쟁과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양자 혹은 다자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sup>328/</sup> 예를 들어 미국은 양자 혹은 다자 공급망 동맹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반도체 분야에서 연구, 개발, 생산, 정책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대서양 협력(trans-Atlantic cooperation)’을 형성하였고,<sup>329/</sup>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따라 한국, 일본

告,”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23.7.3., <<http://exportcontrol.mofcom.gov.cn/article/zcfg/gnzcfg/zcfggzqd/202307/847.html>> (Accessed September 22, 2023).

<sup>328/</sup> 공급망 동맹은 공급망 다변화와 다르게 단순히 여러 생산지 및 공급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인재 양성, 정책 형성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sup>329/</sup> Jennifer Meng,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IA) -- Semiconductor Priorities for the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Europa Kommissionen, October 26, 2021, <<https://futurium.ec.europa.eu/da/EU-US-TTC/wg10/documents/semiconductor-industry-association-sia-semiconductor-priorities-us-eu-trade-and-technology-council?language=da>> (Accessed September 3, 2023).

과 첨단기술·전략산업(반도체, 배터리, 제약, 광물) 공급망에서 조 기경보 시스템과 같은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sup>330/</sup> 그리고 인도를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생산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250억 달러 신규 투자를 계획 중이다.<sup>331/</sup>

하지만 미국에 비해 한국은 첨단기술·전략산업의 동맹 강화에 그 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일본과 타이완보다 늦게 ‘칩4’ 한·미·일·타 반도체 협의체 참여를 선언했고,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 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인태지역 주요 국가들과 첨단기술·전략산 업에서 공급망 양자·다자 동맹을 형성해야 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AI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기술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미국, 일 본, 인도, 싱가포르, 타이완, 네덜란드와 양자 동맹을 맺고, 유럽연 합,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아세안, 남미(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칠레) 등 지역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전략 물자 공급망 다자 동맹을 형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330/ 주한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캠프 데이비드 정신,” 2023.8.19., <<https://kr.usembassy.gov/ko/081923-the-spirit-of-camp-david-joint-statement-of-japan-the-republic-of-korea-and-the-united-states-ko/>> (검색 일: 2023.9.22.).

331/ Shaumik Ghosh, “India-US Semiconductor Cooperation: Can India insert itself into the pantheon of global chipmakers with a little help from Washington?,” *The Diplomat*, December 12, 2022, <<https://thediplomat.com/2022/12/india-us-semiconductor-cooperation/>> (Accessed September 3, 2023).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고재남. 『러·중의 유라시아 협력 동향과 신북방정책 추진 전략』.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세안·인도연구센터 편.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평가 및 추진방안』.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 김우상. 『중견국 책략: 미·중 사이 한국의 스마트 외교』. 서울: 세창출판사, 2016.
- 김정곤·한형민·금혜운·백종훈·이선형.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 민태은·박동준.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22.
- \_\_\_\_\_. 박은주·정재관·백승준.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서울: 통일연구원, 2021.
- 유재광·조원빈·김남규·홍미화·이영주·권재범. 『한국의 국제기구 외교평가: 성과, 한계, 개선 방향 -유엔 PKO·안보리, IMF, WHO, UNDP를 중심으로-』.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2020.
- 이기태·배정호.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no. 19-02. 서울: 통일연구원, 2019.
- 최원기.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지역적 역할 확대 추진 방향』.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 서보혁 외.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
- 현승수·이우태·이재영·김규륜·이현태.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

- 변영].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Kurtz, Lester R.(ed.). *Encyclopedia of Violence, Peace, & Conflict*. Cambridge: Academic Press, 2008.
- Leviste Jr., Jose P. ed., *the Pacific Lake: Philippine Perspectives on a Pacific community*. Manila: The Philippine Council for Foreign Relations, 1986.
- Schulzinger, Robert D.. *U.S. Diplomacy Since 190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Shambaugh, David(ed.). *China and the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 Sutter, Robert G., *The United States in Asia*.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9.
- 大庭三枝. 『重層的地域としてのアジア: 対立と共存の構図』. 東京: 有斐閣, 2014.
- Арин, О.А.,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мифы, иллюзии и реальность*. М.: Флинта, Наука, 1997.

## 2. 논문

- 고상두. “우크라이나 전쟁의 동북아 지역 영향과 한국의 대러 전략 및 과제.” 『슬라브학보』. 제38권 2호, 2023.
- 김석수·정혜경. “인도·태평양 시대와 일본과 인도 관계.” 『일본연구』. 제81호. 2019.
- 김선재. “중국의 「대만백서」 발간과 동아시아 외교·안보.” 『현안, 외국에선?』. no. 2022-17(통권 제43호). 서울: 국회도서관, 2022.
- \_\_\_\_\_. “중국의 新국가전략: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함의.” 『현안, 외국에선?』. no. 2023-12(통권 제61호). 서울: 국회도서관, 2023.



- 김영선. “한-아세안관계 30주년, 신남방정책의 나아갈 방향은?” 『아시아지역리뷰』. 제2권 1호. 서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9.
- 민정훈.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및 향후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23-10.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 이기태. “일본 해상보안청 역할 강화의 흐름과 시사점.” 『일본공간』. 제 28권, 2020.
- 현승수. “인도의 유라시아 전략.” 『세계와 유라시아』. 제1권 1호. 한국 유라시아학회, 2022.
- Denisov, I., O. Paramonov, E. Arapova and I. Safranchuk. “Russia, China, and the Concept of Indo-Pacific.” *Journal of Eurasian Studies*. vol. 12, no. 1, 2021.
- Dirlik, Arif. “The Asia-Pacific Idea: Reality and Representation in the Invention of a Regional Structure.” *Journal of World History*. vol. 3, no. 1, 1992.
- Li, Hansong. “The “Indo-pacific”: Intellectual Origins and International Visions in Global Context.” *Modern Intellectual History*. vol. 19, 2022.
- Llewelyn, James D.. “Preventive Diplomacy and the Role of Civil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Strategic Analysis*. vol. 41, 2017.
- Novosad, Paul and Eric Werker. “Who runs the international system? Nationality and leadership in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ol. 14, 2019.
- 江原規由. “一帶一路の現段階と日本.” 『國際問題』. no. 673, 2018.
- 菊地努. “インド太平洋 戦略の地政学: 地域秩序の主体は誰か.” 『國際問題』. no. 687, 2019年12月.

- 大庭三枝, “日本の「インド太平洋」構想.”『国際安全保障』, 第46卷第3号, 2018年12月.
- 韦宗友, “拜登政府“印太战略”及对中国的影响.”『国际问题研究』, vol. 3, 2022.

### 3. 기타

- 『더구루』 <<https://theguru.co.kr>>
-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
- 『매일경제』 <<https://www.mk.co.kr>>
- 『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 『한겨레21』 <<https://h21.hani.co.kr>>
- 『한국무역신문』 <<https://www.weeklytrade.co.kr>>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
- 『K스피릿』 <<http://www.ikoreanspirit.com>>
- KBS <<https://www.kbs.co.kr>>
- SBS <<https://www.sbs.co.kr>>
- VOA <<https://www.voakorea.com>>
- YTN <<https://www.ytn.co.kr>>
- BBC <<https://www.bbc.com>>
-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
- Business Korea <<https://www.businesskorea.co.kr>>
- CNN <<https://edition.cnn.com>>
- Deccan Herald <<https://www.deccanherald.com/>>

- Global Times* <<https://www.globaltimes.cn>>  
*Hindustan Times* <<https://www.hindustantimes.com>>  
*Reuters* <<https://www.reuters.com>>  
*TASS* <<https://tass.com>>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  
*The Economic Times*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  
*The Times of India*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  
*The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  
 光明日报 <<https://www.ciis.org.cn>>  
 新华网 <<http://www.news.cn>>  
 人民网 <<http://www.people.cn>>  
 人民日报 <<http://world.people.com.cn>>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프리프 <<https://www.inss.re.kr>>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https://www.ifans.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s://www.kiep.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s://dream.kotra.or.kr>>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https://www.president.go.kr>>  
 대한민국 국방부 <<https://www.korea.kr>>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대한민국 외교부 <<https://www.mofa.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9597>>  
 동아시아연구원 EAI 스페셜리포트 <<https://www.eai.or.k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ttps://snuac.snu.ac.kr>>

- 여천NCC <<https://www.yncc.co.kr>>
- 주한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https://kr.usembassy.gov>>
- 중국 외교부 주대한민국대사관 <<http://kr.china-embassy.gov.cn>>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https://www.uniedu.go.kr>>
-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https://www.kinu.or.kr>>
- 한국개발원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
- 한국무역협회 통상 리포트 <<https://www.kita.net>>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포커스 <<https://www.kita.net>>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PERISCOPE <<https://kims.or.kr>>
-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
- FTA Korea <<https://www.fta.go.kr>>
- KF 아세안문화원 <<https://www.ach.or.kr>>
- KOTRA <<https://dream.kotra.or.kr>>
- Asian Clean Energy Forum <<https://asiacleanenergyforum.adb.org>>
- Atlantic Council <<https://www.atlanticcouncil.org>>
- Brookings <<https://www.brookings.edu>>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s://carnegieendowment.org>>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https://www.csis.org>>
- China Observer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https://chinaobservers.eu>>
- Commander, U.S. 7th Fleet <<https://www.c7f.navy.mil>>
- Congress.gov <<https://www.congress.gov>>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s://crsreports.congress.gov>>
- Counterpoint <<https://www.counterpointresearch.com>>
- East Asia Institute EAI MPDI Special Report <<https://www.files.ethz.ch>>

- ESCAP <<https://www.unescap.org>>
- Europa Kommissionen <<https://futurium.ec.europa.eu>>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https://www.fao.org>>
- Foreign Affairs <<https://foreignpolicy.com>>
- France Ministry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 <<https://www.diplomatie.gouv.fr>>
- Gallup <<https://news.gallup.com>>
-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https://www.swp-berlin.org>>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https://publications.iadb.org>>
- Inter-American Institute for Cooperation on Agriculture(IICA)  
<<https://repositorio.iica.int>>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https://www.iea.org>>
- Lowy Institute <<https://www.lowyinstitute.org>>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https://www.mofa.go.jp>>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fmprc.gov.cn>>
- New Zealand Foreign Affairs & Trade <<https://www.mfat.govt.nz>>
- North Korea News <<https://www.nknews.org>>
- Obama White House-National Archives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
-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https://www.orfonline.org>>
- OECD <<https://www.oecd.org>>
- POLITICO <<https://www.politico.com>>
- Project Syndicate <<https://www.project-syndicate.org>>
- Pusat Riset Politik <<https://politik.brin.go.id>>
- Rand <<https://www.rand.org>>

- Russia Matters <<https://www.russiamatters.org>>
-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https:// www.semiconductors.org](https://www.semiconductors.org)>
- Statista <<https://www.statista.com>>
- The Global Firepower <<https://www.globalfirepower.com>>
- The Henry L. Stimson Center <<https://www.stimson.org>>
-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https://www.trade.gov>>
-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https://www.piie.com>>
- The U.S. Department of State <<https://www.state.gov>>
-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https://u.ae>>
-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
- Trump White House–National Archives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
- UN <<https://www.un.org>>
- U.S. Department of Defense <<https://dod.defense.gov>>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s://home.treasury.gov>>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aritime Administration <<https://www.maritime.dot.gov>>
- US Department of State <<https://www.state.gov>>
- USNI News <<https://news.usni.org>>
- Vision 2030 <<https://www.vision2030.gov.sa>>
- Washington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https://www.wita.org>>
- World Bank database <<https://databank.worldbank.org>>
- World Vision <<https://www.worldvision.org>>
- Yusof Ishak Institute(ISEAS) <<https://www.iseas.edu.sg>>
- 百家号 <<https://baijiahao.baidu.com>>
- 中国国务院 <<https://www.gov.cn>>

- 中国国防部 <<http://www.mod.gov.cn>>  
中国外交部 <<https://www.mfa.gov.cn>> <<https://www.fmprc.gov.cn>>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http://exportcontrol.mofcom.gov.cn>>  
일본 외무성 <<https://www.mofa.go.jp>>  
일본 총리관저 <<https://www.kantei.go.jp>>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Европы <<https://upe-journal.ru>>  
ИМЭМО РАН <<https://www.imemo.ru>>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https://www.kp.ru>>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mid.ru>>  
Новостное агентство Sputnik <<https://sputnik-ossetia.ru>>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http://economy.gov.ru>>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http://archive.kremlin.ru>>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https://rg.ru>>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https://globalaffairs.ru>>

김민성. “담대한 구상 여건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열린토론회 발표자료. 2023.8.30.

## 약어 정리

(SEA)TAC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Southeast Asian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A2/AD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전략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IA	아시아 안심 법안(the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UKUS	오커스,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협의체(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U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
BRICS	브릭스,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경제국(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CEP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GGS	세계해상보안기관장관급회의(Coast Guard Global Summit)
CIS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STO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DFC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EEU/EAEU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U	유럽연합(European Union)
FDI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OIP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S	한미연합연습 프리덤 방패(Freedom Shield)
G7	선진 7개국(Group 7)
HACGAM	아시아해상보안기관장관급회의(Heads of Asian Coast Guard Agencies Meeting)
IAEA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oT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PEF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MDA	해상영역파악을 위한 인도태평양파트너십(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UU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대책
KADIZ	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SI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MDA	해양상황파악(Maritime Domain Awareness)
MSI	해양안보구상(Maritime Security Initiative)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CG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EO	비전투원후송작전(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NPCGF	북태평양해상보안포럼(North Pacific Coast Guard Forum)
NPO	국제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NPT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ODA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DI	태평양 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Quad	쿼드, (미국·일본·인도·호주)4자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RCE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SCO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ICAD	아프리카개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UNESCAP/ESCAP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VTs	해상교통관제센터(Vessel Traffic Service)
일·EU EPA	일·EU경제연대협정(Japan-EU Free Trade Agreement, EU-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 2021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 · 홍제환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2021-05 유네스코 공동재해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2021-07 평화 · 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근 외
2021-08 동아시아 평화 · 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윤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환 · 김석진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2021-15 KINU 통일외교조사 2021: 통일 · 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 · 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2021-19 북한의 성 · 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2021-20 북한의 성 · 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2021-21 평화의 인권 · 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중호 외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장철은 외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2021-31-01 평화공동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2021-02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황진태·백일순
2021-03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황태연
2021-04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이상신·이재원

〈Study Series〉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on Hwan Hong · 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 · Choon Geun Lee · 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202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2-01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이규창 외
2022-02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김석진·홍제환
2022-03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이지순·최선경
2022-04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최규빈 외
2022-05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나용우 외
2022-06 2022 접경지역주민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2-07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2-08 북한의 중산층	정은미 외

2022-09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태은 · 박동준
2022-10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황수환 · 권재범
2022-11 체제전한국 국가 · 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함의	현승수 외
2022-12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조한범 외
2022-13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 · 비핵 체제 모색	김상기 외
202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	이무철 외
2022-15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장철운 외
2022-16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정성윤 외
2022-17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 · 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도경옥 외
2022-18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 · 번영	이재영 외
2022-19 발전의 평화 · 인권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2-20 KINU 통일외식조사 2022	박주화 외
2022-21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황진태 외
2022-22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하 외
2022-2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최지영 외
2022-24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홍 민
2022-25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구상: 해외 사례와 시사점	홍재환 외
2022-26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김갑식 외
2022-27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박영자 외
2022-28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홍 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2-01 중국 20차 당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전병근 외
2022-02 동아시아 다중 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박은주
2022-03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별 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22-04 윤석열 정부의 통일 · 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한동호 외
2022-05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홍 민 외

〈Study Series〉

2022-01 An Assessment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un Regime	Hyeong-Jung Park et al.
2022-02 The Cultural Meaning of North Korea's National Symbols and Its Branding Strategy	Ji Sun Yee et al.
2022-03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Order and a New Korean Peninsula System	Eun Joo Park et al.

2022-04 The Arms Race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Cheol-wun Jang et al.

2022-05 Exploring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Formation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Ji Young Choi et al.

**2023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3-01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황진태
2023-02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통해 본 북한 경제발전 전망과 과제	김석진
2023-03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3-04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3-05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	김갑식 외
2023-06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장철운 외
2023-07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SDGs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23-08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이무철 외
2023-09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	현승수 외
2023-10	KINU 통일외식조사 2023	이상신 외
2023-11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	나용우 외
2023-12	2023 접경지역 남북협력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3-13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역량 접근과 공동 성과	최규빈 외
2023-14	김정은 시대 뉴미디어 대외선전 실태와 전략	이지순 외
2023-15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이재영 외
2023-16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이해와 전망	정성윤·김민성
2023-17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최지영 외
2023-18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정은미·박희진
2023-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조정아 외
2023-20	북한 주민의 직장 생활	박형중 외
2023-21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조정아 외
2023-22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박영자 외
2023-23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이기태 외
2023-24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황수환 외
2023-25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황태연 외
2023-26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홍 민 외
2023-27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홍 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3-0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통일방안	오경섭 외
2023-02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향	정성윤 외
2023-03	남북 체제비교와 성과 연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동호 외
2023-04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이재영 외

〈Study Series〉

2023-01	The Changes in North Korea's Fiscal and Financial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Ji Young Choi et al.
2023-02	North Korea's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to North Korea Soo-hwan Hwang et al.
2023-03	The Challenge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ng-Yoon Chung et al.
2023-04	North Korea's Official Markets in 2022 Min Hong et al.
2023-05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Implementing Government Tasks Dong-ho Han

KINU Insight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2022-01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홍제환 외
2022-02	2022 북핵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정성윤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북한인권백서 2022	이우태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이우태 외
북한인권백서 2023	이우태 외

## 연례정세보고서

---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2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3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 정기간행물

---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1 (2021)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2 (2021)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1 (2022)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2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2 (2022)
-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1 (2023)
-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2 (2023)

## 기타

---

- |      |   |            |
|------|---|------------|
| 2021 |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 서보혁·용혜민 엮음 |
| 2022 | 2022 KINU 북한도시포럼 발표집: 「육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 홍민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

